
II. 분야별 이슈 분석

1. 정치 분야

2. 경제 분야

3. 사회·문화 분야

4. 해외·대남 분야

5. 군사 분야

1. 정치 분야

〈 1 〉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분석

〈 2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분석

〈 3 〉 2019년 북한 개정 헌법 분석

〈 4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분석

〈 5 〉 2019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 분석

1 정치 분야

< 1 >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분석

□ 개요

- 2019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 발표를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경제 분야 등에 대한 한 해의 정책 방향 제시

<사진 II -1> 신년사를 육성 발표하는 김정은 위원장



자료: 『로동신문』, 2019.1.1.

- 남한에 대해서는 2018년 남북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단’을 요구
- 미국에 대해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
- 군사 분야에서는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
- 경제 분야에서는 자립경제 강화를 토대로 ‘경제적 공간’ 활용,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산업정책 등을 제시
-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충성심을 요구. 그리고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특별히 강조

□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분야

- 2018년 남북관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
 - “놀라운 변화”,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

- 2019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천명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구호 제시
 -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 남북 군사적 대결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 천명
 -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
 -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과 남북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계 개선 추진 필요성 강조
 - “은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전제조건이나 대가없는 재개 용의 천명
 -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모색 필요성 언급

-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요구
 -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

- 2018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긍정 평가
 - “역사적인 첫 조미수뇌[북미정상]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북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

- 비핵화 의지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수용 의지 천명
 - “6.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

-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중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
-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미국의 일방적 강요 압박 시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 천명

- “다만 미국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 군사 분야

○ 국방공업의 주체화 강조, 재래식 무기와 장비 현대화·첨단화 통한 군사력 증강 가속화 및 무기수출 확대 의지 표출

- 북한에서 ‘주체무기’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016년 2월 27일로, 당시 김정은은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에 대해 “경량화가 실현되어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을 기습타격할 수 있으며, 정밀성과 놀랄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체무기”라고 언급
- 주체무기 또는 국방공업의 주체화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지칭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를 의미
- 최근 북한이 개발하는 신형 방사포, 각종 단거리 미사일, 대전차 유도무기, 무인기 등은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를 통한 현대화·첨단화 가속화
- 이와 같은 국방공업의 주체화를 가속하여 그동안 약화되었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 언급과 남북한 군비통제 확대 제안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요구

-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미 부여와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표현
- 북한의 군비통제 적극성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확대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 차단 및 국제사회 경제제재 해제 분위기 조성 의도

○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 차단, 정권안전

보장 추구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 제안
 -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
 - 평화체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군사적 위협 해소, 군비통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

□ 경제 분야

- 2018년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 로 평가
 -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
 - 대내적으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
 -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전환
- 2018년 자립경제 토대 강화와 전력, 농업 등의 부문에서의 성과 제시
 -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 전력·금속·화학 부문에 대해서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추진” 되었다고 언급
 - 농업 부문에서는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악착스럽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다.” 고 언급
- 2019년 국정지침으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제시
- 2019년 과제로 자립경제 강화를 토대로 경제적 공간 활용, 인재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산업정책 등을 제시
 - 【경제적 공간】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제와 사업체제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인재와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합니다.”

- 【산업정책】 전력, 비료, 식량을 비롯한 인민소비품 증산 및 관광 분야의 대건설 사업 등을 강조

- 【전력】 “올해 …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 【화학】 “린비료[인산 비료]공장 건설과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 올해에 화학비료공장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 【농업】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 닭공장[양계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 【경공업】 “경공업 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제고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 【건설/관광】 “올해에도 …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합니다. …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건설공법들을 계속 혁신하고 마감건축의 국산화와 질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 세멘트[시멘트]를 비롯한 건축재생산능력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의 전환에 따른 구체적 실행의 모습을 과시

-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 ‘경제관리’ 를 우선 언급하며 중요성 강조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 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 닭공장[양계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

○ 자력갱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 제시

- 【전력】 2019년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로 전력 증산 제시
- 【농업】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 부문의 문제를 ‘포전담당책임제’ 하의 개인의 노력 및 비료 증산 등을 통해 해소 강조
- 【건설】 관광 관련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통해, 경제개방을 준비하는 한편 제재 하에서도 건설 경기를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 사회문화와 기타 분야

○ 신년사에서 2019년에 처음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를 공식 언급

- ‘우리 국가제일주의’ 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리는 것” 으로 규정
- 1월 중순 이후 한동안 『로동신문』에서 거의 매일 ‘우리 국가제일주의’ 의 의미를 소개하고 강조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념화 시도

○ 사회분야에서 가장 비중 높게 언급한 분야는 교육

-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 고 무기” 가 바로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서, “세계적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는 교수 내용과 방법 혁신” 을 강조
 - 이를 위해서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 발전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낼” 것을 강조
- 과학화,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교육부문을 특별히 강조

○ 삼지연군 개발 사업 박차 촉구

- 삼지연군은 북한에서 ‘혁명의 최고성지’ 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음
- 2017년 ‘강원도 정신’ 을 강조한 것처럼 평양 이외의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사례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삼지연군 개발을 강조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검열 강화
 - 당 간부의 인민을 위한 봉사정신 강조, 사회주의문명 건설, 비사회주의 바람에 대한 검열 강화 등을 요구
-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 확립 강조
 - “온 사회의 혁명적 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야 한다고 강조
 - “우리 사회를 덕과 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겠다.”, “화목한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언급
- 산림복구를 비롯한 환경문제 강조
 -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예방 강조
 - ‘녹색 에너지[에너지]’ 를 비롯하여 친환경 산업 관심 촉구

□ 영향

-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천명한 내용들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체로 반영되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남한의 미국 첨단무기 도입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 로 끝나자 남북대화도 사실상 거부
-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발사하면서 국방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줌
- 경제 발전 혹은 경제 개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태’ 를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도덕기풍 확립으로 차단하고, 검열 강화와 선전선동 학습을 통해 경제개방과 사회주의 질서 유지를 병행하겠다는 의도 과시

〈용어해설〉 경제적 공간

- ‘경제적 공간’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경제적 공간입니다. 경제적 공간을 이용하는 데서 …”
- ‘경제적 공간’은 크게 ①사회주의 본성과 관련된 공간(계획공간), ②과도적 특성과 관련 공간(노동보수공간: 생활비, 상금, 장려금 등의 분배법칙 적용), 가치공간(원가, 이윤, 가격 등의 가치법칙 적용)으로 구분됨
- 김정일이 ‘경제적 공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장개혁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①사회주의 본성과 관련된 공간(계획공간)을 기반으로 하되 ②과도적 특성과 관련 공간(노동보수공간과 가치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노동보수공간 활용: “현시기 노동보수공간을 이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노동보수공간을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노동보수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상금과 장려금이다. 상금과 장려금은 기업체들에서 일을 잘하여 초과이윤이 생기었을 경우에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거기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노동보수형태이다.”
- 가치공간 활용: “현시기 가치공간을 이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리윤과 수익성을 경제적 실리보장과 경영활동평가의 중요지표로 이용하는 것이다. … 또한 국가적으로 화폐유통법칙의 요구에 맞게 화폐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고 통화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화폐공간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화폐의 회전속도를 높이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줄이고 화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은 통화안정을 보장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유통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저금(예금)과 전자카드의 리용을 널리 장려하여 은행신용을 담보하고 화폐 이용에서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금융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렬병호,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의 리용”,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 2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분석

□ 개요

- 북한은 2019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1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함
- 김정은이 이 시점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수정된 대남·대미 정책을 대내외에 발표하고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음
 - 과거에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지만 김일성은 여러 차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
 -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는 신년사에서 표명했던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 및 ‘중재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천명됨
 -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을 가지고 나오면 연말까지 한번은 더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 전환을 요구
 -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대치가 장기성을 띠게 됨에 따라 대북 제재의 완화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자력갱생을 힘주어 강조

<사진 II -2>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



자료: 『로동신문』, 2019.4.13.

□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 관련

-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2북미공동성명에 대한 긍정 평가
 -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

-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결렬에 대한 불만 표출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이 내린 비핵화 협상과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시험 발사 중단이라는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회의감 표명
 -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 의심
 -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에는 변함없음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자신의 대미 발언을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
 -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건 제시와 연내 3차 정상회담 의사 표명
 -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포기하고 북미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
 -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
 -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
 -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

- 김정은은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유엔의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맞바꾸려 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자신의 제안이 오히려 미국에게 북한이 제재 해제에 연연하고 있다는 약점만 노출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 해제 문제를 공개적

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협상전략의 수정 시사

- “적대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

□ 남북관계 분야

○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

- 남한 ‘보수세력’ 이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은 남한당국에 《속도조절》을 강박하며 남북합의 이행을 미국의 대북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분석
- 이상의 이유들로 남북관계가 긴장완화의 지속이나, 아니면 파국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 남한당국에 2018년 맺어진 남북선언들의 철저한 이행 촉구
 -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 상봉과 9월 평양 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 ‘외세의존 정책’의 포기와 남북관계 우선 요구
 -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 사대적 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 “남조선당국은 …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시 남북관계 진전 불가 입장 천명

-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변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

○ 신년사에서 보여준 희망과 기대에 찬 남북관계에 대한 어조가 4개월 만에 실망감과 남한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변화

□ 경제 분야

- 제재 상황 지속 및 북미 적대관계 장기화 예상
 - “미국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 해제 조건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 대북 제재 장기화에 자력갱생 강화로 대응
 -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킬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밟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제재 극복을 위해 자립경제적 토대, 과학기술역량, 영웅적 인민의 창조적 힘 강조
 - “우리에게는 최단기간 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에도 도약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자립경제 토대와 능력 있는 과학기술역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 인민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 2019년 신년사의 내용을 토대로 자력갱생의 강화 방안 제시
 -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의 기본 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 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고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부문별 과제 제시
 -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계획화 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 고리들인 가격, 재정, 금융 문제를 경제 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 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 3 > 2019년 북한 개정 헌법 분석

□ 개요

- 북한은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 한데 이어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을 개정
- 북한은 4월에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
 - 그리고 8월에 헌법을 재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권한 부여
 - 북한이 4월에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새롭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정은은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명의로 군대 시찰
 -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도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처럼 ‘정령’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음
 - 북한은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권위를 대외적으로 더욱 높이고 국가기구에 대한 지도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19년 4월 개정헌법에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전략, 특히 2016년 제7차 당대회에 제시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대거 반영
 - 그 결과 2016년 6월에 개정헌법에서 경제 관련 조항이 크게 바뀜
 -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김일성이 1961년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개별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로 대체
 - 그리고 헌법에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노동당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내각의 역할 강화
 - 김정은 시대에 추진된 핵심 정책들이 헌법에 명문화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북한의 국가발전전략 목표와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치 분야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대표’ 지위 강화
 - 2019년 헌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하

는 직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그런데 2019년 4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
- 2019년 4월 헌법 개정 이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섰음
- 따라서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기 보다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실제적인 국가 대표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
-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민주주의국가들과의 국가 대 국가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 대표’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음
- 그러나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국가 대 국가’ 정상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 대표’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19년 8월 다시 헌법을 개정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대표하며’가 ‘대표하여’로 바뀜]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라고 수정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한
- 이후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과거 김일성 주석처럼 제3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활발하게 축전과 답전을 보냄. 그러나 김일성과는 다르게 북한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을 접견하지는 않음
- 반면에 최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계속 외국 국가수반에게 축전과 조전을 보내고 북한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들을 만남. 그리고 지난 10월 하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북한을 대표해 참석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 겸직 불가 조항 추가

- 북한은 2019년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 및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제101조)을 추가
- 그런데 이미 동년 3월 10일에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의 조부 김일성 및 부친 김정일과 다르게 대의원 선거에 불출마
-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직을 맡지 않음
- 따라서 북한의 8월 헌법 개정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직을 맡지 않기로 한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다른 대의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명문화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적 권한 확대

- 북한은 8월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 하는 권한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 하는 권한 부여
-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 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1972년 헌법이 공화국 주석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
- 그러므로 8월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이 김일성 시대 ‘공화국 주석’의 임무 및 권한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런데 ‘공화국 주석’ 직을 신설한 1972년 헌법에서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하는 권한은 공화국 주석이 아니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었음
- 그리고 2019년 4월 개정 헌법도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 하는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부여
- 북한이 동년 8월에 헌법 재개정을 통해 1972년 헌법도 공화국 주석에게 부여하지 않았던 ‘외교대표(대사와 공사)의 임명 및 소환’ 권한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의 임명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군사 분야 직책 변경

- 2016년 개정헌법의 102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고 규정했음. 그러나 2019년 헌법 개정 이전까지 군대에 대한 지휘는 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이루어졌음
- 2019년 4월 개정 헌법 제102조 그리고 동년 8월 개정 헌법 제103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고 규정함. 그런데 북한 언론매체는 4월 헌법 개정 이후에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을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이 아니라 이전 헌법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규정한 것과 유사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명의로 부름
- 이는 김정은이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직을 겸직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있음을 시사함.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

명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라고 부르면서 노동당 위원장 직을 당의 최고직책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을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을 군대의 최고직책으로 표현함

- 북한 당 규약에 의하면 노동당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정은의 당 최고직책으로 노동당 위원장직만을 주로 언급.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을 겸직하게 되어 있다면 평소에도 김정은의 주요 직책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직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은 동일한 직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구별되는 직책. 북한은 2019년 4월 이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을 군대의 최고직책으로 내세웠는데, 이후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을 군대의 최고직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김정은이 2018년에 비로소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과거보다 ‘공화국’ (국가기구)의 역할을 더 중시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과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직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직은 여전히 군대의 최고직책이 아니라 국가보위성,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등 국가무력과 민간무력을 지휘하는 직책으로 분석됨
-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상뿐만 아니라 군령권을 가진 총참모장과 작전총국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2019년 4월 헌법 개정 이후에도 군령권을 가진 총참모장과 작전총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지고는 북한군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 직을 가지고는 북한군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없음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상 군사 지위 변경과 관련 없이 주요 군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단행

○ 국무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의 명목상 강화

- 북한은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고 규정
- 지난 4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고 규정했는데 8월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정령’ 의 집행행정 감독 권한 추가
- 2016년 6월 개정 헌법과 2019년 4월 개정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회에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정령’ 발표 권한을 부여
- 그런데 2019년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도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 위원회처럼 ‘정령’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런데 8월 개정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도 ‘정령’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계속 발표됨
 - 그러므로 국무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채택 권한을 전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령’의 채택에만 선택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됨
 - 8월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에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권한도 부여하였는데 원래 이 같은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음
 -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위원회 회의에서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철을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전학철동지를 석탄공업상으로, 전명식을 문화상으로, 김승진을 국가과학원 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이 국무위원회에 부여한 내각 간부 임명 권한이 무시됨
-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 신설 명문화
- 8월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 (강조는 필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 신설을 명문화
 - 그런데 이미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선출했으므로 이 같은 규정은 사후적으로 이 직책의 신설을 법적으로 정당화
- 특징 및 평가
- 북한은 2019년에 헌법을 두 차례나 개정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정 전반, 특히 외교 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여 의지를 보여주었음
 - 과거에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자신의 통치방식으로 채택하면서 기본적으로 당과 군대를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반면에 김정은은 현재 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통치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은 8월의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도 더욱 확고히 보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8월의 헌법 개정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3월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과 4월의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신설 직책에 선출된 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 이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헌법 조문과 실제 간의 괴리를 좁히려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가능

□ 경제 분야

○ 세계경제 흐름을 반영한 국가경제발전 목표와 방안 제시

-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자립적 발전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선진 경제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
- 구체적으로, 세계경제의 발전추세에 맞게 경제 구조를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의 자기완결성이 높은 자립경제 실현을 지향
 - ※ ‘지식경제’란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과 지식의 축적 및 그 활용에 의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를 의미
- 경제건설의 전략적 방침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통한 모든 생산단위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시키는 것
-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18년 4월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한 후 인재와 과학기술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강조

○ 과학기술중시 노선 및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 반영

-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
-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은 김정일 시대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이어받아 김정은 시대에도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데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목표로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제시
 - ※ ‘과학기술강국’이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으로 올라선 나라이자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를 의미
- 특히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서 인민생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추동력으로 그 위상과 역할 강화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

○ 지식경제의 반영

- 헌법에 지식경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를 구현하는 핵심 방안인

경제의 “정보화”(제26조)를 추가하고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을 “집체적 지혜와 힘”(제33조)으로 수정

※ ‘정보화’란 ‘생산과 경영 전반에서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지능화·무인화를 실현하는 통합생산체제와 유연생산체제 확립을 통해 실현

-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목표는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으며 북한 경제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로 헌법에 명시

○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주체와 방안 명시

- 국가 차원의 경제관리 주체로서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새롭게 밝힘(33조)

- 경제관리방식의 핵심이었던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업지도체제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체(제33조)

※ 대안의 사업체제란 1961년 김일성이 제안한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관리 형태로 이후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원형으로 제시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개별 생산단위에 실제적 경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생산단위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대폭 강화한 제도로서 이를 토대로 기업소법 등 관련 법률들이 이미 제·개정

○ 경제활동에서 경제성 원칙의 명문화

- 김정일 시대부터 강조해왔던 경제활동에서의 ‘실리 보장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제32조)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로 개별 생산단위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실리 보장 원칙은 경제활동에서 의사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됨

○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 방향 제시

- 대외무역에서 ‘신용’의 준수 및 ‘무역구조 개선’을 추가하고 기존의 ‘대외무역의 발전’을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으로 수정(36조)

- 최근 북한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외경제확대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수출무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류, 합영·합작과 특수경제지대 발전을 제시

- 무역의 확대 발전을 위해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엄격한 규율 확립을 통해 수출무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품 수출과 기술 무역과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역구조를 개선할 것을 강조해왔던 내용이 헌법에 반영

○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역할 강조

- 과학기술을 경제건설의 핵심요소로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 역할”을 높이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주요 내용이 헌법에 반영(제27조)
-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통해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 채택한 전략적 노선인 ‘사회주의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서 강조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인재와 과학기술을 헌법에 명기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

- 국가의 핵심 전략적 자원인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 전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관건
 - 북한은 기존의 3대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 중 하나인 문화혁명의 목표로 제시했던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로 수정(제40조)하여 과학기술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새 세기 교육혁명’의 내용들이 헌법에 반영
 - 교육 목표로 기존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에서 “과학기술인재” 양성으로 수정하고 양성 방안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의 부단한 개선”을 명기(제46조)
-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헌법 조항으로 새롭게 추가(제50조)

<표 II -1> 북한의 2016년과 2019년 개정 헌법 조문 비교

구분	2016년 9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u>사상과 령도를 구현한</u>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u>수령</u> 김일성 동지와 <u>위대한 령도자</u> 김정일 동지의 <u>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u>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 김일성에 대해 ‘위대한 수령’, 김정일에 대해서는 ‘위대한 령도자’ 호칭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u>자주시대의 지도사상</u>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u>굳건히 옹호고수</u>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명맥을 <u>굳건히</u> 이어놓으시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위대한 령도자</u> 김정일 동지께서는 <u>위대한 수령</u>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u>주체사상</u>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u>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u>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u>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u>를 창조하시였으며 <u>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u>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명맥을 <u>굳건히</u> 이어놓으시였다. ※ ‘선군사상’에 대한 언급 삭제

구분	2010년 6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현재 김정은에 대해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이 같은 언급 삭제</i>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u>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u> 이시다.
제1장 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u> <i>※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김정은이 정식화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u>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u>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u>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u>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국가는 <u>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국가는 <u>균중로선을 구현하여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혁명적 사업방법을 견지한다.</u> <i>※ 김일성이 제시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에 대한 참조 삭제</i>
제2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국가는 <u>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국가는 <u>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u>

구분	2019년 6월 개경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경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는 공산주의의 이념적 목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실리 보장’ 원칙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김일성이 제시한 ‘대안의 사업체계’ 에 대한 참조를 삭제하고 내각의 역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대외무역에서 ‘신용’ 을 강조하고 ‘대외무역’ 보다 폭넓은 ‘대외경제관계’ 발전 의지 표명
제3장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며 주체

구분	2010년 6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p>항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제5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p><u>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u>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u>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u>, 지덕체를 갖춘 <u>사회주의건설의 역군</u>으로 키운다. ※ ‘혁명가’ 라는 용어를 ‘애국자’ 로 대체 ·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u>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u> 유능한 <u>과학기술인재</u>들을 키워낸다. ·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u>대학생들에게는</u> 장학금을 준다. ·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u>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u>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 (제5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u>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u>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의를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u>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u> 근로인민의 리의를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선군혁명노선’ 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김정은과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무장력의 절대 충성을 헌법에 명시 · (제60조) 국가는 <u>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u>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인민’ 을 ‘인민군장병’ 보다 앞세움

구분	2010년 6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신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반영
제6장 국가 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 신설 및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신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 대표' 지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에 선출되지 않은 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특별한 지위 강조 < 신 설 > * 이하 1조씩 조문 번호 변경 	

구분	2010년 6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3절 국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u>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u> 4.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u>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u>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8.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9.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p>※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 공포’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 하는 권한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p>※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 신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p> ·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u>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u>

구분	2016년 6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2019년 8월 개정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p>※ 국무위원회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정령’ 발표와 내각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권한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p>※ 국무위원회의 ‘정령’ 발표 권한을 명문화</p>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직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p>※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권한과 ‘외국 주재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결정’ 권한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p>※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 권한을 상대적으로 축소</p>

자료: 북한의 2016년 6월 개정 헌법과 2019년 4월 및 8월 개정 헌법

주: 통일부에서 작성한 2016년 6월 개정 헌법과 2019년 4월 개정 헌법 비교표를 보완해 작성

< 4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분석

□ 개요

- 북한은 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3월 12일 임기 5년의 687명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발표

- 김정은 위원장의 대의원 불출마와 외교와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의 대의원 진출이 주요 특징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진행과정과 결과는 과학기술과 경제, 외교, 교육을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여주었음
 -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은 명예직 성격이 강하지만, 대의원 진출 여부를 통해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기존 엘리트의 퇴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신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들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4월에 제1부상으로 승진), 중국통인 김성남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 등을 들 수 있음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명단에서 고령의 간부들(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최영림, 최태복, 리용무, 오극렬 등)이 대거 제외됨으로써 국가기구에서의 세대교체도 거의 완료
 - 제13기에 비해 대의원으로 선출된 군부 인사들은 20명 정도 줄어들은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에 군수공업 분야의 대표적 인물들(태종수, 리병철, 홍승무 등)은 대부분 유입되거나 충원됨

□ 진행 과정

-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와 과학기술·경제·교육 강조
 - 북한에서 주민들은 거주지별로 투표를 하지만, 최고지도자와 핵심 간부들은 거주지와 관련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대의원에게 투표를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이 현재 어떠한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줌
 - 2019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은 제10호구 제40호분구 선거장(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홍서헌 김책공대 총장에게 투표하면서 홍 총장에게 “나라의 과학 교육과 경제 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 (김책공대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
 - 2014년 3월에 김정은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제105호구(태백산선거구) 제43호 분구 선거장에서 인민군 제855군부대 부대장 김광혁에게 투표하면서 당성이 강하고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인민군대의 정치일군 양성을 강조했다. 이후 김광혁은 2016년 12월에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으로 승진
 - 2019년 3월에는 김 위원장의 투표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동행하여 군부와 관련된 인사들은 수행자 명단에서 배제됨
 - 2014년 3월에는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차수 최룡해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인 김경옥 동지, 황병서 동지, 김여정 동지가 동행했다.” 고 보도해 김여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부 관련 인사들이 동행

<사진 II -3>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김정은 위원장



자료: 『로동신문』, 2019.3.11.

○ 북한 핵심 간부들의 대의원 투표 특징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지배인 오영재에게,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은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에게, 박봉주 내각 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1 내화물직장 소성작업반 반장 리정철에게 투표
- 그리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곡산공장 지배인 박형렬에게,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서헌에게, 김평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에게, 안정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기초식품공장 지배인 리근일에게,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교원대학 학장 박금희에게,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정보통신국 국장 리성준에게, 리용호 외무상은 평양건설기계공장 지배인 림동훈에게 투표
- 선거 투표에서도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을 중시하는 북한의 새로운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의원 불출마

-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과 국가, 군대의 핵심직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적 성격이 강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직을 굳이 겸직할 필요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그가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사망 때까지 제1기에서 9기까지 대의원에 당선되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이던 1982년 제7기 대의원에 당선된 후 2011년 사망 때까지 제12기 대의원을 역임
- 2014년에만 해도 북한은 선거 실시 한 달 전인 2월 초부터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들에서 김정은을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는 행사를 개최했음. 반면에 2019년에는 그와 같은 행사가 일체 진행되지 않았음.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베이징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월 말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집중하면서 대의원 후보 출마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 선거 결과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교체 비율

- 제13기 대의원 중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물들은 약 50%임. 제12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사들의 55%가 제13기 대의원 선거에서 탈락했으므로 이 같은 비중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님.

<표 II -2> 기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인원 교체 비율

구분	제14기	제13기
선거일	'19.3.10	'14.3.9
대의원 수	687명	687명
前期 대비 교체율	약 50%	약 55%
투표율	99.99%	99.85%
찬성률	100%	100%

자료: 통일부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당선자 분석

-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외교 분야의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중국통인 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4월에 제1부상으로 승진), 박광호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김능오 평양시당위원장, 리일환·최동명 당중앙위원회 부장, 장룡식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직에 선출되어 온 전례에 비추어볼 때, 리수용·리용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의 대의원 진출은 당연한 결과
-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고향인 만경대구역의 선거구 중 하나인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돼 ‘백두혈통’임을 과시. 이 선거구에서 2009년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4년 제13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혁명 유자녀’ 교육기관인 평양 만경대혁명학원의 오룡택 원장이 당선
- 리용호 외무상은 2014년 선거 당시 외무성 부상이었지만 대의원으로 추천받지 못했음. 그런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당시 리용호와 같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대의원에 당선되어 최선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높은 신임 확인
- 외교 분야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의원에 당선되었고,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도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제633호 선거구에서 재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제14기 대의원에 당선
- 대남 분야에서는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2018년 11월 방남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국통일연구원장이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의원에 당선. 남북 종교교류 등에 관여해 온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은 2014년에 이어 2019년에 대의원에 재선되었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의원에 당선
- 제13기에 비해 군부 인사들의 대의원 선출은 2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군수공업 분야의 대표적 인물들(태종수, 리병철, 홍승무 등)은 대부분 유임되거나 충원됨

○ 대의원직에 재선된 주요 인물

- 고령의 간부들 중 김영남, 김기남, 양형섭, 안동춘도 재선출되었음
-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 회의 개최시까지 과도기적으로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재선출된 것으로 분석됨
- 김기남 전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은 선전선동부의 ‘고문’으로서 예우차원에서 대의원직을 맡게 된 것으로 분석됨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명단 제외 인물 분석

-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수행 인물 중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승일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은 대의원에 당선되지 못함
- ※ 국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제100호 강철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제100호 선거구에서 당선된 인물은 김

창선이 아니라 김창건임

- 인민군 총정치국장직까지 올랐다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으로 좌천된 황병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에도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위상 하락이 재확인됨. 이후 황병서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됨
- 조용원, 현송월, 김창선, 김철규는 대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지만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자주 동행
- 고령의 간부들 중 최태복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최영림 전 내각 총리, 광범기 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되어 완전히 은퇴한 것으로 분석됨
-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도 2009년과 2014년에는 대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이번에는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됨
- 이처럼 제14기 대의원 명단에서 고령의 간부들이 대거 제외됨으로써 국가기구 상층부에서의 세대교체가 거의 완료

< 5 > 2019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 분석

□ 개요

- 2019년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에 큰 변화 발생
 - 그때까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고 외무성 간부들(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
- 2019년 3월 10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4월 10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4월 11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
- 항일빨치산 2세의 대표주자인 최룡해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부장을 리만건에게 넘겨주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책으로 옮김으로써 명예와 영향력 모두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
- 2019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김 위원장이 동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및 제재 정면돌파 노선을 선언하면서 외교 엘리트의 위상은 다시 하락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과위 엘리트** 변동은 외교 엘리트의 위상 강화 후 하락, 경제와 여성 엘리트의 부상, 군부의 위상 약화, 군수공업 분야 엘리트의 견고한 위상 유지 등으로 특징지어짐
 - ※ ‘과위 엘리트’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을 의미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무국의 확대 개편 및 내각 엘리트의 위상 강화

- 북한은 지난 4월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당과 국가기구의 지도부를 대폭 개편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는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소환됨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에서는 양형섭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소환됨. 리명수 인민군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도 정치국 위원직에서 소환된 것으로 분석됨
 - 신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는 김재룡 내각 총리 내정자, 리만건 당중앙위원회 조직 담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최취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부위원장,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농업 담당 부위원장,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보선됨
 - 이 중 김재룡과 태형철은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진입했고, 리만건, 최취, 김수길, 박태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
 - 그런데 리영길 당시 총참모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후보위원직을 유지함으로써 군부의 위상 약화가 확인됨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덕훈 내각 부총리, 리룡남 내각 부총리, 박정남 강원도당위원장, 리히용 함경북도당위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이 보선됨
 - 그 결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수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많은 34명으로 늘어남

<사진 II -4>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보선된 정치국 구성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의 공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보선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세 봉총지	조유원총지
리만건총지	김덕훈총지
최 휘총지	비룡남총지
박태익총지	박성남총지
김수길총지	키치우총지
태형철총지	조춘봉총지
정경태총지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자료: 『로동신문』, 2019.4.11.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인사에서 특기할 점 하나는 박봉주가 바로 다음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내각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
 - 이는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주도해온 박봉주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신임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박봉주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새로 맡아 김정은의 경제정책 결정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게 되었음

- 리만건 신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의 부상과 조직지도부 인사도 주목할 부분임
 - 리만건 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직도 겸직하게 되어 새로운 실세로 부상
 -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자주 수행해온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선출되어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 지위를 더욱 굳히게 되었음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제1부부장도 황병서에서 김조국으로 교체된 것으로 분석됨. 김조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도 보선되어 새로운 실세로 부상

- 내각 엘리트의 당내 위상 강화도 당 지도부 개편의 매우 중요한 특징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내각 엘리트의 숫자가 4명에서 6명으로 증가
- 박봉주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됨으로써 김정은의 정책결정을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구성원은 역대 가장 많은 13명으로 늘어나고 정무국에서 경제 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졌음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 최룡해에서 리만건으로 바뀔에 따라 정무국에서 최룡해가 소환되고 리만건이 새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장금철과 김동일이 새로 당중앙위원회 부장직에 임명됨
 - 장금철은 김영철이 맡고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직에 임명됨
 -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동행하지 않았지만 장금철 통전부장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함께 모습을 드러냄
 -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직을 맡고 있다가 황해남도당위원장직에 임명된 리철만의 후임으로 김동일은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분석됨
- 최고군사정책결정기관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재룡 내각 총리, 리만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태종수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김조국 당중앙위원회 군사 담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보선되었음
 - 내각 총리에 임명된 김재룡 전 자강도당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도 선출되어 군사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후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민군 총참모장,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인민무력성 제1부상과 경찰총국장이 들어가 있어 북한군을 지휘하기에 보다 적절하게 구성됨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의 국가기구 지도부 세대 교체 완료
 - 북한은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내각 총리를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교체하는 등 큰 폭의 국가기구 지도부 개편을 단행
 - 이번 국가기구 지도부 개편은 국무위원회와 외교 라인 및 내각 엘리트의 위상 강화, 국가 지도부 세대교체의 진전 등으로 특징지어짐

-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당시 만 89세의 최태복에서 만 64세의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바뀌므로써 나이가 25세나 젊어짐
-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의 나이도 당시 만 80세의 박봉주 전 내각 총리보다는 훨씬 젊은 것으로 판단됨

<사진 II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호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래형주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 동지

자료: 『로동신문』, 2019.4.12.

- 4월 12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이례적으로 내각의 총리와 부총리 및 상(장관)들까지 프로필 사진을 공개
 - 이는 내각 엘리트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초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반영

<사진 II -7> 내각총리, 부총리, 상들



자료: 『로동신문』, 2019.04.12.

- 북한은 지난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82세의 김영대 전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하고 53세로 추정되는 박용일 신임 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선 - 이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핵심 간부들의 세대교체를 완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분석

- 북한은 지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무국의 간부들 상당수를 교체
- 당중앙위원회 제1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파워 엘리트 변동은 세대 교체의 진전, 군수공업 분야 전문가의 부상, 전통적 군 지휘관들의 위상 제한, 북한 외교에서 유럽통의 몰락과 러시아통의 부상 등으로 특징지어짐

<사진 II -8>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선출/보선된 정치국 구성원

정 치 국 위 원



정 치 국 후 보 위 원



자료: 『로동신문』, 2020.1.1.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고령의 간부들 상당수가 퇴진하고 1960년대 생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는 등 세대교체의 진전이 이루어짐
 - 당시 만 70세의 박광호(1949년생)가 맡고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직에 만 59세의 리일환(1960년생) 전 근로단체부장을 임명
 - 당시 만 83세의 태종수(1936년생)가 맡았던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직에는 만 71세의 리병철(1948년생) 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임명
 - 당시 만 84세의 리수용(1935년생)이 맡았던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직에는 만 71세의 김형준(1948년생) 전 러시아 주재 대사를 임명
 - 당시 만 71세의 안정수(1948년생)가 맡았던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직에는 만 58세의 김덕훈(1961년생) 내각 부총리를 임명(추정)
 - 당시 만 69세의 로두철(1950년생)이 맡고 있었던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직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김일철 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
- 전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으로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해온 리병철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의 승격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임명은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김정운의 강력한 의지와 리병철에 대한 신임을 반영
 - 리병철은 전임자인 태종수보다 미사일 분야에 대해 훨씬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9년에 총참모장직에 임명된 박정천과 인민무력상에 임명된 김정관 전 인민무력성 부상 모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에 선출되지 못하고 후보위원직

에 선출되어 전통적인 군부의 위상 강화는 한계를 보임

- 김정관은 과거에 김정은의 려명거리 건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 현 지지도 등에 자주 동행했으며, 2016년 4월에는 려명거리건설 착공식에서 착공사를 하는 등 주로 군인들을 동원해 건설을 진행하는 역할을 많이 맡은 인물

○ 북한 외교에서 유럽통의 몰락과 러시아통의 부상도 주목할 부분임

- 스위스 주재 대사를 지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직과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낸 리용호 외무상 모두 해임됨
- 중동 지역과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김형준의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직 임명은 전통적인 우호국가인 러시아 및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정치외교적 공세’ 방침을 반영
- 신임 외무상으로는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됨

○ 김여정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직 재임명도 주목할 부분

- 이와 관련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직을 맡고 있다가 새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김여정을 새로운 소속 공개 없이 제1부부장직 임명 사실만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김여정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강등되었다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직에 재임명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있음

<표 II -3> 제7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의 변화

	제7차 당대회 (2016.5.9)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2017.10.7)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2019.4.10)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019.12.28-31)
상무위원 겸 위원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위원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광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	박광호 박영식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김영철 리용호 최부일 로두철 리명수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 휘 박태덕 김영철 리용호 태형철 김수길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김재룡 리만건 리일환 최 휘 리병철 김덕훈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최부일 김수길 태형철 오수용 정경택
후보위원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최 휘 박태덕 김여정 임철웅 조연준 김수길 김능오 리병철 노광철 정경택 리영길	리영길 노광철 임철웅 조용원 김덕훈 리룡남 조연준 리병철 김능오 김여정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	김형준 허철만 리호림 김여정 조용원 박정천 김정관 임철웅 리룡남 김일철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구성원 수	28명	30명	34명	30명

자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인사 변동 내용은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자 보도 및 1면 기념사진, 『로동신문』 1월 18일자의 황선희 사망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등을 참고해 분석, 김여정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 유지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표 II -4> 제7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구성원 변화

	제7차 당대회 (2016.5.9)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의 (2017.10.7)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의 (2019.4.10)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2019.12.28~31)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당중앙위 부위원장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최룡해[조직] 박광호[선전] 리수용[국제] 김평해[간부] 태종수[군수공업] 오수용[계획재정] 안정수[경공업] 박태성[과학·교육] 김영철[대남] 최취[근로단체] 박태덕[농업]	박봉주[경제] 리만건[조직] 박광호[선전] 리수용[국제] 김평해[간부] 태종수[군수공업] 오수용[계획재정] 안정수[경공업] 박태성[과학·교육] 최취[근로단체] 박태덕[농업] 김영철[대남]	박봉주[경제] 리만건[조직] 리일환[선전] 최취[근로단체] 리병철[군수공업] 김덕훈[경공업] 박태덕[농업] 박태성[과학·교육] 김영철[대남] 오수용[계획재정] 김형준[국제]
구성원 수	10명	12명	13명	12명

자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의 인사 변동 내용은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자 보도 및 1면 기념사진, 『로동신문』 1월 18일자의 황선희 사망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등을 참고해 분석. 오수용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필요

<표 II -5> 제7차 당대회 이후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변화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 (2016.6)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 (2018.4)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2019.4)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최룡해 박봉주	박봉주
위원	김기남 박영식 리수용 리만건 김영철 김원홍 최부일 리용호	박광호 김정각 박영식 리수용 태종수 김영철 정경택 최부일 리용호	김재룡 리만건 리수용 김영철 태종수 리용호 김수길 노광철 정경택 최부일 최선희
구성원 수	12	12	14

자료: 『로동신문』, 2016.6.30.,2018.4.12.,2019.4.12.

2. 경제 분야

- 〈 1 〉 대북제재 지속과 환율 추이
- 〈 2 〉 봄 가뭄과 식량가격 추이
- 〈 3 〉 전시회/전람회를 통한 판매 경쟁 및 기술혁신 장려
- 〈 4 〉 첨단기술 강조와 개발 현황
- 〈 5 〉 관광산업 중점 육성과 관광지구 개발
- 〈 6 〉 대북제재와 북중무역
- 〈 7 〉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지원
- 〈 8 〉 대북제재와 국산화
- 〈 9 〉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업 부문 개혁
- 〈 10 〉 ‘수자화’ 와 ‘수자경제’ (디지털경제)

2 경제 분야

< 1 > 대북제재 지속과 환율 추이

□ 개요

- 대북제재 강화로 2019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음에도 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기록
- 북한 시장 환율의 안정세 요인과 관련하여 상이한 견해들이 존재함. 이는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됨

□ 2019년 대북제재 및 달러환율 현황

- 201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 확대
 - 2019년 북한의 대중수출 1.9억 달러, 수입 23.3억 달러(2019년 11월 현재) 수준으로 대북제재 이후 2018년 급감한 대중국 무역은 유의미한 반등없이 지속
 - 무역수지는 21.5억 달러 적자(2019년 11월 현재)로 적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이 외화고갈과 그에 따른 경제공핍으로 1~2년 내 극복할 것이란 예상이 확산

<표 II -6> 북한의 대중국 무역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수 출	2,464	2,484	2,911	2,841	2,484	2,634	1,651	195	186
수 입	3,165	3,446	3,633	3,523	2,946	3,192	3,328	2,217	2,332
무역수지	-701	-961	-722	-681	-463	-558	-1,677	-2,023	-2,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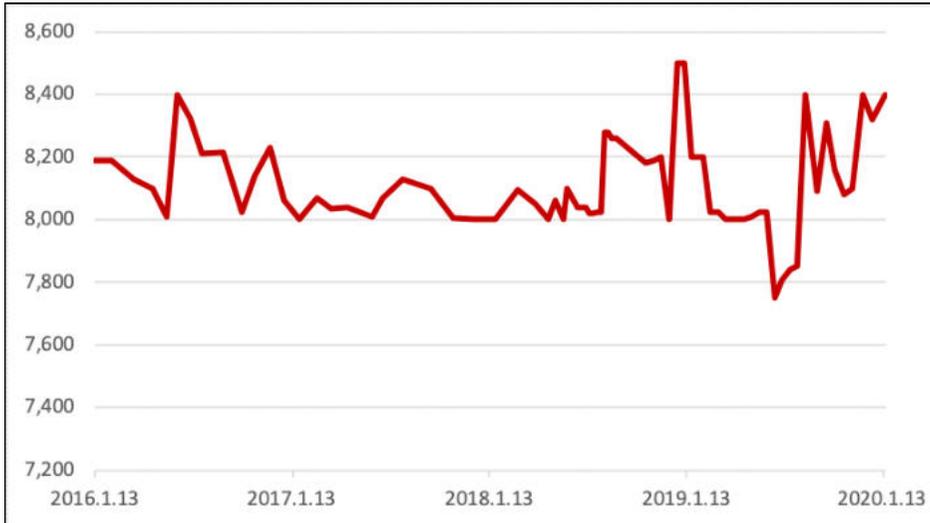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최근까지는 예상과 달리 시장 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
 - 적자 폭이 커지면, 외화보유고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외화공급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초래할 것임
 - 그러나 2019.12월 달러환율은 8,000원대 초반으로 2013년 이후 과거 대비 안정세를 유지

- 그러나 문제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외화가 고갈되고 그에 따라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임
 - 2018년 하반기 이후 등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림 II-1> 북한의 달러 환율

(단위: 북한원/\$)



자료: Daily NK

주: 평양의 달러 환율

□ 최근까지 북한의 외화 환율 안정세의 원인: 3가지 가설

- 2019년에도 북한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현상을 둘러싸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3가지의 상이한 견해 존재
- 먼저, 외화규모는 무역외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를 고려해야 하며 외화 수입원으로 무역외 수지도 고려할 때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견해 존재
 - 무역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무역외수지 및 무역 관행(킵백과 리베이트)을 포함하면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예상만큼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임
 - 기존의 북한 외화보유고 추정에 따르면, 25억~58억 달러(2018년 말 기준) + 킵백/리베이트 100억 달러가 됨. 장형수·김석진에 따르면, '18년 말 기준 북한 외환보유액이 25억 ~ 58억 달러로 2020년 말에는 북한 외화보유액은 고갈된다고 보았음. 따라서 북한은 늦어도 2020년 말까지 미국과 비핵화-체제보장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협상 실패할 경우 상품수입을 대폭 줄이면서 버티기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임수호에 따르면, 여기에 2000년 이후 킵백과 리베이트 100억 달러를 추가하여 추정하고 있

음. 그 결과 상당 기간 버티기가 가능하나, 시장 반응은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의 추정들에 따르면, 최소한 2019년까지는 외화가 고갈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2020년 이후의 상황임

※ 무역외수지: 서비스수지(관광소득, 입어료 등), 이전소득수지(해외송금 등), 본원소득수지(해외 파견 노동자/해외식당)

- 관광 확대: 대북제재로 방북 중국인 2017년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소, 그러나 2018년 6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년 대비 50% 증가했음
 - 북한의 국가관광총국 관광홍보국장은 2018년 방북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중 중국인 관광객이 90%를 차지했다고 밝힘(중국 『신화통신』, 2019.7.11.)
 - 관광수입 규모는 방북 외국인 관광객 인원에 따라 달라지나, 공식 대중 교역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 2019년까지는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이들의 임금 수입 또한 존재
 - UNSCR 2375호는 신규 북한 노동자 고용 및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에 대한 계약 연장을 금지하였으며, UNSCR 2397호에 따라 대다수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귀환해야 함
 - 다만, 2017년 9월 채택된 UNSCR 2375호가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을 제한하고, 동년 12월 채택된 UNSCR 2397호가 기존 북한 노동자도 2년 이내 북한으로 귀환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수입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

○ 한편 북한 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시장 환율의 안정세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

- 달러라이제이션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달러가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는 대외무역, 주택 등 달러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와 시장에서의 일상적인 거래로 구분 가능
- 가용가능한 총외화 중 시장거래에 사용되는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외화의 감소가 시장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북한 당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의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최근 북한은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상업은행 설치 및 저축의 유도 등 재정 지출을 줄이고 유휴자금을 정부가 흡수하기 위한 조치 단행
- 위와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갖는다면 달러 유입 감소와 함께 시중에 풀린 화폐량(원화)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음

< 2 > 봄 가뭄과 식량가격 추이

□ 개요

- 전년도 가뭄에 이어, 올해 봄 가뭄은 예년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식량가격은 안정세를 유지
- 주된 이유로 두 가지 가설 존재
 - 강도높은 대북제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소득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감소, 농업개혁에 따른 생산 증대 및 다변화, 중국의 지원 등에서 기인한다는 견해
 - 대북제재에 의해 전반적인 소득의 감소로 시장에서의 유효 수요가 하락하여 식량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

□ 2019년 가뭄피해 및 식량가격 현황

- 올해 봄 가뭄은 과거 동 기간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심각
 -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적 평균 강수량은 56.3mm로 평년의 39.6%였다. 이것은 1917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서는 제일 적은 것”(『로동신문』, 2019.5.17.)
- 『로동신문』은 가뭄 피해의 심각성과 대안을 집중 보도(5월 중순 ~ 6월 중순)
 - “모내기철이 왔다.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자.”(『로동신문』, 2019.5.19.), “물은 곧 쌀, 쌀은 곧 사회주의”(『로동신문』, 2019.5.30.) 등
 -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우물과 저류지 등 보조수원을 건설·보수하는 한편 마른논써레치기, 이랑재배, 두둑재배 등 ‘물절약농법’을 적극 권장
 -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마른논써레치기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60% 정도의 물로도 모내기가 가능(『로동신문』, 2019.5.19.)
 - ※ 마른논써레치기란 써레를 이용하여 모내기 전에 흙을 잘게 부수어 논을 편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의미
- 세계식량계획(WFP)는 2018/19년 식량생산량을 2008년 이후 최저인 490만 톤으로,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 따라서 긴급한 식량지원 필요 제기
- 그러나 극심했던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
 - 2019년 7월, 평양의 쌀가격은 4,970원/kg으로 안정세 유지

<그림 II -2> 쌀의 시장가격

(단위: 북한원/kg)



자료: Daily NK

주: 평양의 쌀가격

□ 북한의 식량가격 안정세의 원인

① 2019년 이전 북한의 식량가격 안정

○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와 농업개혁 등에 따른 공급의 증가/다변화의 결과일 수 있음

- 우선, 소득증가에 따른 북한주민의 소비성향 변화: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 소비성향 변화를 “옥수수보다는 쌀, 쌀보다는 고기”로 표현하고 있음

- 이는 최근 10년 간 북한의 對중국 식료품 수입 현황에서 입증되고 있음. 즉 곡물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과일, 수산물 및 동물성 지방 등의 수입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밀가루 국수 등 대체 식품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북한주민의 필요 곡물소요량은 세계식량계획(WFP) 2018년 추정치 500g/1일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WFP가 제시한 2018년 북한의 필요 곡물 소요량은 575만 톤. 이는 식량소요량 약 500g/1일 기준을 적용한 결과(인구 2,500만 명 적용= 456만 톤, 그 외 식료품, 사료 생산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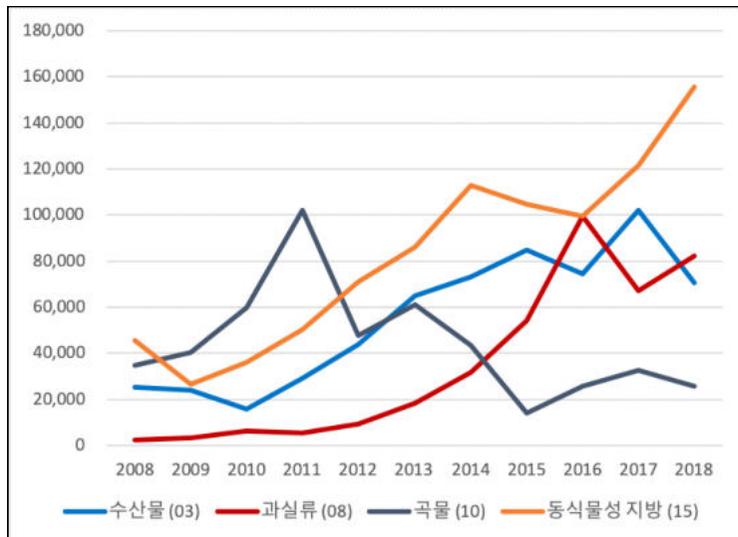
- 북한이 심각한 식량위기에서 벗어나 있음은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북한의 영양상태 변화, 최근 북한의 산림복원 정책 추진 등에서도 입증되고 있음

- 우선, 유니세프의 종합지표조사(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에 따르면, 1998~2017년 기간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

음. 특히 식량원조가 급감한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영양상태 계속 개선되고 있음(김슬기, 2018.7.)

- 최근 북한의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 추진으로 폐기밭이 감소추세에 있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이 22만ha가량 감소(2008년 284만ha에서 2018년 262만ha로) 한 것으로 확인(국립산림과학원, 2019).

<그림 II -3> 북한의 대중국 식료품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KITA.NET)

- 둘째, 농업개혁으로 농민들의 인센티브 증대 및 개인 축산이 가능해지면서, 먹거리의 공급이 과거보다 풍부해졌음
 - 개별 포전을 담당한 농민이 ‘생산계획’ 이상을 생산한 것은 개별 농민의 소득이 됨
 - 또한 현재 농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퇴비(거름) 생산과 육류 수요 해결을 위해 개인의 축산부업이 장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왔던 소를 비롯한 모든 집짐승의 개인 축산이 가능해졌음
- 유니세프의 종합지표조사, 산림복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와 같은 심각한 식량문제로부터 벗어났지만, 연이은 기상이변을 극복할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② 2019년 북한의 식량가격 안정

- 2019년 식량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상이한 두 가지 견해 존재

- 먼저, 식량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의 문제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지원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했다는 견해
 -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봄가뭄이 심각해진 5월부터 식량(대부분 쌀)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10월 현재 6천 2백만 달러로 2018년 2천 5백만 달러에 비해 248% 증가
- 한편, 식량가격 추이를 분석할 때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존재
 - 식량공급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득감소에 따른 유효수요 하락이라는 견해 존재
- 2019년 북한의 식량가격 안정세에 대한 요인 분석을 둘러싼 견해는 상이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식량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함
 - 기상이변 등과 같은 부정적 충격에 대한 취약점은 여전히 북한 농업이 해결해야한 과제임
 - 북한 또한 올해 하반기 북한의 『로동신문』에는 ‘이상기후현상이 물고을 파국적 후과’, 등 이상기후를 다루는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기상이변을 다루고 있지만, 자신들의 불안을 예들려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 〉 전시회/전람회를 통한 판매 경쟁 및 기술혁신 장려

□ 개요

- 최근 전시회, 전람회 등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제품홍보와 판매경쟁의 광장으로 변모
- 2019년 전시회, 전람회 및 축전 등을 통해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출품된 인민소비품의 종류와 수가 증가
 - 이는 △제품의 품질 향상, △인민소비품의 국산화 진척, △다품종 소량생산의 본격화 등을 시사

□ 2019년 주요 행사 현황

- 전시회 등에는 기업소뿐 아니라 연구기관, 군 기관 등 다양한 생산단위들이 참

- 여하여 자신들이 개발한 과학기술이나 생산한 제품들을 홍보
-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주부, 노동자 및 농민 등 개인 출품 허용, 특허권 허용
- 한편 최근 전시회, 전람회, 축전 등은 단순히 신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질을 평가받고 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는 치열한 제품홍보와 판매경쟁의 광장으로 변모
- 행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혹은 기업소들을 지명함으로써, 참가자들 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기술혁신의 계기로 작용
- 과학기술 분야
- 철도, 농업, 건설, 에너지,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선보였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로봇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10월 1~4일)가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음
 - 작년에는 정보기술의 경연을 벌이는 <제29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과학기술전당, 2018.11.7.~14.)에서 안면인식, 음성인식, 기계번역 프로그램 등 AI 분야가 호평을 받았음(『로동신문』, 2018.11.8.)
 - 이번 전시회는 ‘생산공정의 로봇트화’ 라는 주제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전자공업성, 기계공업성 등이 각종 로봇에 대한 설계, 기계요소, 구동장치, 조종프로그램들을 전시
- 신제품 분야
- 출시되는 신제품은 건설장비, 마감재, 사탕/과자, 신발 등의 인민소비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국산품
 - 이들 가운데 경공업 제품들의 경우, 각 단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
 - 사례: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 전국 인민소비품전시회,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전시회

<표 II -7>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 제품 증가 추세

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류	1,500종	1,200종	7,700종	-	25,000종
가지 수	124,000점	130,000점	85,000점	287,300점	385,700점

자료: 『로동신문』 토대로 저자 작성

- ‘전국 8월3일 인민소비품전시회’ 는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 가내작업반 등에서 자체의 지방원료와 폐자재 등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만든 소비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

<표 II -8> ‘전국 인민소비품전시회’ 제품 증가 추세

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류	-	-	2,000여 종	4,500 여종
가지 수	3만 3천여 점	10만여 점	8만여 점	15만 여점

자료: 『로동신문』 토대로 저자 작성

-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는 전국의 주요 경공업생산 기업들이 참가하는 행사

<표 II -9>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전시회’ 제품 증가 추세

년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류	350여종	350여종	300여종	400여종
가지 수	-	3,000여점	8,000여점	42,000여점

자료: 『로동신문』 토대로 저자 작성

- ‘206가지 일용잡화’ 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206가지를 일컫는 것으로서 1976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목록이 완성됨

□ 2019년 행사의 의미/시사점

- 출시된 제품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첫째, 2013년 이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가 적어도 인민소비품의 부문에서는 비약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시사
- 둘째, 경쟁의 심화로 품질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다품종 소량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 사례: 전국신발전시회의 다양화 추세
 - 2018년 가을 전시회에는 60개 단위, 940여 종에 31,000점 출품, 2019년 봄철 전시회에는 60개 단위, 1,100여 종에 113,000점 출품
 - 2018년 가을 전시회 관련 보도에서 경쟁과 품질,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 강조하는 북한의 상품관(商品觀)의 변화를 알 수 있음(『로동신문』, 2018.10.28.)

엄정하고 공개적인 경쟁마당, 원칙은 선질후량!

각지의 60여개 단위가 참가한 이번 신발전시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공개적인 경쟁마당이었다.

어느 공장, 어느 단위의 제품이 제일 잘 팔리는가. 누구나 좋아하고 먼저 찾는 명상품, 명제품은 어떤 신발인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자는 인민들이었고 가장 정확한 평가의 기준은 그들의 목소리였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드는 신발이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인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은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소용이 없다는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한 신발공장에서 온 일군의 이야기였다.

옳은 말이였다. 그러면 좋은 신발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우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심사를 맡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일용화학공학부 신발공학강좌 강좌장과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 소장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일반적으로 신발은 우선 활동에 편리하게 발에 꼭 맞으면서도 알뜰하고 맵시있어야 한다.

또한 신발은 땀을 잘 빨아들여야 하며 특히 질겨야 하는데 이것은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그리고 가벼워야 한다. 신발공업은 철저히 다품종소량생산부문이다. …

전문가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똑

자료: 『노동신문』, 2018.10.28.

< 4 > 첨단기술 강조와 개발 현황

□ 개요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수자화’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 이를 위해 AI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올해는 첨단기술의 경제적용 확대, 개발 기관 간 경쟁 심화 및 고가 전자기기의 국산화 등의 성과를 거둠

□ 김정은 시대의 첨단기술 개발

- 최근 북한은 ‘수자화’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 최근 북한이 사용하는 수자화는 디지털화를 의미. 지식경제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에 근거한 경제를 지칭

- 최근 북한이 ‘수자화’와 ‘지식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이미 디지털경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수자화된 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세계적추세”(『로동신문』, 2019.1.24.) 등의 보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중국, 러시아 및 아세안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 등을 소개
 -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인재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시대이다.”(『로동신문』, 2019.1.23.)
- 지식경제 추구는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토대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단번도약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
 - 북한은 자체 과학기술역량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여타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여타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단번도약을 추구
- 북한의 지식경제와 지식(기반) 산업 실체는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첨단기술의 경제 적용의 현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2019년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경제 적용 현황

- 현재 첨단기술로는 AI(인공지능), Big Data(대자료), Cloud Computing(구름계산), Rob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들 수 있는데, 올해 북한이 가장 집중했던 첨단 기술은 AI이며, 다음으로 Robot이 뒤를 이었음
 - 안면인식, 음성인식, 문자인식 등 AI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이들 기술들이 경제 분야 적용 확대
 - 평양국제공항에 AI 기반 안면인식체계 도입(『메아리』, 2019.1.25.)
 - 아이들의 다정한 벗이 될 <소리연필>_AI기반의 문서읽기(『로동신문』, 2019.2.5.)
 - 수자식 건강관리기술_AI기반의 건강관리(『로동신문』, 2019.8.14.)
 - 연풍상업정보기술사, 지문인식-안면인식 도어락 개발(『메아리』, 2019.9.8.)
 - 김책공대, 화상식별기술을 리용한 학업진행관리프로그램이 개발(『로동신문』, 2019.9.28.)
 - 올해, Robot 전시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그간 축적된 로봇개발 역량을 선보였음
 - 전국로봇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개막(『로동신문』, 2019.10.2.)
 - 반면 Cloud Computing(구름계산), Big Data(대자료) 등은 아직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올해 AI를 비롯한, Robot, AR/VR 등 여러 첨단기술들은 의료, 교육, 산업 및 금융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음
 - 교육: 유치원 교육의 전자교과서 활용(『메아리』, 2019.4.13.), AR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로동신문』, 2019.1.24. 등)

- 의료: AI 기반의 건강관리 스마트폰 앱 등 개발/보급(『로동신문』, 2019.2.5., 『메아리』, 2019.10.6.)
 - 산업: AI기반의 산업용 로봇개발(『로동신문』, 2019.10.2.), 3차원 길 안내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메아리』, 2019.8.9.),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생육상태평가(『메아리』, 2019.9.7.)
 - 금융/상거래: 전자상거래, 자체 전자기기 생산, 전자결제와 운송체계를 통합한 전자상업망 구축(『로동신문』, 2019.1.26), 향후 전자은행업 모색(『메아리』, 2019.2.14)
 - 제조: AI 기반의 스마트 폰(『메아리』, 2019.5.1., 9.9.)과 음성인식 기능 탑재 스마트TV 생산(『메아리』, 2019.7.20.)
-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김일성종합대와 김책공대이며, 그 외 국가과학원과 각 기관·기업소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의 평양화장품공장 통합생산체계 개발(2019년 제 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 수상)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통합생산체계 개발(『로동신문』, 2019.9.21.)
 - 김책공대는 원격교육의 과학화, 실용화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화상식별기술을 이용한 학업진행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국의 수십 개 대학에 일반화(『로동신문』, 2019.9.28.)
 - 2019년 4월에 진행된 제43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과 《코드쉐프》경연에 참가한 대학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둠(『로동신문』, 2019.9.28.)
 - 김책공대는 3년 간 SW 400여 건 개발, 북한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 불리우고 있음(『조선중앙통신』, 2019.5.10.)
 - 국가과학원에서는 지난해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실현에서 의의를 가지는 공업용 6 자유도 로봇과 빛섬유레이저 절단기 등을 새로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종의 CNC장치와 사보구동장치를 개발(『로동신문』, 2019.8.20.)

□ 2019년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경제 적용 현황의 특징

- AI 등 첨단기술의 경제적용 확대(연구개발에서 경제적용으로)
- 작년에는 AI 관련 연구개발 관련 보도가 대부분. 예를 들어 과학기술전당에서 개최된 <제29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서 안면인식, 음성인식, 기계번역 프로그램 등 AI 분야가 호평을 받았음(『로동신문』, 2018.11.8.)
 - 그러나 올해에는 AI기반의 문서읽기, AI기반의 건강관리, 안면인식 기반의 원격교육, AI 기반의 Smart Phone과 Smart TV 등 첨단기술이 교육, 보건, 산업,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음
- 개발 기관/업체 간 경쟁 심화 및 고가 전자기기의 국산화 진척

- 스마트폰의 경우, 올해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의 ‘푸른하늘’, 광야무역회사의 ‘길동무’가 새롭게 출시되어, ‘아리랑’, ‘평양’, ‘진달래’ 등 기존 브랜드들과 경쟁
 - 과거 아리랑, 평양, 진달래 등 기존 브랜드와 달리, 올해 출시된 ‘푸른하늘’과 ‘길동무’는 스마트폰의 핵심을 이루는 주기판의 회로설계와 외형설계, 체계 프로그램 작성 등 모든 요소들을 자체의 기술로 실현해 제품화했다고 주장
 - ※ ‘푸른하늘’과 ‘길동무’의 운영체계가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벗어나 자체 OS를 개발한 것인지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했다는 뜻인지는 추후 확인 필요
- 스마트 TV의 경우, ‘소나무’에 이어 음성인식 기능 탑재 스마트TV ‘소백수’를 개발/출시
 - 2018년 ‘락원’, ‘푸른하늘’, ‘보통강’ 등 3개 브랜드의 LED TV, 곡면 TV 등이 해외 수출 모색(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2018 조선상품』)
- 로봇의 경우, 김일성 종합대,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전자공업성, 기계공업성 등 여러 기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음
 - 사례: <전국로봇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10.1-4.)

<사진 II -10> 2019 전국로봇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출품된 산업용 로봇



전시회포스터, 김일성종합대의 인간형 로봇, 김책공대의 거미로봇,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기계손로봇(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자료: 『메아리』, 2019.10.5.

□ 의미와 시사점

- 북한의 수자화와 지식경제로의 전환은 아세안 개도국들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모색을 고려할 때, 결코 빠른 전환은 아님
 - 지식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는 세계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이후 한국은 ‘IT강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를 중앙정부 부처로 신설하기도 하였음

- 한편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의제화되어 global hot issue 로 부상하자마자, 그해 6월 아세안 세계경제포럼은 아세안의 경쟁력 확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 2014년 'ICT 마스터 플랜' 을 수립하여, 3대 과제로 ①연계성(connectivity), ②역량(capability), ③전자서비스(e-service)를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제재국면에서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여타 개도국에 비해 발전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첨단무기 개발 및 과학기술 중시의 교육과정을 통해 아세안 개도국들 보다 우수한 인재 및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고 자신감도 갖고 있음
 - “사회주의자립경제는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는 굳건한 지반위에 일떠설 때만이 강력함것으로 될수 있다.” (『로동신문』, 2019.4.1.)
 - AI 연구개발 및 경제 적용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디지털 LED TV 등 첨단기술 기반의 상품 수출을 모색하고 있음
- 비록 북한의 수자화와 지식경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연구개발과 경제적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
 - 북한의 첨단기술 개발은 국산화의 진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핵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북한의 발전 잠재력은 지하자원 등 물적 요소에서 인재와 과학기술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남북경협은 이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 북한의 요구사항이 묘목이 아니라 양묘장이란 데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북한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

〈표 II -10〉 2019년 북한의 첨단기술 개발 관련 보도

구분	주요 내용/보도 일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로동신문』, 2019.1.7.) ▪ 아이들의 다정한 벗이 될 <소리연필>(『로동신문』, 2019.2.5.) ▪ 경상유치원, 전자교과서 ‘친한 동무’ 전국 보급(『메아리』, 2019.4.13.) ▪ 김일성종합대학, 화상회의체계 ‘락원’ 전국 보급(『조선중앙통신』, 2019.5.22.) ▪ 새 교수방법 창조를 위한 개발력량을 꾸려놓고(『로동신문』, 2019.6.4.) ▪ 김책공대, AR 기반 낙하산 훈련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2019.7.17.) ▪ 천명기술개발교류사, “DB 기반 통합형학습지원시스템 천명 2.0 개발”(『메아리』, 2019.7.23.) ▪ 김책공대, 선두마차, 기관차로 내세워주신 그 믿음 안고 달려온 보람찬 한해(『로동신문』, 2019.9.28.) ▪ 김일성종합대학, AI 기반 문서 읽어주는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2019.10.6.)

구분	주요 내용/보도 일자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식건강관리기술(『로동신문』, 2019.8.14.) ▪ 대영정보기술교류소, 건강관리프로그램 ‘경혈안마’ 개발(『메아리』, 2019.8.19.) ▪ 김일성종합대학,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폰 앱 개발(『서광』, 2019.9.20.)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국제공항에 AI 기반 안면인식체계 도입(『메아리』, 2019.1.25.) ▪ 과학기술자들의 정신력발동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2019.8.20.) ▪ 삼흥정보기술교류소, 3차원 길 안내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2019.8.9.) ▪ 농업연구원, 드론으로 농작물생육상태평가방법 개발(『메아리』, 2019.9.7.) ▪ 연풍상업정보기술사, 지문인식-안면인식 도어락 개발(『메아리』, 2019.9.8.) ▪ 의의있는 정보기술들을 개발(『로동신문』, 2019.9.21.) ▪ 전국로보트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개막(『로동신문』, 2019.10.2.)
금융/ 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을 모으는 전자상업 홈페이지(『로동신문』, 2019.1.26.) ▪ 전자상거래 만물상, 모바일 버전 개발(『메아리』, 2019.1.26.) ▪ 만물상,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향후 전자은행업 모색(『메아리』, 2019.2.14.) ▪ QR코드 확대 적용 및 스마트폰 이용 확대(『로동신문』, 2019.1.13.)
Smart Ph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충전기능 ‘평양2425’ 스마트폰 출시(『서광』, 2019.4.8.) ▪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 자체 OS 기반 ‘푸른하늘’ 출시(『메아리』, 2019.5.1.) ▪ 광야무역회사, 새 스마트폰 ‘길동무’ 출시(『메아리』, 2019.9.9.)
Smart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전자제품개발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2019.2.6.) ▪ 스마트TV ‘소나무’ 광고(월간 『금수강산』, 2019년 2월호) ▪ 흥정보기기술무역회사, 음성인식 기능 탑재 스마트TV ‘소백수’ 를 개발(『메아리』, 2019.7.20.)

자료: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메아리』 등

< 5 > 관광산업 중점 육성과 관광지구 개발

□ 개요

- 관광산업은 소규모 자본 투입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하에서 핵심적인 외화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 중
- 이들 주요 관광단지들은 2019년 12월 혹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김정은 등 지도부들의 현장방문, 군의 주도적 건설 참여, 전국의 기관, 기업소 및 주민 참여와 지원 등을 토대로 대대적인 국가적 건설 프로젝트를 전개

□ 관광산업 개발 전략

-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관광산업발전을 강조(김정은 연설 및 조선노동당 7차대회 결정서, 2016.5.8.)
 - 박봉주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보고에서 “세계관광발전추세에 맞게 관광대상과 지역을 늘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겠다.” 고 발언(『로동신문』, 2016.6.30.)
 - ※ 김정은은 2013년 3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3월 31일)에서 이미 관광산업 진흥 강조

- 주된 목표: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
 -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중요과업의 하나이며 …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우선 봉사료 수입을 늘여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황룡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호텔봉사의 역할,” 『경제연구』, 2018년 4호.)

- 주된 수단: 관광개발구 개발(그 외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질 높은 봉사)
 - “관광업을 발전시키자면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특색있게 꾸미고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과 함께 관광객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여야 한다.” (황룡운, 앞의 글)
 - “관광개발구 개발목적은 나라의 국토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관광업을 기본경제부문으로 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며 나라의 관광을 빠른 기간에 발전시키자는데 있다.” (공혁, “관광개발구 개발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7 2호)

- 관광개발구 개발의 주요 원칙: △각종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확충, △실리 보장, △지역 특색 고려한 개발, △관광자원 및 환경 보호 등(공혁, 앞의 글)
 - 특히 환경보호 원칙을 반영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최근 『경제연구』에 게재된 관광관련 보고서 가운데 절반이 생태관광에 대한 글임)

□ 주요 관광개발구 개발 개요

- 기존에 공식 지정된 관광개발구로 중앙급과 지방급의 관광특구/개발구들이 있음(2019년 11월 기준)

<그림 II -4> 북한의 관광개발구



자료: 저자 작성(표), 『남북협회 뉴스레터』, 2019.8. Vol.71(지도)

- 최근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에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관광단지 조성 중에 있음
 - 이들 관광단지들은 2017년 말 혹은 2018년부터 착공하여, 2019년 12월 혹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총 공사기간 2~3년)

<표 II -11> 최근 조성 중인 북한의 관광단지(2019년 12월 현재 기준)

관광단지	추진 경과
삼지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2016년 11월 삼지연군 일대를 현지시찰 하면서 3~4년내 ‘삼지연 꾸리기’ 사업 지시, 2017년 말부터 공사가 시작 ▪ 2018년 이후 김정은 현지시찰은 2018년 7월, 8월, 10월, 2019년 4월, 10월 12월 등 총 6회 진행(준공식 참석 포함) ▪ 2019년 12월 2단계 건설공사 완공 ▪ 2020년 10월 10일(당창건 75돐) 완공 예정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도록 지시 ▪ 김정은 현지시찰은 2018년 5월, 8월, 11월, 2019년 4월 등 총 4회 진행 ▪ 2020년 4월 15일(태양절) 완공 예정
양덕온천문화휴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의 현지시찰은 2018년 8월, 11월, 2019년 4월, 8월, 10월, 11월, 12월 총 7회 현지시찰(준공식 참석 포함) ▪ 2019년 12월 완공

자료: 저자 작성

주: 김정은의 현지시찰은 보도일 기준으로 명기

□ 2019년 관광단지 개발 현황

○ 김정은의 지시와 독려

-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2019년 신년사)
- 김정은 위원장과 주요 지도자들의 현지 시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삼지연시: 2020년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3단계 공사 중 올해 2단계 공사 완료

- “혁명의 고향집뜨락인 삼지연군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려 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4.4.)

<사진 II -11> 삼지연시 공사 진척 현황



2018.7.10.



2019.10.16.



2019.12.3.

자료: 『로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5년 4월 22일 정령을 발표하고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지구 일부 지역을 ‘무봉국제관광특구’로 지정
- 원래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으나, 김정은은 2020년 10월 10일(당 창건 75돐)까지 “삼지연군 총건설 계획을 앞당겨 끝

내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하라” 고 지시(『조선중앙통신』, 2018.10.30.)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20년 4월 15일 완공 예정
 - 김 위원장은 애초 2019년 10월10일(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완공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을 내년 4월15일(김일성 주석 생일)까지 6개월 연장시키고,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로동신문』, 2019.4.6.)

<사진 II -12>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 진척 현황



2018.5.26.



2019.4.6.

자료: 『로동신문』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2019년 12월 완공
 - 김 위원장은 인민들과 약속한대로 2019년 10월 10일(당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할 것으로 지시(『로동신문』, 2018.11.1.), 올해 12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로동신문』, 2019.8.31.)
 - 이름 없던 한적한 산간지대에 온천도 하고 스키도 탈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 문화휴식지, 건강치료봉사기지 건설(『로동신문』, 2019.4.6.)
 - 그 결과 2019년 12월 준공식을 갖고 개장(『로동신문』, 2019.12.6.8.)

<사진 II -13>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공사 진척 현황



2018.11.1.



2019.8.31.



2019.12.9.

자료: 『로동신문』

□ 관광단지 건설사업의 특징

- 이들 관광지구는 현 시대를 대표할 최상의 건설을 목표로, 목표 시점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건설 프로젝트로 전개
 - 김정은 등 지도부의 현지 방문, 군대의 적극적인 건설 참여, 사회주의 경쟁 적극 활용 등을 토대로 건설 사업 전개
- 정부가 주력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김정은 위원장과 주요 지도자들의 현지 시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군 주도 혹은 적극적인 건설 참여
 - 김정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 (건군절 71주년 기념 인민무력성 방문 연설, 『로동신문』, 2019.2.9.)
 - 군인 건설자와 민간 돌격대원들로 구성
 - 삼지연시: 216사단이 건설지휘부를 구성, 그 산하에 백두산영웅청년여단, 삼지연철길건설여단, 6.18건설여단 등 지휘관들의 지휘 하에 군인 건설자들과 민간 돌격대원들이 건설 노동에 참여
 - 군수공장에서 건설자재 등을 생산, 현장에 공급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스키장에 설치할 수평승강기와 끌림식식도를 비롯한 설비제작을 모두 주요군수공장들에 맡겨보았는데 나무랄데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8.31.)
- 전투속보판/경쟁도표판, 경쟁순위 발표 및 기능공경기 등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경쟁’ 촉발
 - 현장에 전투속보판과 경쟁도표판 등을 게시, 혁신적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경쟁(『로동신문』, 2019.5.19.)
 - 매월 건설에 참여한 성·중앙기관 경쟁순위 및 도별경쟁순위 발표(『조선의 오늘』, 2019.7.15.)

- 건설에 참여한 전국의 기능공들이 기능경연을 벌이는 기능공경기 개최 (『로동신문』, 2019.7.14.)

□ 의미 및 시사점

- 이들 건설사업의 종료 시점이 2019년 말 혹은 2020년임.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전략수행의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을 시사
 - 제재국면에서 전국의 기관, 기업소, 학생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단기간에 현 시대 최상의 건축물을 완공
 - 이는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제공하고 주민결집 강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2021년 이후 관광사업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관광사업을 통해 외화 획득의 총규모가 이전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
 - 이는 북한의 대북제재 강화 이전의 연 평균 무역수지 적자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향후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고갈 리스크를 완화할 것임
- 그러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건설자재의 부족, 인프라 건설 미흡 등으로 인해 단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에 따른 건설자재 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숙박시설 확충에 비해, 운송, 통신 및 금융 등의 인프라가 아직 취약하여 단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북중 접경지역이 아닌 내륙 혹은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한 것은 평양을 거쳐 관광단지를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6 > 대북제재와 북중 무역

□ 개요

- 2019년 11월까지의 對중국 무역은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수출은 16.0%, 수입은 6.7% 증가)
 -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88%, 수입은 33% 감소)

- 대북제재로 인해 對중국 무연탄 수출과 전기기기, 기계류 및 일반 차량 등의 수입은 거의 중단

□ 무역 규모의 변화

- 2019년 11월까지의 대중국 수출은 1.8억 달러, 수입은 23.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은 16.0%, 수입은 6.7% 증가

<표 II -12> 북한의 대중국 무역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1
수 출	2,464	2,484	2,911	2,841	2,484	2,634	1,651	195	186
수 입	3,165	3,446	3,633	3,523	2,946	3,192	3,328	2,217	2,332
무역수지	-701	-961	-722	-681	-463	-558	-1,677	-2,023	-2,146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수출입 규모가 2018년 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

<2017년 이후 UN의 대북제재>

-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
-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
-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97호는 △북한산 기계류, 전기기기, 식료 농산품의 수입 및 조업권 거래 금지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금속 등 대북 수출 금지 △원유 연 400만 배럴(52.5만 톤)과 정제유 연 50만 배럴(6.5만 톤) 대북 수출 제한

□ 수출입 품목의 변화

① 수출품목의 변화

- 2019년 10월 HS code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품목의 순위를 보면, 시계(91), 조제우모 인조제품(67), 철강(72), 광/슬랙/회(2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 - 13>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제재 본격화 이후				제재 본격화 이전			
	HS code	품명	2018년	2019년 10월	HS code	품명	2016년	2017년
1	91	시계	31	36	62	의류(편물제 제외)	612	497
2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24	25	27	광물성연료 (무연탄)	1,187	413
3	72	철강	32	24	26	광, 슬랙, 회	225	187
4	26	광, 슬랙, 회	25	16	03	어패류	190	163
5	90	정밀기계	10	11	08	과실, 견과류	51	79
6	27	광물성연료	11	8	61	의류(편물제)	112	65
7	95	완구류	5	7	72	철강	44	59
8	64	신발	5	5	25	토석류, 소금	35	44
9	70	유리	6	5	85	전기기기(TV, VTR)	34	28
10	28	무기화합물	3	3	44	목재, 목탄	19	1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과거 주요 수출품목인 무연탄(27), 의류(62), 어패류(03), 과실견과류(08) 등의 수출이 중단된 결과임
 - 그러나 의류 임가공 원료인 인조필라멘트의 수입이 2위를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의류(61, 62) 수출은 밀수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
 - 어패류의 수출 역시 제재 본격화 이후 조업권 판매(UN결의안 2397호 위반), 밀수(해상 직거래)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됨

② 수입품목의 변화

- 2019년 10월, HS code 기준으로 수입 순위를 보면, 플라스틱과 그 제품(39), 인조필라멘트섬유(54), 동식물성 유지(15), 곡물(10), 시계(91), 담배(24), 편물(60), 밀가루(11) 등의 순으로 수입되고 있음

<표 II - 14>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제재 본격화 이후				제재 본격화 이전			
	HS code	품명	2018년	2019년 10월	HS code	품명	2016년	2017년
1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22	191	85	전기기기(TV, VTR)	315	338

순위	제재 본격화 이후				제재 본격화 이전			
	HS code	품명	2018년	2019년 10월	HS code	품명	2016년	2017년
2	54	인조필라멘트	138	132	84	보일러 및 기계류	269	268
3	15	동식물성 유지	156	9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05	231
4	10	곡물	26	66	54	인조필라멘트	187	219
5	91	시계	46	63	87	일반차량	255	202
6	24	담배	70	61	15	동식물성 유지	99	122
7	60	편물	81	60	61	의류	135	117
8	11	밀가루	66	55	03	어패류	74	102
9	69	도자제품	58	51	60	편물	84	101
10	56	워딩부직포	48	49	72	철강	115	8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이는 대북제재로 인해 과거 주요 수입품목인 전기기기(85), 보일러 및 기계류(84), 일반차량(87), 철강(72) 등의 수입이 중단된 데 따른 것임
- 한편, 2019년 곡물(10)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이는 기상이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것으로, 올해의 식량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 - 특히 봄가뭄이 심각해진 5월부터 식량(대부분 쌀)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10월 현재 6천 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
- 한편, 2014년부터 대중 원유수입이 중국 해관 통계상에 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년 최소 약 50만톤 수준의 원유가 수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갈수록 북한의 수송수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년 최소 5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만약 매년 50만 톤의 수입을 가정하더라도, 원유 수입은 2014년 5억 달러, 2015년 2.8억 달러, 2016년 2.3억 달러, 2017년 2.8억 달러, 2018년 3.1억 달러로 사실상 품목별 수입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됨

□ 의미와 시사점

- 2019년 對중 수출입의 감소 및 수출입 품목의 변화는 대북제재가 대체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
 - 단,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의류의 밀수, 조업권 판매 등이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 리기성 박사의 북한 GDP 규모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무역의존도(무역/GDP)를 추정해 보면 2018년 무역의존도는 약 10%에 달함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박사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북한의 1인당 GDP는 1,214달러, 국내총생산이 307억 달러로 발표
 - 이를 근거로 대중국무역의존도(대중무역/GDP)를 계산해보면,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17년 17%에서 2018년에는 약 9%로 축소(그런데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총무역의 90% 이상을 차지)
- 따라서 향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는 자립경제의 자원배분 메카니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이를 결정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개혁 및 국산화의 진전 등을 확인해 볼 필요

< 7 > 군수산업의 민수경제 지원

□ 개요

-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채택과 함께 북한의 군수산업의 역할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10월 18일 김정은 위원장은 군(軍) 주도로 건설 중인 경성군 중평남새 온실농장과 양묘장을 시찰하며 당의 의도와 구상에 맞는 군의 역할 수행에 대해 높이 평가
- 현재 북한은 군수 시설 및 생산기술 등을 인민경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
 - 경제 내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기존의 군 중심에서 인민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 관찰
- 그 동안 북한이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투자하며 군사국가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군수산업의 인민경제 지원 양상은 국가전략노선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

□ 현황

-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군수공장에서 민수품 생산을 성과로 제시하는 한편 군의 위상을 재규정(『로동신문』, 2019.1.1.)
 - 2018년 평가: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 2019년 계획: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과거에도 김정은은 경제발전에서 인민군대 역할 강화 강조: 2016년 인민무력부 방문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국방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리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첨단기술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6.1.10.)

- 김정은, 인민군 창건 71주년을 맞아 8일 인민무력성을 방문하고 군의 경제건설 참여 강조(『로동신문』, 2019.2.8.)

- “인민군대에서는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구마다 인민군대 특유의 투쟁 본때, 창조 본때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

- 김정은, 자강도의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만포 장자강공작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등 현지도, 평남의 기계종합공장 등을 현지도하면서 인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 강조

- 강계트랙터종합공장: “인민경제와 국방력 강화에 절실히 이바지하는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 (『로동신문』, 2019.6.1.)

- 만포 장자강공작기계공장: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스키장에 농을 새 끝림삭도와 감자가루 생산설비를 살펴보고” (『로동신문』, 2019.6.1.)

- 2.8기계종합공장: “유휴 자재로 생활필수품 생산을 정상화해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하며, 우리 당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이며 중요한 정책적 과제” (『로동신문』, 2019.6.2.)

- 평남기계종합공장: “평남기계종합공장은 인민경제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맡아야 하는 공장 … 새 세기 기계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려야” (『로동신문』, 2019.6.2.)

- 김정은의 묘향산 의료기구공장 현지도를 소개하는 언론에서도 군수공장의 인민경제 지원 사업 소개

- “최고영도자동지게서는 … 인민군대에 공장건설을 맡겨주시었으며 군수공장들에서 설비제작 사업을 맡아 하도록 과업을 주시고” (『로동신문』, 2019.10.27)

- 중요 군사현장 및 군사기지에 인민경제시설 건설

- 원산갈마반도의 경우 과거 중요 군사훈련장이었으나 2018년부터 대규모 해안관광지구로 개발 중이며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대규모건설현장에 포함되어

집중 지원 속에서 건설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소재한 공군비행장을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개발하여 마감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로동신문』, 2018.7.17., 2019.10.18.)
- 북한은 ‘군수공업부문생활필수품품평회’를 통해 군수공업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질의 생활필수품들을 공개
 - ‘군수공업부문생활필수품품평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2015년과 2017년, 2019년에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 위치한 창광상점에서 개최
 -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군수공업부문의 성과를 활용, 인민생활품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제고를 실현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을 강조
- 조선인민군 산하의 생산 단위들을 현대화의 모범 단위로 소개
 - ‘2월 20일 공장’은 북한 최초로 무인화된 생산설비를 갖춰 식품공장 현대화 모범단위가 된 조선인민군 산하 공장으로, 관련 기술자들은 만경대경홍식료공장에 파견되어 기술을 전수해 준 결과 생산 품목 확대와 제품의 질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소개(『로동신문』, 2015.2.11.)
 - 조선인민군 산하 122양묘장의 경우, 북한 최초로 묘목생산 전공정에서 자동화를 실현하여 본보기 단위로 선정

□ 배경

- 국가전략노선의 변화: 군사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의 변화
 -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사회주의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 제기
 - 경제 부문, 특히 인민경제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이 강조되면서 국방공업의 역할에서도 인민경제의 기여 강조
- 과학기술의 경제성 강조
 - 과학기술력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존 과학기술의 활용 및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 또한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강조
 - 기존의 국방공업부문에서 개발, 발전된 과학기술을 인민경제의 생산력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 국방공업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가 상대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수공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
 - 북한은 국방공업에서의 과학기술성과와 생산잠재력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동할 수 있게 경제관리방법과 사업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

◀북한에서 국방공업의 기존 위상과 최근 변화>

○ 기존 위상

- 김정일 시대('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 이는 국방공업 우선정책의 다른 표현
 -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충분히 조성하고, 여기에 설비와 자재, 전력, 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 다른 부문에 비하여 앞세운다는 것” (서재영 외,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년, 21쪽.)
 -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식의 현대적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일[2011년 10월 8일, 12월 15일 발언] 『김정일 선집 (증보판)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년, 426쪽.)
- 국방공업은 아무리 인민경제가 어려워도 손댈 수 없는 불가침 영역
 - “지금 일부 사람들은 나라의 막강한 국방공업에서 무슨 예비라도 나올까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죽어도 목침처럼 베고 죽어야 할 목숨과도 같은 것이며, 거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 (송상원·김용환,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2009년』,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4년, 19쪽)

○ 최근 변화: 새로운 인식

- 군수공업이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수공업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질 것을 강조
 - “전반적경제의 정비보장은 … 국방부문의 과학기술성과와 생산 잠재력을 경제활성화에 동원 이용하며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동할 수 있게 경제관리 방법과 사업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리기성, 『지식경제시대와 새 세기 산업혁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9, 107쪽.)

□ 의미 및 시사점

○ 국방공업부문과 민수경제부문의 경계 약화

- 핵/미사일 개발 관련 군수산업과 운반차량, 계측용 전자제품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발전했다면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음
 - ※ 탑재차량, UDMH 등의 화학연료 등 1기 생산에 약 10만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대북제재 하에서는 자체 생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조남훈, KDI 북한경제리뷰, 2018.2.)
- 조선인민군 산하 공장 및 기업소들의 현대화 추진 상황과 군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유통 부문에서 국방부문과 민수부문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국방부문에서 민수물자의 부분생산(partial conversion)의 시작으로 평가 추정
 - 국방공업에서 발전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인민경제 발전에 토대를 마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 ※ 민수전환이란 무기생산이나 기타 관련 군사 활동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민간부문과 국방부문 사이에서 관련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는 소유권과 무관하게 국방부문의 유무형의 자산이 민간 수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
 - 현재 북한의 경우 전면적인 민수전환이라기보다는 군수공장에서 일부 민수용 장비를 생산하는 등 연관 산업의 활용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민수전환의 한 유형
 - ※ 민수전환의 4가지 유형
 - ① 국방관련 연구시설을 민간 분야의 연구시설로 전환
 - ② 민수물자를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부분 전환(partial conversion)
 - ③ 군수 기술 중에 민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분리하는 분사(spin-off)
 - ④ 민수물자 생산 방식으로 완전전환(complete conversion)
 - 북한의 경우,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사 부문에 머물러 있던 노동력이나 토지 등 생산요소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8 > 대북경제제재와 국산화 정책

□ 개요

- 2차 북미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후, 4월 최고인민회의와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자력갱생 노선의 역사성과 정당성에 대한 언급 강화
 -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시, 현재의 대북경제제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산화 정책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노선의 중요성 강조
- 김정은 시대 정책의 핵심인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국산화정책을 결합하여 자력갱생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모범 사례 적극 소개
- 대북제재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대외경제와의 교류 없는 독자적 국산화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부담으로 작용 가능

□ 현황

-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와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중요성 강조
 - 2019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이자 반드시 고수해야 할 노선으로 자력갱생 노선 강조
 - “조선로동당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이 주되는 정치적과업으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일 대 양양기를 열어놓자는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 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4.11.)
 - 2019년 4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자력갱생을 당의 정치노선으로 재규정
 -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19.4.12.)

- 2019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구호에서도 자력갱생은 강조되었으나 4월 이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방향이자 발전방향으로 자력갱생에 대한 언급 강화
 - 2019년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실현하는 핵심 방안으로 강조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 4월 이후 북한은 자신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노선으로 자력갱생 강조
 -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것은 자력갱생이 결코 현정세의 요구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것이다.” (『로동신문』, 2019.7.3.)
 - 정치사상사업의 주요 과업으로 자력갱생교양 강화의 필요성 강조

□ 특징

- 자력갱생의 실현 방안 마련에서 지식경제라는 시대적 조건의 반영 강조
 -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서 자력갱생 또한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함.
 -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실현되어야 자력갱생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중시노선과 전민의 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교육정책에 우선 투자 강조

- 대북제재 국면에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원칙이 우선 관철되어야 할 원칙임을 강조
 - 자력갱생은 북한을 둘러싼 조건과 관계없이 김일성시대부터 지속된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
 - 그러나 4월부터 문헌을 통해 언급되는 자력갱생의 중요성은 대북제재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

- 자력갱생과 실리 보장의 원칙을 연계하여 인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력갱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 모든 경영전략 작성과 생산계획 수립에서 실리 보장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것이 자력갱생을 구현하는 방안임을 제시
 - 절약형생산공정을 확립한 주요 기업소 및 공장 사례를 제시하며 장기적 전망속에서 실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단위별로 고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자력갱생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주요 부문에서의 성과를 제시하며 국산화 정책 강조
 -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과 탄소하나공법에서의 진전은 주목할만한 성과로 제시
 -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립경제구조의 기반을 조성한 강원도 사례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의 따라 배울 것을 강조

□ 의미 및 시사점

- 북한의 자력갱생의 강조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과도한 국산화에 대한 경계 필요
 - 북한이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철강 부문과 화학 공업 부문의 국산화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임
 -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계 경제에서의 기술적 흐름과 상이한 기술 개발은 경제성 있는 투자라 보기 어려움

- 과학기술과 국산화 정책에 기반한 자력갱생 구현의 강조는 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음
 - 과학기술역량의 강화는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한 정책일 수 있으나 모든 부문에서 독자적인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는 자원 제약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없음

< 9 >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업 부문 개혁

□ 개요

- 2019년 가뭄과 태풍 피해 속에서도 농업부문 생산량은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김정은 집권 이후 포전담당책임제로 대표되는 농업 부문의 개혁 지속
 - 생산과 분배의 단위로 개인을 포함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자발적 증산 노력 유발
 - 과학적 농법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와 생산의 일체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 2019년 농업 현황

- 봄철 극심한 가뭄과 고온 현상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속에서 농업부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
 - 모내기철인 4-7월의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관리 및 물질약농법을 적극 권장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추수 직전인 8-9월 폭우 및 9월 초 태풍 13호가 북한을 지나가는 등 기상 조건 악화로 2019년 곡물 증산에 차질 예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
 - 2019년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그 개념과 위험성, 국제적 상황과 방역대책 등을 상세히 소개(『로동신문』, 2019.2.22., 4.4., 6.5.)
 - 한편, 북한 농업성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공식통보(2019.5.30.)
 -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수의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통제구역 설정 및 수송수단과 돼지우리의 소독 강화, 돼지고기 및 가공품의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시행(『로동신문』, 2019.6.12.)
- 2019년 수확량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농업부문에서 곡물생산량은 최고수확년도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보도(『로동신문』, 2020.1.7.)
 - ※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9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9만 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9.12.16.)
 - 축산부문의 경우, 총생산량 수준에 대한 발표 없이 다수의 농장에서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소개(『로동신문』, 2019.12.24.)

- 과수부문에서도 2019년 계획을 초과하였고 200여 개의 다수확단위와 수천 명의 다수확자들을 배출한 것으로 보도(『로동신문』, 2019.12.16.)

□ 농업 정책 및 제도

○ 농업 부문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도입 및 안착화

- 포전담당책임제는 기존의 생산단위였던 10-15명으로 구성된 분조 내에 개인 혹은 2-4명으로 구성된 소수의 조가 포전을 할당받아 생산과 분배를 수행하는 제도
 - ※ 2012년 북한은 4개의 협동농장(황해북도 미곡협동농장, 황해남도 삼지강 협동농장, 평안북도 신암과 운흥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포전담당책임제 시범 도입한 후 2014년부터 확대
- 포전 담당 농민이 계획 목표를 초과하여 생산한 수확분에 대해서는 개별 농민의 소득으로 귀속
- 2019년에도 내각의 관료들이 현지료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협동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

○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4대 축산업발전 과제를 강조하고 공동축산뿐만 아니라 개인부업축산의 장려 언급(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 4대 축산업발전 과제로 집짐승증자 확보, 먹이문제 해결, 과학적인 사양관리, 철저한 수의방역대책 제시(박수향,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축산물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6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7쪽.)
- 축산물 총생산량에서 공동 축산과 개인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양한 축산 방안 수용
 - “나라의 축산물생산에서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이 차지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은 발언, 『로동신문』, 2019.1.26.)
- 농사에 필요한 퇴비 생산을 증가시키고 육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개인 소유가 금지되어 왔던 소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개인 축산부업 장려
 - 『로동신문』에도 ‘가정세대들의 축산경험’을 통해 염소 2마리에서 시작하여 20마리까지 증가시킨 사례, 8년 만에 닭을 150마리에서 800마리로 늘린 사례 등 소개(『로동신문』, 2019.8.21., 12.11.)
 - 축산물을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증가시키기 위해 개인과 가정에서도 토끼기르기와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독려(『로동신문』, 2019.4.2.)

<사진 II -14> 개인축산 사례



자료: 『로동신문』, 2019.12.11.

○ 농업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 적극 장려

- 북한은 토지 개량을 농축산업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농지의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퇴비(거름)생산과 육류 공급 증대를 위해 개인축산부업 적극 장려
 - ※ 농업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란, 축산을 발전시켜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지의 지력을 높여 이를 통해 늘어난 곡물 생산량으로 축산기지들의 집짐승먹이를 충분히 제공하여 농산과 축산을 병행, 발전시키는 방식임(김동철, “농업생산을 늘여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책략수립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8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4쪽.)
- 특히 농촌지역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 담당 포전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2012년에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체계를 도입한 이후 확대·보급되고 있음

○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 2019년 10월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사하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선진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 (『로동신문』, 2019.10.9.)
 - ※ 1116호 농장은 북한의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로서 종자연구개발기지이자 시험농장임
- 농업연구원과 각 종장의 우량종품종연구소들에서 기후조건에 적합하고 정보당수확고가 높은 작물들의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의 중요성 강조
 - 새롭게 개발된 품종은 시험사업을 반드시 거친 후에 확증된 품종들을 한해서 보급할 것을 강조

- 축산업 또한 과학기술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의 생물공학 성과들을 빠르게 도입하여 육종과 번식, 먹이 확보 문제 해결 강조(『로동신문』, 2019.3.21., 10.26.)

□ 농업 정책의 특징

- 개인 단위를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성 제고 도모
 - 포전담당책임제를 통해 개별 농장원을 포전의 책임자로 인정하고 사회주의분배 원칙의 정확한 실시를 통해 계획 지표의 초과분은 포전 책임자의 소득으로 귀속
 -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업을 모든 단위가 진행해야 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강조하고 개인부업축산도 장려
- 성과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및 분배 원칙을 수립하여 자발적인 생산성 증대 노력 유도
 - 평균주의적 분배 방식을 지양하고 생산 단위들의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9.1.1.)
 - 김정은은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분배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고 지적(김정은,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 2014.)
 - 각 생산단위에서는 약속한 원칙에 맞게 일한 만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을 보장하여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포전담당자별로 예산수확고판정을 정확히 한 데 기초하여 알곡수매계획을 알려주어 그들이 자신의 분배몫을 잘 알고 영농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한 알곡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로력일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단위들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알곡을 더 거두어들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9.11.2.)
- 현실조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 발휘
 - 종자와 물, 노동력과 자재를 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의 지대별 특성과 생산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포전 분담(『로동신문』, 2019.11.23.)
 - 개별 포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분산되어 있는 산간 지역이나 밭농사 지대 경우에는 개별 농민이 포전을 담당하지만 포전 규모가 크거나 대규모

논농사 지역의 경우에는 2-4명이 하나의 포전 담당

- 농사 조건 및 지력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농지를 할당해야 한다는 점 강조
- 농장원들의 노동 수준을 고려하여 씨뿌리거나 물관리 등과 같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분조 차원에서 지원하되 각 분조원들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
- 축산의 경우 각 지역의 생육조건에 적합하고 고리형순환체계에 효과적인 종을 선정하여 키울 것을 강조
 - 예를 들어, 오리의 경우 논농사 지역에서 키우면 농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먹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생육에 유리
 - 오리와 닭을 키우는 농장의 경우 그 배설물을 끓이면 돼지 사료를 대신할 수 있어 곡물 사료 소비량을 줄이면서 가축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로동신문』, 2019.11.12.)

○ 단위 간, 개인 간 경쟁을 통해 생산량 증대와 혁신적인 농업의 도입 유도

- 전국적인 ‘다수확운동’ 과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펼치면서 협동 농장 간, 분조 간, 포전 간 경쟁을 통해 다수의 다수확 농장과 농장원을 배출
- 경쟁을 통해 각 단위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자발적으로 고안하도록 추동하고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 을 통해 평가 진행
- 성과를 낸 경험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농사경험교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범 단위 및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와 각종 행사들을 통해 성과 공유 및 정보교환의 장 제공

- 각종 매체들과 교양활동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등 포전담당책임제 도입을 적극 장려
- 농업부문의 과학기술 개발과 생산의 일체화를 위해 각종 연구 성과와 도입 방안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사들을 개최
 -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열린 전시회, 전람회 등 각종 행사가 2019년에 총 9차례 개최되었으며, 국제 행사도 개최

<표 II -15> 2019년 북한에서 개최된 농업분야 전시회와 전람회

행사일	행사	내용
3.6	제34차 농업연구원 과학기술축전	• 8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
6.11~26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9	• 주제: 《기능성남새품종의육종과도입, 온실남새생산의집약화, 현대화》 • 목적: 온실남새생산과 재배기술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
9.11~12	전국 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 190여 건의 논문 제출
9.17~19	전국농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 300여 건의 논문 제출
9.17~19	전국 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 80여 건 논문 제출
10.29~30	전국 버섯재배기술 경험발표회	• 주요 버섯품종들의 재배기술, 버섯폐기질의 중복리용기술 등에 대한 강습, 발표
11.11~14	평양국제농업 및 식품전람회	• 북한과 중국 등 여러 나라의 60여 개 기업 참여 •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도입된 농업 및 식품분야의 제품들과 과학기술자료들 제출
11.26~29	전국농업부문 기술경험발표 및 과학연구성과 전시회	• 100여건의 과학연구성과와 수백건의 기술경험 발표 • 전시회장엔 400여종에 1,600여점의 새로운 농작물 종자, 수의약품 등 전시
12.3~6	콩농사성과 발표회	• 100여 건 논문 발표

자료: 『로동신문』 토대로 저자 작성

< 10 > ‘수자화’와 ‘수자경제’ (디지털경제)

□ 개요

- ‘수자중시기풍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수자화’ 작업을 실시할 필요성 강조
 - ※ ‘수자’란 디지털의 북한식 표현으로, 이하 디지털로 명기
- 북한은 디지털경제를 지식경제 구현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사업으로 인식하고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정책은 북한 과학기술중시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향후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특징

- 디지털 경제란 모든 경제활동이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로서 정보화된 경제를 의미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
 -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

※ 디지털화는 넓게는 Digitization, Digitalization 및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문서, 그림, 영상, 소리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1980년대 말에 시작된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예: 자료교환 공유의 온라인화), 이어 등장한 서비스의 디지털화(예: 중개/컨설팅/교육/상거래의 온라인화),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화(예: 전자책, 음악/영화 다운로드), 디지털상품의 거래(예: 백신SW, 음악/영화 스트리밍) 등이 포함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결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경제에서는 모든 경제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정보화하고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임
 - 일차적으로는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화하여 축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처리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여 발전
 - 디지털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인 지식과 정보는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짐
 -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짐

□ 디지털경제 구현을 위한 북한의 노력

- 북한은 디지털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강조
 - UN이 최근 발간한 『디지털경제보고서 2019』를 인용하면서 디지털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높은 발전 잠재력 언급
 - “경제전문가들은 수자경제가 앞으로 세계경제의 60%의 몫을 차지하면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동신문』, 2019.10.2.)
 - 『로동신문』에서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 러시아, 독일 및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책과 성공 사례 등을 소개(『로동신문』, 2019.1.24., 2019.5.5., 2019.5.13., 2019.6.24., 2019.9.6.)

- 중국의 디지털 China와 스마트사회건설계획, 러시아의 디지털경제계획, 독일의 공업4.0(Industry 4.0) 등의 사례 소개

○ 북한이 추구하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서 디지털화의 필요성 강조

- 전사회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풍의 확립 강조
 - “전사회적으로 수자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김정은, 『로동신문』, 2019.6.22.)
- ‘지식경제’란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과 지식의 축적 및 그 활용에 의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로서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경제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全)부문에서 정보화가 진행될 때 구현될 수 있음
 - “수자경제는 수자기술을 기초로 하여 경제의 수자화가 실현된 경제로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질적인 비약과 혁신을 가져오는 지식경제시대의 경제발전유형”(『로동신문』, 2019.11.28.)
 - “수자경제 구현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의 정보화, 수자화, 지능화 구현”(『로동신문』, 2019.11.29.)

○ 북한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 내각 등 경제지도기관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정보에 기반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함
- 각 생산단위에서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리 보장의 원칙’에 맞게 경제활동의 최적화, 최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설계 및 생산 과정에 디지털화된 현대적 기술을 적극 도입

○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구현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정보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중시 정책 강화

- 과학기술개발과 관련,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개발·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
 - “과학기술중시기풍은 본질에 있어서 수자중시이며 수자중시에 과학기술중시 기풍 확립의 중요한 방도가 있다.”고 밝힘(김일성종합대학홈페이지, 『과학기술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해나가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중요한 요

구』, 2019.11.23.)

- 디지털화된 지식의 공유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초고속광대역통신망 등 정보통신 관련 하부구조 조성
 - 북한은 인민대학습당이 보유한 최신과학기술 자료들을 각 연구기관과 생산단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로동신문』, 2019.8.24.)
-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식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제도 마련
 - “교육부문에서는 교수내용과 방법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을 최신과학지식을 소유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로동신문』, 2019.6.22.)

□ 현황

- 2019년 북한이 집중했던 첨단기술은 인공지능 부문으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
 -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안면인식, 음성인식, 문자인식 등을 개발, 경제 분야에 적용하고 있음
 - 의료, 교육, 산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 평양국제공항에 안면인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업부문에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생육상태 평가방법 개발(『메아리』, 2019.1.25., 2019.9.7.)
 - 교육 부문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문서읽기 프로그램 개발(『메아리』, 2019.10.6.)
 - 보건의료분야에서 원격 진료 및 임상 자료의 디지털 작업 등을 수행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로동신문』, 2019.8.14.)
- 전시회와 전람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의 이론과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참여자들 간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9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수자경제와 정보화열풍’을 주제로 <전국정보화성과 전람회-2019> 진행
 - 1,600여건의 프로그램 및 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으며 평가를 통해 10대 정보화 모범단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기업,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제품 선정(『로동신문』, 2019.11.2.)
 -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안면인식, 문자인식, 음성인식 등 각종 인공지능 부문 각종 프로그램, 3D 프린팅 기술과 각종 스마트폰 앱 소개(『로동신문』, 2019.11.6.)
 - 프로그램 작성 경연 대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위들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세계적 추세 및 각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발표회 진행(『로동신문』, 2019.11.6.)

- 2019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생산공정의 로봇화’를 주제로 <전국로봇부품 과학기술성과 전시회-2019> 진행(『로동신문』, 2019.10.2.)
 - 여러 단위에서 연구개발한 각종 로봇들과 그에 대한 설계, 기계 부속품, 구동 장치와 조종 프로그램들 출품(『로동신문』, 2019.10.6.)
 - 각 단위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기술교류 사업을 진행하여 기술 확산 및 생산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시사점

- 디지털화는 과학기술발전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최근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 핵심인 디지털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필수
 - 하드웨어 구축의 측면에서 첨단기자재의 확보를 위해서는 대외무역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한계 노정
 - 기술무역 활성화를 통한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 창출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성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의 인트라넷 방식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은 디지털경제 발전에 한계로 작용

3 사회·문화 분야

- < 1 > 가요 ‘우리의 국기’ 로 본 국가 상징 재정립
- < 2 > 북중 정상급 문화외교
- < 3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의미
- < 4 > 대집단체초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 < 5 > 선정선동 사업의 혁신과 참신
- < 6 > 교육사업의 변화
- < 7 > 친환경사업 강조 동향
- < 8 > 준법기풍 강조 속 사회통제 강화
- < 9 > 무형문화 유산 보존 정책의 확대·강화

3 사회 · 문화 분야

< 1 > 가요 ‘우리의 국가’로 본 국가 상징 재정립

□ 개요

-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 3면에 가요 ‘우리의 국가’를 소개. 가요가 『로동신문』을 통해 소개된 적은 있었으나 소개하는 시점, 지면, 분량 등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

□ 경과

- 2019년 1월 1일 가요 ‘우리의 국가’ 등장
 -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 3면에 가요 ‘우리의 국가’를 소개
 - ‘우리의 국가’ 가사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악보 위에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를) 창작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친필 서명 게재
 - 『로동신문』에 최고지도자의 싸인이 들어간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일임. 과거 정성욱 세계마라톤선수권대회 우승 때 싸인을 게재한 적이 있음
 - 신년사가 실리는 1월 1일에 가요를 ‘신년사’에 이어서 소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며, 신문의 절반을 소개한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님

<사진 II -15> ‘우리의 국가’ 노래 소개



자료: 『로동신문』, 2019.1.1.

- ‘우리의 국기’에 대한 선전 사업
 - 2019년 1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영광의 국기를 높이 날리며 인민은 승리하리라 - 조국강산을 진감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에 대하여」라는 기사를 전면에 게재
 - 『로동신문』을 비롯한 신문 기사를 통해 가요 ‘우리의 국기’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적극적으로 소개

-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으로 방영
 - 가요 ‘우리의 국기’는 텔레비전 방송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소개되는 노래이자 주요 행사의 시작과 끝에 불리는 등 북한을 대표하는 가요로 자리매김

- 북한의 대외 공연에서 개막곡으로 연주
 - 2019년 1월 26일부터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중 수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에서 서곡(序曲) ‘장강의 노래’에 이어 가장 먼저 연주한 곡도 ‘우리의 국기’였음
 - 2019년 6월 21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위한 특별 공연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에서도 서장의 개막곡으로 연주함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는 가요 ‘우리의 국기’ 연주로 시작하여, 양국의 국기가 운동장 반대편에서 마주면서 등장하여 ‘조종친선은 영원하리’ 연주 속에 양국 국기 게양
 - 공연의 후반부에서 다시 ‘우리의 국기’를 노래 함

- 학교 미술교육에서 ‘국기’ 교육
 - 2018년 12월 29일 『로동신문』에는 「미술교육과 우리 생활」에서 미술교육에서 국기를 비롯한 국가 상징 교육 강화 촉구
 - “초보적인 미적의식과 미적정서를 안겨주는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단계의 미술교육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우리나라의 국기와 국장, 국수, 국건, 국조, 국화를 비롯하여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나라는 상징하는 대상들을 사진으로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각이한 종류의 미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어야 한다.”

□ ‘우리의 국기’의 의미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교양 사업의 핵심 선전 가요
 -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7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내세우면서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 상징 교양 사업의 일환
 - 북한은 2018년부터 본격적인 국가 상징물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음. 국가

상징 교양 사업은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장(國章) 등의 공식 국가 상징 뿐만 아니라 국화(國花) 목란꽃, 국수(國樹) 소나무, 국조(國鳥) 참매, 국견(國犬) 풍산개, 국주(國酒) 평양소주, 국풍(國風), 국어(國語), 국풍(國風) 등의 문화적 국가 상징으로 확산

- 2015년에 출판한 『조선의 국수 소나무』(평양출판사)에서 소나무의 의미와 상징 소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소나무는 오늘 우리 민족의 녀과 기상,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는 나라의 국수로,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으로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사랑속에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고 의미 부여
- 『로동신문』 2018년 12월 9일에 국조 참매를 소개한 기사인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이 어린 조선의 국조-참매」 게재, 2018년 12월 2일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풍산개」를 수록하는 등 국가 상징에 대한 기사 집중 소개
- 여러 국가 상징에 대한 교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요 ‘우리의 국기’ 입

□ 영향

- ‘우리 민족제일주의’ 를 앞세운 교양사업으로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 상징을 통해 인민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임
- 내부적으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정’ 이라는 담론에서 사회주의 율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지붕 아래 가족’ 으로서 국가주의 교육 진행
-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북한식 세계화를 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 > 북중 정상급 문화외교

□ 개요

- 2018년을 기점으로 북한과 중국의 문화외교가 강화되고 있음. 2018년 4월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규모 중국 예술단의 북한 방문 이후 국가급 차원의 문화외교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음

□ 경과

- 2018년 4월 김정은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북중 문화외교 가동
 - 2018년 4월에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에 송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규모 중국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발레 등을 공연

○ 2019년 1월 북한예술단 방중 공연 성사

- 2019년 1월 23일 북한의 대규모 친선예술대표단이 평양을 출발, 24일 베이징에 도착하여,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공연장인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리허설을 갖고, 26일부터 28일까지 친선예술 공연 진행
- 1월 27일 시진핑 주석이 평리위안 여사와 국가대극원에서 공연 관람
- 1월 31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방문 공연을 마치고 온 북한 친선예술대표단을 만나 기념사진 촬영 등 언론 홍보

○ 공연단 구성

-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대표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단장으로 280여 명의 규모로 구성
- 북한 예술대표단은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악단 등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예술단체들로 구성
- 친선예술대표단의 규모는 280여 명으로 북한 예술단의 방중 공연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
 - 북중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2008년에 있었던 가극 ‘꽃과는 처녀’ 순회 공연의 경우에는 예술단 규모가 180명이었음

○ 공연레퍼토리

- 공연은 중국과 북한의 친선을 주제로 한 가요, 연주, 합창 등으로 구성
 - 서곡으로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를 시작으로 가요, 클래식 연주를 포함한 관현악연주, 기악연주, 합창, 가요, 가무 등의 종합 공연으로 진행
 - 중국 가요로는 ‘장강의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사회주의 좋다’,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하네’, ‘나의 조국’, ‘군항의 밤’, ‘영웅찬사’ 등이 있었고, 북한 가요로는 ‘우리의 국기’, ‘달려가자 미래로’, ‘사회주의 지키세’, ‘사회주의 전진가’ 등이 있었으며, 조중친선을 주제로 한 가요로는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가 있었음
- 공연 중간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 장룡식이 지휘봉을 맡아 세계명곡 메들리인 ‘친근한 선율’ 연주

□ 예술대표단의 방중 공연 의미

○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상급 문화공연

- 김정은 체제에 이루어진 첫 방중 공연
- 북한 예술단의 중국 방문 공연은 북중 수교 60주년을 앞둔 2008년 이후로 없었음
 - 2008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분위기 속에서 문화교류 중단
 - 2015년 12월 현송월단장의 모란봉악단 공연이 예정되었으나 공연 직전 취소

- 문화외교를 통한 관계 회복 노력
 - 2018년 4월 대규모 중국 예술단의 북한 방문 공연 이후에 이루어진 대규모 공연으로 문화외교를 통한 양국 관계 회복의 상징적인 공연
 - 최고지도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초청 공연으로 북중 친선외교의 일환이었으며 예술대표단의 대표는 문화계 인사가 아니라 대외담당인 리수용이었음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아니라 중국 관료와 중국 주재 북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초청 공연으로 진행
 -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예술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역대 친선예술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구성하였음. 최대한의 형식과 의전을 갖추었음
- 양국 정상의 합의와 참여
 - 북한예술대표단의 중국 공연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약속에 따라서 진행된 공연으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 형식으로 진행
 - 국가 최고지도자의 합의에 따라 국제관계 부서에서 행사를 주최한 외교행사로 국민급에 해당하는 문화외교

□ 영향

- 중앙예술단체를 포함하여 북중 문화외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지방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

< 3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의미

□ 개요

-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처음 등장하였음. ‘우리 국가제일주의’ 는 2017년 등장한 이래로 2018년부터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음
- 신년사에서 공식 언급된 만큼 ‘우리 국가제일주의’ 는 북한의 새로운 아젠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과

-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공식 언급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야” 한다고 언급

○ 2017년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장

- 2017년 11월 30일자 『로동신문』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에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 새겨야 한다.” 고 언급

※ 화성 14호 발사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급

○ 2018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 기사화

- 『조선녀성』 2018년 2호에 박스기사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게재

○ ‘우리 국가제일주의’ 선전 강화

- 2018년부터 『로동신문』을 통해 국가 상징을 소개하는 연재를 기획, 게재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핵심은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있으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소개

○ 신년사 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 관련 기사 수록

- 2019년 1월 8일 『로동신문』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을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게재
 - 2019년 1월 1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
 - 2019년 1월 17일 사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자」
 - 2019년 1월 18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떨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
 - 2019년 1월 20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 2019년 1월 21일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 2019년 1월 22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 2019년 1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

업」 등의 기사 게재

- 최근까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관련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교양사업으로 강조

○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교양 사업 강화

- 2019년 2월 20일 『로동신문』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를 게재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
 - ‘우리 국가제일주의 추동을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 국풍 수립’을 강조하면서 “전인민적인 애국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을 확립하며 국화와 국수, 국조, 국견과 같은 국가 상징들을 잘 알고 애호하는 사회적풍조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교양 사업 강화를 위한 단위, 지역, 생산현장별 우수 사례 보고 대회 개최
- 2019년 3월 8일 『로동신문』 사설 「조선녀성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들이다」에서 “오늘 우리 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다. 중대한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모든 공민들의 사상정신과 일본새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녀성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고 언급
- 2019년 3월 30일 『로동신문』 기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에서는 “중대한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전체 인민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

○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주체사상

- 2019년 3월 31일 『로동신문』 기사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위대한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나가는 걸출한 위인, 희세의 정치가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비롯한 사상리론들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식, 주체식으로 풀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고 언급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수령님들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식, 주체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강조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내용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핵심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
 - 2019년 1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에서는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 전면적 국가부흥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장
 - 2019년 3월 30일 『로동신문』기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로 설명
-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한 자부심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으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분야에서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는것”으로 규정
 - 실천 방안으로 김정은은 체제의 ‘사회주의 문명국’과 동일한 것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것을 제시
- ‘특수’ 사회주의에서 ‘일반(보편)’ 사회주의 국가 지향
 - 2016년 조선로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당의 위원회와 당 조직을 통한 사회 운영에 무게를 둔 사회주의 국가로의 지향을 보여줌
 -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수령’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후 수령에 대한 과도한 신격화 경계
-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 교양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려는 교양 사업의 핵심 주제
 - 2019년 7월 4일 『로동신문』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자 - 불세출의 위인, 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에서 “그렇다.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원수님의 고결한 애국헌신의 결정체이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 원수님 아니시였다면 우리 인민이 어떻게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긍지높

- 이 바라볼수 있고 천지개벽의 불길이 타번지는 이 땅을 가슴에 안아보며 끝없는 감격과 희열을 터칠수 있으라.” 라면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소개
- 2019년 7월 4일 『로동신문』에 정론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자」를 게재하여, “령도자가 위대하여 당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하다. 태양의 강국, 바로 이것이 오늘 행성에 눈부신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진모습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다.” 면서 김정은의 업적 찬양

□ 영향

-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 정체성 강화. 기존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민족보다 국가적 위상을 앞세우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
-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강조와 함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 사업으로 ‘국가’와 관련한 상징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속의 일원으로 국가관 재정립 추진
- 향후 남북을 포함한 대외 관계에서 ‘국가성’과 ‘세계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에서도 민족적 특수성보다는 국가대국가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4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 개요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6월 20일 북한을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관람
 - 리설주, 팽려원 동행, 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재룡 등의 간부들을 동행한 국가급 행사로 진행

□ 경과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순서
 - 공연전 행사로 문화상 박춘남이 특별히 준비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에 대한 발언, 화한 증정 등 진행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본 공연 진행

- 공연 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라운드로 나가 출연진 인사, 관중 인사 진행하고 주석단으로 이동, 퇴장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 내용

- 가요 ‘우리의 국기’ 연주로 시작하여, 양국의 국기가 운동장 반대편에서 마주면서 등장
-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연주 속에 양국 국기 게양
- 북중 정상들의 외교 행보 영상물 상영
- 중국 민속무용과 환영춤 공연
- 중국가요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조국을 노래하네’, ‘나는 그대 중국을 사랑하네’, ‘새 세계’, ‘붉은기 펄펄’ 연주
- 집단체조를 비롯한 현장 공연과 삼지연관현악단 등 북한 예술단 연주

○ 특별 편성 공연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는 기존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주요 장면을 결합하고, 2019년 2월 북한예술대표단 공연의 재공연으로 구성
- 후반부에는 2019년 1월 중국 베이징 대가극원에서 공연하였던 북한 예술대표단의 레퍼토리로 구성하였는데, 후반부를 예술단의 연주로 채운 것은 기존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는 없었던 형식
-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2018년에 창작한 ‘빛나는 조국’과 2019년에 새롭게 창작한 ‘인민의 나라’가 있었음. 2018년 공화국 창건 70년을 기념하여 공연한 ‘빛나는 조국’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2019년에 새롭게 창작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는 공연 직후 김정은의 질타를 받았고 이후 새로운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최고 수준의 환대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는 북한에서 연례 행사로 준비한 공연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성 특별 공연이라는 것을 의미
-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되는 공연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다는 것을 상징

□ 의미

○ 북중 관계가 최고 수준임을 과시

○ 북한 인민들에게 동맹관계 선전 효과를 통한 내부 통치력 과시

< 5 > 선전선동 사업의 혁신과 참신

□ 개요

-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 2019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교양과 사회주의 생활 기풍이 사업의 중심이 되었고, 시대에 맞는 선전선동 사업을 요구

□ 선전선동 사업의 기초

- 2019년 1월 24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9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주력 방향 확인
 -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청년동맹일군들이 참가한 회의로 북한의 국내 정책 기초 확인
- ‘자력갱생’의 기초 확인
 - 신년사를 ‘자력갱생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온 나라 청년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고무적 기치’로 밀고 나갈 것을 결의
 -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하며 삼지연군꾸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 등 대상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가 될 것을 요청
-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에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추동
 - 선대 수령 및 령도자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 보위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을 강조
- 선전선동사업의 핵심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 ‘청년동맹조직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 진행
 -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며 준범기풍을 철저히 세워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을 창조하고 조국보위를 제일국사로 간주하는 애국기풍이 온 나라에 차 넘치게’ 할 것을 강조
 - ‘청년동맹일군들부터가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튼튼히 무

장하며 청년동맹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 전개하여 큼직큼직한 실적’을 발휘할 것을 강조

-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치는데 큰 힘을 넣어 모든 동맹원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며 대중체육 활동과 학교체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 할 것을 당부

□ 선전선동 사업과 참신

○ “보다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정치사상 사업 진행 강조

- 2019년 3월에 있었던 제 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에서 “오늘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고무된 인민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키고 그것을 실제적이며 비약적인 사회주의건설성과에로 지향시키는 기본방략은 정치사상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전투적으로 벌리는데 있습니다.” 라고 강조
- 이후 ‘참신’ 한 교양 사업에 대한 논의 지속적 전개

<사진 II -16>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자료: 『로동신문』, 2019.3.9.

○ ‘실생활과 연결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참신한 교양 사업 추진

- 2019년 3월에 있었던 제 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에서 “우리 시대의 애국기치인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도 추상적인 선전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강대함은 그 어떤 특별한 힘에 있는것이 아니라 매 공민들의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는것을 누구나 명심하게 하여야 합니다.” 고 언급

-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사상교양 사업 전개 강조
 - 『로동신문』은 2019년 3월 9일 사설 「참신하고 강력한 선전선동활동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자」를 통해 “선전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것은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필수적요구” 라고 하면서 선전사업에 대한 혁신 요구
 - “선전선동활동을 실감있게, 대중이 스스로 공감할수 있게 하는데 사상교양 사업의 생명력이 있다.”, “내용이 새롭고 깊이가 있으며 형식과 방법이 참신한것만큼 선전선동사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진다.” 는 점 강조

-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교양사업 방법 탐구’ 강조
 - 『로동신문』 2019년 3월 23일자 기사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자」에서도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교양사업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사상전을 진공적으로, 연속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고 강조

-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참신한 선전선동방법 창조
 - 『로동신문』 2019년 6월 11일의 기사 「사상사업은 당사업의 핵」에서는 이천군당위원회 사업 일군을 소개하면서 선전선동 사업의 혁신 강조
 - “이천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것이 어렵고 긴장한 속에서도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목적지향성있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비결은 결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당위원회가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공세적이며 다각적이며 입체적인 참신한 선전선동방법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실천에 적극 활용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비상히 양양시켜 나간데 있습니다.》” 고 소개

- 다매체편집물을 활용한 선전선동 사업 전개
 - 『로동신문』 2019년 6월 11일의 기사 「공세적이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에서는 “사상교양의 도수와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공세적이며 다각적인 참신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다매체편집물을 활용한 선전사업 소개
 - “작업현장에 이동강의판을 놓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강의를 받는 종업원들에게는 시각적으로 강의의 내용이 잘 안겨오지 않았”는데, “강사들의 강의에 다매체편집물을 만들어 리용하는 문제와 그 내용을 혁신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 하였다고 소개

- 각지의 모범강연강사들의 선전 활동 소개
 - 2019년 9월 15일 『로동신문』 기사 「우리 식의 창조본때, 투쟁기풍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강연 선전활동 - 각지 모범강연강사들」를 통해 전국 각지의 모범강연강사들의 선전활동을 소개하면서, “당초급선전일군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화선식강연선전을 맹렬히 벌려나가고있는 각지 모범강연강사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은 자력갱생대진군에 펼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분출시키고 있다.”고 평가

□ 영향

- 인민생활 중시, 세계화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내부 사상 단속을 위한 선전선동 강조
- 변화하는 시대와 세태에 맞는 방식의 선전선동 사업을 강화
- 경제의 혁신과 변화 속에서도 유일사상체계를 세련된 방식으로 선전활동 강화

< 6 > 교육사업의 변화

□ 개요

- 교육사업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왔음
 -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회문화 부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분야가 교육 분야였으며, 9월 3일에는 5년 만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 개최
 - 교육사업에서 교수방법과 교육환경을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매기는 판정사업 진행

□ 경과

- 2019년 신년사 사회문화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교육에 관해 언급
 -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가 바로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서, “세계적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는 교수 내용과 방법을 혁신”을 요구
 - 이를 위해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낼 것을 강조

○ 과학교육과 인력 양성

- 교육을 ‘교육과 과학은 자력갱생 대진군의 견인기’ 로 규정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면서 “자력갱생대진군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김성남, 「(론설) 과학기술과 교육은 자력갱생대진군의 견인기」, 『로동신문』, 2019. 6. 17.)
-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혁명의 골간을 키워내는 인재육성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과정안과 교수요강, 교수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가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첨단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창조” 할 것을 요구(김일성종합대학 1부총장 리국철, 「당의 령도따라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드높은 열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혁명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로동신문』, 2019. 1. 1.)
- “과학기술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 국력을 과시하는 중요 징표라면 과학기술의 어머니는 교육이다.” 라면서 교육을 과학화, 경제발전, 인민생활과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 강조

○ 2014년 9월 3일 개최한 제14차 전국교원대회 개최를 전후하여 『로동신문』에 대회 소식 및 교육 관련한 다수의 기사 집중 게재

- 2019년 9월 1일 『로동신문』의 기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많은 교수방법 창조」에서 ‘현대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개
- 2019년 9월 1일 『로동신문』의 기사 「과학기술의 어머니-교육」을 통해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앞두고 교육 문제 조명
- 2019년 9월 1일자 『로동신문』 기사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인재양성기지들 - 창립 60돛을 맞는 각지 대학들에서」를 통해 60년을 맞이한 대학들 소개
- 2019년 9월 3일 『로동신문』사설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의의깊은 대회」,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의의깊은 대회」을 통해 제14차 전국교원대회 개최 의미와 소식을 비중 있게 소개
- 2019년 9월 3일 『로동신문』 기사 「교육발전을 중시하는 쿠바」를 통해 “피델 까스트로가 교육이 없이는 혁명도 없다는 력사적발표와 함께 나라의 문명퇴치운동을 받기” 하였다면서 쿠바의 교육 상황 소개
- 2019년 9월 5일 『로동신문』 기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령적인 로작을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불같은 결의」를 비롯하여 ‘창조적이며 혁신

- 2019년 9월 6일 『로동신문』 기사 「교육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반향」을 통해 김정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향 기사 게재
- 2019년 9월 7일 『로동신문』 기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 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를 게재
- 2019년 9월 19일 『로동신문』 사설 「교원들은 교육대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는데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하자」를 통해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로 총궐기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대회”였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당은 오늘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이자 곧 경제강국건설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교원으로서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직업적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

□ 사업

- 정보화 사업 등 IT 분야 인력 육성을 위한 학과 및 전문학교 신설
 - 37개의 대학에 정보보안학과, 나노재료공학과, 로봇공학과 등 정보화와 첨단 과학 분야의 학과 75개를 신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
 - 보통교육 부문에서 정보특성화고에 해당하는 ‘정보기술고급중학교’를 각 도에 11개 신설
- 교수방법 개발 소개
 - ‘현대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사례 소개
 -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평양공업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과 공장대학에서 8,600여 개 학과의 교수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정보화하여 교수 내용의 개선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수단, 수법들을 적극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교수형태를 잘 결합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며 ‘교수방법과 교수 수단과 수법에 대한 혁신’ 촉구

-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습득하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수준을 계속 높이며 실천과 실험실습, 기능훈련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고 강조하는 등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 제고 촉구

○ 모범학교에 대한 ‘영예의 붉은기’ 수여

- 2019년 9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01호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를 통해 우수 학교에 깃발 수여
- ‘영예의 붉은기’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 를 대상으로 수여
- 3중영예의 붉은기는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함흥시 회상구역 회상소학교가, 2중영예의 붉은기는 명간군 룡덕고급중학교가, 영예의 붉은기는 평양국제축구학교, 서성구역 상신초급중학교, 은정구역 위성초급중학교가 받았음

○ 교육사업 평가

- 교육 사업에서도 경쟁체제가 선포되어 각 도별로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판정사업을 진행
- 판정사업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초등 및 중등교육사업부문’, ‘교원양성사업부문’, ‘고등교육사업부문’, ‘교육조건보장사업부문’ 에서 진행. 항목별평가지표들과 점수를 규정하고, 판정기준표를 종합하여 교육사업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
- 교육사업 판정은 시도별, 시군별로 진행하고 결과를 공포하며, 연말까지 진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결정
- 2019년에는 1월, 3월, 5월에 사업 판정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9년 6월 16일 『로동신문』 기사 「당정책관철을 위한 도들사이의 경쟁소식 -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 교육사업에서 어느 도가 앞서나가고있는가」 에서 구체적인 평가 결과 공개
- 교육사업판정에서는 전력을 비롯하여 부족한 교육 시설을 해결하거나 교수강습소 등의 시설 설립, 교육 자재 문제를 잘 해결한 기관에 높은 평가 부여

□ 의미

- 교육 분야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교수 방법 개선, 첨단 교육 환

경 구축, 새로운 교재 개발 등의 지속적 혁신 요구

- 교육사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당에서 진행하는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교육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7 > 친환경사업 강조 동향

□ 개요

- 환경문제는 김정은 체제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여 환경보호 문제를 ‘김정일 애국주의’, ‘후대관’ 과 결합하여 국가를 위한 애국 사업, ‘후대’ 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환경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한 회고에서 엄혹한 시기였지만 산림과 자연을 파괴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평가하면서 나무 심기를 비롯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소개
-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녹색 에너르기’ 를 비롯한 친환경사업의 발전가능성 강조

□ 김정은 체제 핵심 사업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국토의 효율 관리와 자연 보호, 산림 복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
 - 김정은, 2012년 4월 6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강조(「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2012. 4. 6」, 『조선중앙통신』, 2012. 5. 8.)
 - 김정은, 2015년 2월 26일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산림복구 문제 강조(「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2015. 2. 26」, 『로동신문』, 2015. 2. 27.)

- 김정은 위원장 ‘고난의 행군’ 시기 산림 훼손 문제 지적
 -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사람들이 식량과 땀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망탕 찍은데다 산불방지대책도 바로세우지 못하” 였다면서 “나무가 없는 산들을 보시며 이것도 고난의 행군후과” 라고 비판(김정은, 2015. 2. 26.)

- 김정일 애국주의와 산림 복구를 연계
 -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 로 강조(「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 7. 26.」, 『조선신보』, 2012. 8. 3.)

- 후대를 위한 사업으로 ‘후대관’ 과 연결
 - 산림복구 사업은 ‘애국주의 사업’ 인 동시에 후대를 위한 사업으로 후대관과 연결됨. 즉 산림을 복구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사업’ 으로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은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숭고한 리념” 으로 강조(「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자」, 『로동신문』, 2018. 2. 26.)
 - 환경보호 사업 또한 후대를 위한 사업 “으로 ”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산림복구전투와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사업, 환경보호사업,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후대들의 삶의 터전을 공고히 하고 더 훌륭한 미래를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고 강조(명주혁, 「후대들의 행복을 가꾸는 것은 우리 세대의 신성한 의무」, 『로동신문』, 2019.08.17.)

- 산림복구를 통한 경제 발전과 자원화
 -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에서 ‘황금산’ 용어 등장. “산림복구전투를 년차별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한다.” 고 강조

□ 산림복구에서 환경문제로 확산

- 산림복구에 대한 강조에서 환경문제로 확대
 - 북한의 환경관련 법으로는 1986년에 「환경보호법」 을 제정한 이후로 1997년 「바다오염방지법」, 1998년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이 있었음
 -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 관련 법령 중에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기본 권리로서 환경권이나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함(이윤· 차은경, 2014.)

- 2004년 8월 27일 북한은 유엔환경계획(UNEP)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북한의 환경상황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인 『북한: 2003환경생태보고서』(DD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를 작성하여 발표한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2005년 「환경영향평가법」, 2005년 「대동강오염방지법」 등을 제정하였음.(김정순, 2010.)
 - 2015년 「산림법」, 「환경보호법」, 「도시경영법」 등을 개정
-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산림복구를 비롯한 환경문제 언급
-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김정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를 진행
- 기념보고회에서 중앙양묘장 지배인은 “중앙양묘장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까지도 자신의 품에 안아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시며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조국의 래일을 앞당겨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현실의 결정체”라고 강조
- 함경북도 경성군 양묘장 건설 현지도
- 함경북도 경성군에 중평남새온실농장과 함께 연간 2,0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 건설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도를 하였음
-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문제의 기사화를 통한 관심 제고 노력
- 『로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문제 관련 기사를 게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2019년 3월 28일 『로동신문』, 「심각해지는 물위기,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10명당 1명이상이 먹는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지구 환경 위기와 물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
 - 2019년 7월 1일 『로동신문』사설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자」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고온과 가뭄, 큰물 등 이상기후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되는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예측불가능하게 자주 나타나며 오래 지속되고있는 것이다. 번덕스러운 날씨로 볼 때 우리 나라에도 큰물과 강한 비바람이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면서, 최근 기상 변화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
 - 2019년 9월 15일자 『로동신문』기사 「지구온난화로 초래되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서는 “최근시기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이전에 비해 약 1℃ 높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이상기후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개

○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책 소개

- 2019년 7월 6일 『로동신문』 기사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지구온난화문제」(본사기자 손소연)를 통해 “지구온난화방지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엄혹한 현실은 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면서 유엔사무총장의 기후변화 대책 노력 강화 호소를 소개
- 2019년 8월 26일 『로동신문』 기사 「보다 심각해지는 수지오물처리문제」에서는 “수지오물처리사업은 몇몇 개별적나라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지구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독적후과를 미치는것으로 하여 모두가 관심해야 할 사업이다. 특히 그러한 문제를 산생시킨 서방나라들부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플라스틱 해양오염문제를 소개

○ 환경보호 사업 중시정책을 선전

- 2019년 8월 10일자 『로동신문』은 사설 「송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에서 “인민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은 언제나 환경보호사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서, 환경보호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당에서 환경보호 사업 중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 환경보호는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환경보호사업을 잘 해야 “풍치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생활환경이 마련되고 우리 인민이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갈수 있다.”고 소개

□ 환경보호와 첨단산업

○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업 소개

- 환경보호사업을 중시하는 것은 ‘오늘 세계적 추세’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대기와 강, 바다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장 기업소의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정화, 가두리양식장의 생태보호, 동물자원 보호, 바다자원 보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송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로동신문』, 2019. 8.10.)

□ 의미

-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미
- 산림보호 차원에서 나아가 환경 문제를 정책의 중요 문제로 삼고,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세계적 추세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사업에도 관심을 둘 것임

< 8 > 준법기풍 강조 속 사회통제 강화

□ 개요

- 준법을 강조하는 준법기풍은 김정은 체제에서 특히 강조하는 역점 사업의 하나로 사회주의의 국풍(國風)으로서 강조하고 있음
 -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빈도가 훨씬 많아졌음. 이와 함께 법을 잘 지키자는 준법 기풍,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 확립을 강조
 - 이는 과거와 달리 계약과 법에 의해 사회가 작동되는 법치국가로의 전환점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

□ 경과

- 인민들에게 도덕교양을 통한 국풍 수립을 강조
 - 2019년 2월 3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황금철의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라는 기사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 기풍이 국풍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하면서,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도덕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침예한 계급투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적 통제를 강화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전체 인민이 강대국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으로 굳

혀야 합니다.》”

-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기세드높이 문화분야에서도 세상에서 으뜸가는 문명국을 건설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풍부한 정서, 고상한 도덕을 지니고 생활을 문명하고 락천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는 문화정서생활은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 2019년 2월 24일자 『로동신문』은 「우리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기사를 통해 준법 기풍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관련한 ‘당의 영도’ 사업으로 인정하고,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당의 역할과 당원의 청렴을 강조
 - 준법 기풍을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위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풍양속의 중요성’, ‘비도덕적·비문화적 현상’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주 혁명로선, 주체노선, 사대와 교조, 외세배격)의 국가건설 및 관련 활동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관료주의 배격, 부정부패 반대,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당적 령도’ 강화를 촉구

○ 사회정화 차원의 쇄신 요구

- 2019년 4월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하면서, 당 사업의 핵심 방향의 하나로 부정적인 현상을 뿌리 뽑을 것을 강조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간부들속에서 만성적인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뿌리뽑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관철하기 위해 헌신분투하며 참된 인민의 충족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고 보도(「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로동신문』, 2019.4.10.)

○ 준법기풍의 내용은 우리 생활양식과 도덕 제일주의

- 2019년 4월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는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 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집단주의적 생활기풍과 도덕 기풍을 발휘’하여 시대적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량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리 향유” 할 것을 강조

-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의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라고 언급(「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4.13.)

○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투쟁 과제로 준법 기풍 강조

- 2019년 5월 19일 『로동신문』은 「국가 사회생활에서의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 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 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면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 라는 점 강조

□ 의미

○ 준법 기풍 강조는 다음 몇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음

- 첫째, 사회통제의 출발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상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음
-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필요한 법을 만들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법무 생활을 강조함
- 셋째, 북한 사회의 부패, 관료주의, 뇌물 등의 부정적 현상을 바로 잡아 사회기강을 잡겠다는 의미가 있음

□ 전망

○ 준법 기풍의 강조는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법을 상위에 두고 법치를 실천하려는 법치 우선의 실천적 행위로 볼 수 있음

○ 당의 주요 간부들에게 청렴한 관리자로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인민과 만나는 당원들의 대민 봉사 정신을 강조

○ 경제 개혁과 외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통제와 검열의 도구로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강조

< 9 > 무형문화 유산 보존 정책의 확대, 강화

□ 개요

- 2019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조문을 확대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2월 26일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음
- 문화유산 보호는 김정은 체제 이후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로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이후 국가지정 비물질문화유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법령들을 개정함

□ 경과

- 문화재 관련 법제 수정·보충
 - 2019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였음. 수정한 「민족유산보호법」은 ‘물질유산’(유형문화재)과 ‘비물질유산’(무형문화재), 자연유산 보호 문제를 포함하여, 6개 장에 70여 조문으로 확대하였음
 - 북한의 비물질유산의 범주는 전설이나 언어 등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전통의술’, ‘사회적 관습, 예식이나 명절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업기술’ 등으로 문화유산의 범주로 포함되었음
 - 「민족유산보호법」의 수정·보충의 의미에 대해서 ‘민족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옹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평가
 - 2019년 2월 26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음
- 문화재 발굴
 - 황해북도 봉산군에서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을 추진하는 등 역사문화유적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문화재 보호 사업의 국제적 보편성 강조
 - “역사문화유적을 잘 보존관리하고 복구하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업인 동시에 인류문명의 다양성을 보호, 발전시키는것으로 된다. 때문에 역사문화유적을 더 잘 보존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줄어드는 역사문화유적, 그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로동신문』, 2019.7.22.)

- 북한의 문화정책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
 - 북한 헌법 제4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북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고 규정

- 김정은 체제 이전까지의 문화재 정책은 ‘물질문화’ (유형문화재) 중심
 -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처음 제정하여 법적 체계로 문화재 보호 정책을 추진. ‘문화유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음
 - 김정은 체제 이후 ‘비물질문화’ (무형문화재)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 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문화유산보호법」을 채택
 - 보호 대상 문화재가 ‘문화유물’에서 ‘문화유산’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유물’과 ‘비물질문화’가 통합된 ‘문화유산’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
 - 북한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있으며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이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문화유산보호법」을 확대하여, 총 6장 62조로 구성된 「민족유산보호법」 채택

- 비물질문화유산 지정 확대
 - 2012년부터 비물질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매년 비물질문화유산을 새롭게 지정하였음
 - 2012년 민요 <아리랑> 등 5개, 2013년 <평양냉면> 등 3개, 2014년 <설맞이 풍습> 등 3개, 2015년 <태권도> 등 8개, 2016년 <뽕치료술> 등 17개, 2017년 <을지문덕 전설> 등 34개, 2018년도 <이강고 양조기술> 등 18개
 - 2019년에 조항을 확대함에 따라 비물질문화유산 지정은 더욱 확대될 것임

-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확대는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문화정책의 측면과 함께 간장, 고추장, 메주된장 상품 홍보에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을 활용하는 산업적인 측면도 있음

<사진 II -17> 북한의 대외 경제 잡지에 소개된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 과 장제품



자료: 『Foreign Trade』

□ 전망

-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물질문화에서 비물질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합하여 확대하였고, 법 조항을 신설하여 세분화하면서 관리체계도 정교해졌음
- 민족유산관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민족 문화에 대한 관리 정교화는 계속될 것임
-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 지정을 확대하면서 문화재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해 왔음. 김정은 체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임

4. 대외·대남 분야

- < 1 > 김정은 위원장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 < 2 > 2차 북미 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개최와 결렬
- < 3 > 김정은 위원장 방러 및 북러 정상회담
- < 4 >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및 북중 정상회담
- < 5 >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
- < 6 > 남북관계 교착
- < 7 > 북중 간 교류
- < 8 >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 요구 관련
- < 9 >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발과 북한의 ‘새로운 길’

3 대외·대남 분야

< 1 > 김정은 위원장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 주요 일정

- 1월 7일 김정은 평양 출발 (열차편)
- 1월 8일 북중 정상회담, 환영만찬
- 1월 9일 김정은, 베이징의 생약 제조업체 동인당 방문
 -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석 부부동반 오찬(베이징호텔)
 - 김정은, 베이징 출발
- 1월 10일 김정은 귀국

- ※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2018년 3월 25~28일 1차 방중 이래 4번째 방중
- ※ 시진핑 주석과 4차 북중회담

□ 공식수행원 및 정상회담 배석자

- 부인 리설주 동반
- 공식수행원
 - 김영철 당부위원장(통일전선담당), 리수용 당부위원장(국제), 박태성 당부위원장(과학 및 교육),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당정치국 후보위원 겸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일환(당부장), 최동명(당부장)
- 정상회담 배석자
 - 북한: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 중국: 왕후이닝(王滙寧, 당정치국 상무위원), 덩쉐상(丁薛祥, 당정치국 위원 겸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송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

<사진 II -18> 북중 정상회담(2019.1)



자료: 『로동신문』, 2019.1.10.

□ 김정은 방중 배경

- 2019년 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비핵화 협상 관련한 조율 필요성
 - 김정은 위원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을 앞두고도 2018년 5월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관련 사항 논의
-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발전 강화 논의 필요성

□ 북중 정상회담의 의제 및 내용

- 북핵 문제
 -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 경과 및 우려사항을 시진핑 주석에게 브리핑하며 중국의 조언 청취
 -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과 전력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조율
 - 김정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전망”에 대해 발언
 -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한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 진행”(『로동신문』, 2019.1.10.)
 - 시진핑,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향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 방향을 지속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남북관계 개선 및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지지(『新华社』, 2019.1.10.)
- 북중관계
 -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의 발전 심화에 합의
 -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고위급 상호방문의 전통을 견지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 합의
 - 시진핑,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2019년에는 고위급 왕래 지속, 전략적 소통 강화, 우호교류협력 심화 필요성 강조

- 시진핑 주석의 2019년 내 북한방문 합의
 - 김정은, 시진핑의 방북 초청을 했으며 시진핑은 이를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 통보(『로동신문』, 2019.1.10.)

□ 의미와 특징

-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준비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2018년 3월 1차 방중을 계기로 복원된 북중 밀월관계 재확인
-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북중 간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만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음
 -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미국이 대북제재를 고수한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 할 수도 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새로운 길”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관련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이 자신의 입장과 전략을 중국 측에 설명하는 것이 주(主)였던 것으로 추측됨
 -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핵 문제의 단계적, 동시적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중 간 주목할만한 이견 발생이 어려운 상황
 -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미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고려한 듯, 중국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언론 발표에는 북한 측이 보도한 “공동으로 연구 조종”과 같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없음
-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북 사실상 확정
 -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방중 시 이미 방북 초청을 받고 수락했으나 2018년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으로 인해 자신의 방북이 가져올 대미부담을 의식하여 적절한 방북 시점을 잡지 못했음
 - 그러나 이번에는 북측에 방북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수교 70주년을 명분삼아 방북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보임
- 양 지도자는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2018년을 북중관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해로 평가
 - ※ 2018년 북중 정상회담 별 양국 지도자의 북중관계 평가
 - 2018년 3월(1차 정상회담)

- “북중간의 전통적인 우의는 양당 양국의 선조들이 일궈낸 것이며 공동의 고귀한 재산” (시진핑)
- “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 (김정은)
- 2018년 5월(2차 정상회담)
 - 북중관계는 “고귀한 재산” (시진핑)
- 2018년 6월(3차 정상회담):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3个 不會變”)
 - ① “국제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관계없이 북중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 ② “북한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우정” ③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
-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베이징 도착 전까지 공개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깨고 양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신속하게 공개 보도
 - 북한당국의 외교 행태가 국제관례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 베이징 방문 때마다 진행한 경제발전 관련 기관, 업체 방문 지속

< 2 > 2차 북미 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개최와 결렬

□ 개요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담판을 위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되었음
- 2018년 6월 12일 개최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이후 8개월 여 만에 열린 회담이었으나, 쌍방은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
 - 북한은 일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민수경제 분야 제재 해제를 목표로 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보임

□ 공식수행원 및 정상회담 배석자

- 공식수행원
 - 김영철 당부위원장(통일전선담당), 리수용 당부위원장(국제), 김평해 당부위원장(간부담당), 오수용부위원장(경제담당),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 부인 리설주 동반하지 않음

- 정상회담 1일차(만찬) 배석자
 - 북한: 김영철, 리용호
 - 미국: 폼페이오(국무장관), 멀베이니(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 정상회담 2일차(확대정상회담) 배석자
 - 북한: 김영철, 리용호
 - 미국: 폼페이오, 볼턴(백악관 NSC 보좌관), 멀베이니

<사진 II -19>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자료: 『로동신문』, 2019.3.1.

□ 주요 일정 및 회담 전개 과정

- 2월 23일 김정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제2차 조미수뇌상봉회담’) 참석차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 출발. 중국 대륙 거쳐서 하노이 향발
- 2월 26일 김정은, 65시간 동안의 열차여행 끝에 오전 8시 15분(현지시간)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 차편으로 하노이로 이동하여 멜리아 호텔 투숙. 김정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방문
- 2월 27일 김정은-트럼프 상봉, 단독 환담 및 만찬 진행(메트로폴 호텔)
- 2월 28일 김정은-트럼프 2차 상봉 및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호 의견차이로 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오전)
 - 북미 공동오찬 취소
 - 트럼프, 기자회견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관련 브리핑
 -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출발
- 3월 1일 리용호 외무상, 새벽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관련 입장 발표

- 3월 1일 김정은,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 돌입
 - 김정은, 응우옌 푸 쯙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 진행
- 3월 2일 김정은, 하노이 전쟁영웅 열사 기념비 및 호치민 전 주석 묘소 방문
- 김정은, 하노이 출발. 전용열차 편으로 중국 대륙 거쳐 귀국길에 오름

□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

- 비핵화 해법의 차이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경제제재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 미국 측 주장(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리로 민생분야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의 민생분야 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 북한은 미국의 추가시설 폐기 요구 거부
 - 북한 측 주장(리용호 외무상):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 완전 폐기하며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의 영구 중지 약속을 문서화하는 대신에 미국에게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 우선 해제 요구. 그러나 미국이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회담 결렬
 - 북미 간 비핵화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 미국: 비핵화 前 제재완화(해제)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先비핵화 後제재 해제’)을 보이며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지향
 - 북한: 비핵화 진전과 제재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 주장
- ※ 미국은 이전에 시사했던 스몰딜 가능성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게 부정
-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계산
 -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 상황(코헨 청문회) 고려한 트럼프의 정치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됨
 -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코헨(Michael Cohen)이 자신의 중대한 ‘비행’을 폭로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맞이함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인 미국 조야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지향의 작은 합의(‘어설픈 합의’)를 할 경우, 그에

대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 이에 트럼프는 차라리 합의하지 않고(NO Deal)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거꾸로 “나쁜 합의를 거부한 용기” 를 부각시킴
 · 실제로 트럼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행위는 워싱턴의 반대파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으며 코헨청문회를 무난히 돌파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회담 결렬의 영향

- 북미 양측 모두 회담 결렬이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결렬 상황 관리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의사를 표명하고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 표명함으로써 미국측에서 야기할 수 있는 긴장 유발 요소 제거
 -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회담 긍정 평가
 -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도 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로동신문』, 2019.3.1.)
 - 북미 회담결렬이 한반도 위기로 이어져온 기존 관성의 반전(反轉) 발생
- 북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협상전술 변화
 - 북한은 대미협상에서 미국에게 경제제재 일부 해제(완화)를 자신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요구한 것을 미국이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하고 북한 압박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
 -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할수록 대미협상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재 해제를 대북협상의 공개적인 최우선 의제로 삼았던 전략을 철회하고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원래 제기했던 체제안전보장을 이슈화
 -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주권보장 필요성 제기(2019.4.25.)
 -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전술적 궤도수정일 뿐 대미협상의 실질적인 제1목표는 여전히 제재 해제였음
- 북한, 비핵화 협상 장기 교착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운영 추구
 -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입장에 부딪치면서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에 대비하여 자력갱생을 최우선 국가전략으로 설정
 - 김정은 “적대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2019.4.12.)

< 3 > 김정은 위원장 방러 및 북러 정상회담

□ 주요 일정

- 4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연방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시를 향해 출국 (열차편)
-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 환영만찬
-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
- 4월 26일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출발하여 귀로에 오름
- 4월 27일 김정은 귀국

□ 공식수행원 및 정상회담 배석자

- 공식수행원
- 김평해(당부위원장, 간부담당), 오수용(당부위원장, 경제담당), 리용호(외무상), 리영길(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최선희(외무성 제1부상)
- 정상회담 배석자
- 북한: 리용호, 최선희
-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장관), 유리 프루트네브프(극동연방관구 주재 대통령전권대표), 드미트리 베스꼬프(대통령공보관), 유리 우샤꼬프(대통령대외정책담당 보좌관), 예브게니 디프리호(교통장관), 알렉산드르 꼬즐로프(극동 및 북극 발전장관), 아나톨리 야놉스끼(에너지부차관), 올레그 벨로조로프(러시아철도공사 사장),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북한주재 대사)

<사진 II -20> 북러 정상회담



자료: 『로동신문』, 2019.4.26.

○ 특기사항

- 북한 측은 비핵화에 집중한 회담배석자 선정. 반면에 러시아는 북중 및 남북중 경제협력 논의를 상징한 회담 배석자 선정
 - 교통(철도), 가스관련 고위관료 배석
- 북한의 대미협상 라인의 변화
 - 그동안 대미협상 책임자였던 김영철 당부위원장이 공식수행원에서 빠짐
 - 대미협상의 중심이 기존의 통일전선부에서 향후 외무성으로 이동 가능성 시사

□ 김정은 방러 배경

- 북한과 러시아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사안이 성사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정되었던 행사였음
- 2차 북미 정상회담(2019. 2. 27 ~ 28. 하노이)에서 비핵화 담판이 결렬된 후 북한에 우호적 진영과의 관련 협의 및 지지 도출
-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처하여 북러 경제협력 활성화 논의

□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 및 내용

○ 북핵 문제

- 김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경과 설명
- 김정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의 향후 대책 설명하고 푸틴 의견 청취
 -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 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로동신문』, 2019.4.26.)
- 푸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주권보장 필요성 제기(정상회담 결과 관련 푸틴 기자회견, 2019.4.25.)
- 푸틴,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 지지

○ 북러 관계

-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 “쌍방은 …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로동신문』, 2019.4.26.)
- 양국 간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왕래의 강화와 다방면의 교류협력 증진
 - 김정은의 푸틴 북한방문 초청과 푸틴의 수락

- 양국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
 - 북한 측,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러시아내 북한 노동력 송환 연기 요청.
 - 러시아 측 긍정 입장 표명
-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 논의

□ 의미와 특징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초의 북러 정상회담이자 8년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러 관계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00년 이후 북러 정상회담 일지
 -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 북한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
 - 2001년 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푸틴대통과 정상회담 개최(모스크바)
 - 2002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블라디보스토크)
 -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울란우데)
-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김정은의 첫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향후 비핵화 협상 전략의 방향이 시사됨
 -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미국 책임론 부각
 - 북한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입장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상외교 가동
 - 러시아의 지지 획득 및 협력 강화
-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비핵화 협상의 중요 이슈로 부상
 -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려는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고, 제재완화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의 변화를 시사. 이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도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에 호응하여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 문제 제기
 -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19.4.13.)
 - “적대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김정은, 『로동신문』, 2019.4.13.)
 -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전술적인 표현의 변화에 불과. 여전히 대미협상의 실질적인 제1목표는 제재 해제

- 푸틴 대통령,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과 주권보장 필요성 강조
 - 푸틴,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합의 필요성 제기
 - 6자회담 및 9.19 공동성명(2005년)과 같은 다자협의 및 국제협의 선호
 - 단,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체제안전보장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6자회담 형식을 통한 국제적인 안전보장 제공이 유용할 것’ 이라며 조건부 6자회담 유용론 제기(정상회담 결과 관련 푸틴 기자회견, 2019.4.25.)
-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역할 제고 가능성 시사
 - 김정은, 푸틴에게 미국 측에 비핵화 관련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
- 푸틴 대통령,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른 러시아 내 북한노동력의 지속 체류 요청에 긍정적 대응
 -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력은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국면에서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 원천임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 북한노동력의 체류지속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명
 - 푸틴은 러시아 내 북한노동력을 “열심히 일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고 규율을 잘 지킨다.” (정상회담 결과 관련 푸틴 기자회견, 2019.4.25.)며 그들의 지속체류 방향에서 모종의 해결방법이 있음을 시사

< 4 >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및 북중 정상회담

□ 주요 일정

- 6월 17일 북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예정(2019.6.20.-21.) 발표
- 6월 19일 시진핑 주석 북한 『로동신문』에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 새기자」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 발표
 - 양국 간 전통적인 우의 강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도모 의지 표명,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여 의지 표명
- 6월 20일 시진핑, 평양 국제비행장 도착. 김정은 위원장과 상봉
 - 평양 대대적으로 시진핑 방문 환영(연도 환영인파 25만 명)
 - 북중 정상회담(금수산영빈관)
 - 환영 만찬(목란관)
 -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제목: ‘불패의 사회주의’) 관람

- 6월 21일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 우의탑 참배
 - 김정은, 시진핑 금수산 영빈관 산책 후 오찬 환담
 - 시진핑 주석 귀국
 - ※ 시진핑 방북은 2013년 집권 이후 최초이며,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이래 14년만임

<사진 II -21> 시진핑 주석 방북 및 북중 정상회담



자료: 『로동신문』, 2019.6.21.

□ 방북 배경

- 시진핑의 2019년 방북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중국 측은 이미 2019년 1월 김정은의 4차 방중 시 그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
 - 중국은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김정은의 4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에 대한 답례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우의 과시와 새로운 북중관계 발전 협의를 위해 시진핑 방북 결정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전략 변화: 적극적인 역할 추구
 - 김정은 위원장의 4회에 걸친 중국방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지 못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진핑 방북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과 연계하여 판단했기 때문임. 즉, 중국은 시진핑 방북이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중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동시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일정하게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북을 미루어 옴.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빈번한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자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해서 북한을 부추긴다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음. 이로 인해 시진핑의 방북은 대체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에 빠진 2019년 상반기

- 를 피해서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고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교일(10월 6일)을 전후한 가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을 계기로 더욱 심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미중관계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북한 카드를 활용하기로 결정.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활용하여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성원(聲援) 수준의 제3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로 정책 선회.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하여 ‘여건 조성 시 방북’이라는 기조를 버리고 ‘방북을 통한 여건 조성’ 정책 선택. 그리고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특별한 영향력을 보유한 북중 특수 관계를 과시하며 비핵화 협상 촉진자로서 역할 천명

-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기는 중국 측이 제안했으나, 북한도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용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경제협력 기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이기는 하나 최소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관광 등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인 교류협력의 증대 기대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체면손상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과시를 통한 김정은의 국내 정통성 강화. 시진핑 주석은 『로동신문』 특별 기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노선(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 총력집중)에 대한 “견결지지” 표명
 - 시진핑 방북을 북미 협상 재개 모멘텀으로 활용. 자신의 방북을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로 규정한 시진핑의 한반도 전략 변화에 호응하여 원래 시진핑의 방북을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음
 - ※ 시진핑 방북과 북미협상 재개 관련 움직임
 - 김정은 친서(트럼프 대통령, 6.11.) → 시진핑 방북(6.20~21.) → 트럼프 친서(김정은 위원장, 6.23.)

□ 북중 정상회담 배석자

- 시진핑 주석, 부인 평리위안 동반
- 정상회담 배석자
 - 북한: 최룡해(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재룡(내각총리), 리용호(외무상), 리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 중국: 덩쉐상(丁薛祥, 당정치국 위원 겸 서기처 서기), 양제츠(杨洁篪,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송타오

(宋涛, 당 대외연락부장), 종산(상무부장), 마오화(苗華,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 북중 정상회담의 의제 및 내용

○ 양국관계

- 미래 북중관계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논의
- 국정운영 경험의 교류강화와 새 시대 북중관계에 맞는 새로운 내용 실천 합의
 -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농업, 관광, 교육, 위생, 체육, 언론, 청년, 지방 등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발전과 양국 인민복지 증진에 기여 합의

○ 한반도 비핵화

- 중국의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적극 참여 의지 천명(최초)
 - 시진핑, 중국은 북한 및 유관방면과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화 협상을 추동하여 진전을 이룩하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헌하기를 원한다고 강조.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발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움을 제공할 용의 표명(『인민일보』, 2019. 6.20)
- 김정은 비핵화 협상 의지 표명 및 시진핑의 적극적인 태도표명에 사의
 - 김정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북한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 표시. 각자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탐색하여 한반도 문제의 정치해결과정에 새로운 진전 이룩되기를 희망

□ 평가 및 특징

○ 북중 관계, ‘신혈맹’ 수준의 우호관계 정립 계기

- 중국 측은 “중조우의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 6월 21일 회동에서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건 상관없이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를 견결히 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견결히 지지하며,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녕을 이루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천명(『新华网』, 2019. 6.21.)
- 북중 정상, 양국관계의 미래와 현재 인식 공유
 - 중조관계의 미래 논의. 시진핑, 이를 위해 허리띠 발전 및 계획위 주임 대동
 - 미래설계에 기초한 당면 수교 70주년 계기 교류협력 전개사업 합의. 시진핑, 이를 위해 종산 상무부장 대동
 - 시진핑, 군사안보 분야 교류 대비하여 마오화(苗華,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군사위 상무위원) 대동

- 중국 대북정책의 (언술을 넘어선) 실질적인 전환 계기: 관여와 협력
 - 김정은 1~4차 방중 때와 달리 중국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한 적극 개입 의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결단 관련 안보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용의 표명
 - 그동안 중국이 미루어왔던 양국 교류협력의 구체화 및 실천에 합의

- 수교 이후 가장 광범한 양국 간 교류협력 영역 확대 계기 마련
 - 중국 측의 수행단 면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는 북중관계의 현재와 지향성을 엿볼 수 있음
 - 이번 수행단은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대화를 모두 염두에 둔 구성으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양국 역사에서 외교-경제-군사 교류가 균형을 잡은 최초의 회담이었음
 - 북한과 중국은 냉전시기에는 외교, 군사, 민간 교류는 활발했으나 경제방면에서는 정상적 교류보다 대북지원 일변도였음.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한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양국교류는 외교, 민간 교류와 대북경제지원이 주를 이루었음. 그러나 2010년 전후하여 양국 경제관계가 중국의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구조적 협력방향으로 진행되어 옴
 - 이번 시진핑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외교, 민간교류, 경제교류(제재 범위 내), 안보교류 등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수교 이후 가장 큰 폭의 교류협력의 틀 구성에 합의
 - 그간 소원했던 군사안보분야 교류 본격화 예상
 - 교류협력의 핵심인 경제교류는 유엔제재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표 II -16> 역대 중국 지도자 방북 시 외교, 경제, 군사 정상회담 배석자

중국 지도자		외교	경제	군사
시진핑 (习近平) 2019.6	중국	양제츠(당외사판공실주임) 왕이(외교부장) 쑹타오(당대외연락부장)	허리핑(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종산(상무부장)	마오화(당중양군사 위 정치공작부 주임)
	북한	리용호(외무상) 리수용(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재룡(내각총리)	김수길(인민군 총정치국장)
원자바오 (温家宝) (총리) 2009.10 * 김 정 일 접견형식	중국	양제츠(외교부장) 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 우다웨이(외교부 부부장)	장핑(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천더밍(상무부장)	류전치(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북한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김양건(당부장) 김영일(외무성부상)		

중국 지도자		외교	경제	군사
후진타오 (胡锦涛) 2005.10	중국	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 리자오싱(외교부장) 류홍차이(당대외연락부 부부장)	랴오샤오치(상무부 부부장)	
	북한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김태중(당국제부 부부장)	박봉주(총리) 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 임경만(무역상)	
장쩌민 (江泽民) 2001.9	중국	첸지천(국무원 부총리) 다이빙궈(당대외연락부장) 류화추(당외사판공실주임)		귀보송(부총참모장)
	북한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지재룡(당국제부 부부장)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장쩌민 (江泽民) 1990.3 * 김 정 일 배석	중국	주량(당대외연락부장) 치화이위안(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영남(외교부장) 윤기복(대남당당 비서) 김용순(당부장) 강석주(외교부 부부장)		최광(총참모장)

자료: 저자 작성

< 5 >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

□ 개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 중인 6월 30일 판문점 분단 경계선에서 전격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고 남한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지 불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실현됨

- 북미 정상간 단독 회동을 전후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정상이 만나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짐

□ 경위 및 행사과정

- 판문점 북미 정상간 단독 회동의 전격 성사 경과
 - 6월 29일 오전
 - 트럼프 대통령, G20 정상회담(일본 오사카) 중 트위터를 통해 당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한국 방문 기간(6.29~30.) 중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비무장지대

(DMZ) 경계에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 송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거기(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

- 6월 29일 오후
 -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미 트럼프 대통령의 DMZ 만남 의사 타전에 대해 트위터 게재 5시간 15분 만에 이를 사실상 수용하는 담화 발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
- 6월 29일 오후
 - 트럼프 대통령,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청와대)
- 6월 30일 오전
 - 한미 정상회담
- 6월 30일 오후
 -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남북 분단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오후 3시 45분)
 -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분단선 이북으로 안내.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대통령이 됨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분단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의 자유의 집으로 이동.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간 단독 회동(미국무부에서는 동 회동이 ‘정상회담’ 이 아니라고 공식 밝힘) 진행(오후 3시 59분~4시 52분).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배석
 - 북미 정상간 단독 회동 종료 후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이북 복귀 과정에서 남북미 정상 다시 회동

<사진 II -22>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자료: 『로동신문』, 2019.7.1.

- 6월 30일 저녁
 - 트럼프 대통령 방한일정 종료, 오후 7시 워싱턴으로 출발

○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전격 성사의 배경: 친서 외교 가동

- 6월 11일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으로부터 우호적인 친서를 받은 사실 공개.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 6월 20일~21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방문. 시진핑, 중국의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적극 참여 의지 천명
- 6월 23일
 -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스러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
 - ※ 친서교환 통해 북미협상 재개에 의견 접근 중임을 시사

□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의 내용 및 결과

- 북미 양 정상에 비핵화와 북미관계 진전과 관련한 의견 교환. 동시에 쌍방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에 대해 설명
 - 양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와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방도적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로동신문』, 2019.7.1.)
- 북미협상 재개 합의 및 협상 대표 통보
 -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2019.6.30.)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로동신문』, 2019.7.1.)
 - 미국 협상 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트럼프통령 기자회견, 2019.6.30.)
 - 북한 협상팀은 리용호외무상-(최선희 제1부상)- 김명길대사. 북한의 경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기존의 김영철(당시 통일전선부장)-김혁철 라인을 대북협상 관련 판단 착오 등을 이유로 외무성 인사들로 교체 공식 확인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
 - “제가 김 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이 희망한다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으로 단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될 것”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2019.7.1.)

□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성사 배경

- 트럼프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DMZ 방문을 구상해온 바,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아이디어를 만들어냄
 -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할 당시에도 DMZ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기상 악화로 일정 취소
 - 미 민주당 대선후보 TV 토론에 쏠리는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맞불용 호재로 판문점 회동 추진
 - ※ 6월 26~27일에 미 민주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 진행
 -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벤트성 가벼운 회동 구상. 그러나 실제 회동 과정에서 53분이 소요된 정상회담으로 발전
- 김정은 국무위원장
 -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안에 대한 깜짝 수용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자신의 신뢰 과시
 - “감사를 표하고 싶다. 제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언론의 평소 행태로 봤을 때 저에게 아주 부정적 결과가 있었을 것” (트럼프 대통령 회담 모두 발언)
 - “만약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회담 모두 발언)
 -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의사소통을 통한 톱다운 해결 방식의 추동 시도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조성된 국내의 실망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깎인 체면 복구

□ 의미와 영향

- 한국전쟁 당사국의 정상이 정전으로 66년 간 대결상황이 계속되어온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를 논하기 위해 만난 역사적 사건
-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의 청신호
 - 양 정상이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개를 넘어서

그동안의 견해 차이가 컸던 쟁점에 대해 양측이 일정하게 유연성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

- 이 회동을 통해 북미 양국이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로 자칫 상호 비방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 6 〉 남북관계 교착

□ 개요

- 2019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대남접촉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장기 교착상황에 빠져들었음. 이는 악화일로로 걷던 남북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2018.2)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남북회담 및 교류·접촉으로 이어지며 발전했던 2018년의 상황과 대조적인 것이었음

□ 경과

- 남북공식회담 중단
 - 2018년 12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2차 남북 체육분과회담을 끝으로 북한이 일체의 남북공식 회담에 불응함으로써 남북협의 중단
 - ※ 2019년 상반기 중단된 분야별 남북회담(괄호 안은 중단전 최종 회담일)
 - 고위급 회담: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2018년 10월 15일)
 - 군사회담: 제10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2018년 10월 26일)
 - 분과회담: 남북 제2차 체육분과 회담(2018년 12월 14일)
 - 실무회의 및 실무접촉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2018년 12월 13일)
 - 남북 도로협력 실무접촉(2019년 1월 31일)
-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 거부
 - 주 1회 개최를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도 2019년 2월 22일 천해성통일부차관-황충성 북한 측 소장 대리 회의 이후 북한 측의 기피로 중단
- 남북공동행사 무산
 - 2월 21일 북한 측은 2019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3.1운동 100주년의 남북 공동 기념 건에 대해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 가 어렵다.” 고 통일부에 통보
- 이후 일체의 남북공동행사 불발

○ 북한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선언 및 번복

- 3월 22일(금) 오전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선언 및 철수 진행
- 3월 25일(월) 북한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 복귀
 - 북한 측은 철수 선언 및 복귀 배경에 대한 설명없이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고 언급
- 연락대표 간 접촉 정상 진행. 그러나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거부

□ 북한의 대남 접촉 기피 및 비난 배경

○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 북한은 남북관계가 한미관계(‘한미공조’)에 종속되어 남한정부가 2018년에 이루어진 ‘4.27 판문점 선언’ 과 ‘9.19 평양공동선언’ 의 이행에 매우 미온적이라고 인식. 특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대북제재의 틀에 묶여 남한이 의미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표시. 북한은 대북제재 때문에 남한이 남북교류·협력 관련하여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진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북제재의 틀을 넘어서 과감한 남북교류 촉구
 -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조선 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19.4.12.)
 -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우리민족끼리』, 2019.7.13.), “열 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의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하며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메아리』, 2019.7.13.)

○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실시에 대한 불만

- 한미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약속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훈련을 축소하여 3월 4일 ~3월 12일에 ‘19-1 동맹’ 연습 실시
 - 그러나 북한은 이를 단순히 ‘키 리졸브’ 훈련의 명칭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미공동성명과 남북선언에 대한 위반이자 도전으로 규정·비판

(『조선중앙통신』, 2019.3.7.)

- 한-미 양국은 4월 22일부터 2주간 공군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축소하여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으로 실시. 북한은 이를 비난
 - 김정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뀐다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이라며 비난(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19.4.12.)
- 8월 5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7월 말~8월 초에 수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시미사일 및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 김정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 직접 조직·지도(7월 25일) “남조선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 (『로동신문』, 2019.7.26.)
 - 북한 외무성은 8월 6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지속 시 북한의 핵실험중단 등 조치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 두 번 만 경고하지 않았다.” (『로동신문』, 2019.8.6.)
 - 김정은, 신형전술유도탄 발사(8.6.) 지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 (『로동신문』, 2019.8.7.)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남한의 중재 역량에 대한 불신

-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와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약속.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이 제안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중재역량에 대한 의구심 고조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라는 실패로 끝나자 북한은 이 회담을 북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략적 판단 오류 인식. 이와 연동하여 한국정부의 중재역량에 대한 불신도 커짐
 - 김정은 “남조선 당국은 …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의를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 2019.4.12.)
 -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리용하면 되는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2019.6.27.)

- 북한 내부 대남정책라인의 정비 지연
 - 북한지도부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북미협상과 대남전략을 총괄하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중심의 협상 라인에 대한 검열·점검에 돌입. 이 과정에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직에서 해임되고 장금철이 새로 임명(4월 11일)되는 등 대남정책라인의 교체가 진행되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남라인에 대한 검열과 교체가 상당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2019년 상반기에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
 - 그러나 하반기에도 남북관계의 교착이 지속됨으로써 대남라인의 정비 지연이 남북관계 교착의 중요 이유는 아니었음이 확인됨

□ 영향

-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이 전반적으로 지체됨
- 2018년에 진행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돋보였던 한국정부의 중재 역할이 현저히 약화됨
- 북한은 기대했던 남북교류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북중 교류협력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

< 7 > 북중 간 교류

□ 개요

- 2019년 북한과 중국 간에 이전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었음
 - 특히 정상회담 및 대표단 파견 등 양국 간 교류는 2017년까지는 매우 저조했으나 2018년부터 급증했으며, 2019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되었음
- 양국 교역의 경우 고강도 유엔안보리 제재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그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특히 관광 등 유엔제재 범위 밖에 있는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음

□ 북한-중국 교류 활성화의 배경과 특징

-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7년에 이르러 최악의 상태

- 까지 이르렀으나, 2018년 재개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차 방중(3월)을 계기로 신혈맹관계로 급격히 반전되었음
- 이러한 북중 관계의 변화가 양국 간 교류 증대로 나타났음
 - ※ 2017년 악화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건은 “조-중관계의 기둥을 짚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문』, 2017.5.3.)
- 북중 교류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6월 20~21일)을 계기로 급증하며 분야도 다양화됨
-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 관광, 교육, 위생, 체육, 언론, 청년, 지방 등에서 교류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민생경제영역 간부 훈련과 왕래 강화’에 합의
 - 실제로 시진핑 방북 이후 양국 간에는 외교, 경제, 군사, 청년, 학술,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진행되었음
 - 시진핑 방북 이후 양국 간 교류 급격히 증가
 - 북중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 동북의 지방정부와 북한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됨
 - 4월에는 정경일 인민위원장 등 평안북도 대표단 일행이 선양(瀋陽), 잉커우(營口), 따론펬(大連) 등 랴오닝성 지역을 공식 방문
 - 11월에는 랴오닝성의 천추파 당서기가 이끄는 대표단이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무역, 민생,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
 - 12월에는 바인차오루 당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린성위원회 친선대표단이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초청으로 북한 방문
- 김정은 집권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의 군 지휘부 간 교류가 이루어짐
- 양국 대표단 파견의 비율에서 북한 측의 방중 대표단이 훨씬 많았음
- 이는 가급적 많은 대표단을 보내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중국의 앞선 분야를 벤치마킹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해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속에서도 유엔 제재범위 밖의 교류가 크게 증가함
-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북한-중국 간 정기 항공노선 확대
 - 2019년에 평양과 지난(濟南), 우한(武漢), 다론펬(大連), 마카오를 오가는 4개 노선 증설(2018년까지는 평양과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 노선 등 3개 노선 운항)

□ 2019년 북한-중국 간 주요 당정 교류

<표 II -17> 2019년 북중 간 주요 교류

구분	교류 내용(괄호 안은 시기)	
	북한 대표단 방중	중국 대표단 방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1월)	시진핑 주석(6월)
군사·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무성대표단(2월) 해군사령관(김명식), 중국해군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참석(4월) 인민보안성 대표단(7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7월) 정부군사대표단(단장: 김수길 총정치국장, 8월) * 북중군사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대표단(4월) 외교부 보도국대표단(7월) 왕이 외교부장(9월) 마오화 중앙군사위 정치사업부 주임(10월) * 북중 군사회담
경제·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친선예술대표단(1월) 북중친선협회대표단(4월) 평안북도 대표단 랴오닝성 방문(4월) 대외경제상(김영재), 일대일로회의 참석(4월) 민용항공총국 대표단(5월) 국제문제연구원 대표단(5월) 중앙검찰소 대표단(6월) 기자동맹 대표단(6월) 체육성 대표단(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단(6월26일~7월2일) 김책공업대학 대표단(6월28일~7월6일) 중앙재판소 대표단(7월) 대외경제성 대표단(8월) 로동신문사 대표단(8월) 외교단사업총국친선대표단(8월27일~9월2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단(9월)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9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9월) 사회과학원 대표단(10월) 친선대표단(10월) 북중친선의원단대표단(10월) 교육위원회 대표단(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청년간부대표단(7월) 신화통신사대표단(10월) 인민일보사 대표단(10월) 중공당랴오닝성대표단(11월)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초청 국가대극원 교향악단 (11월29일~12월2일)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12월) 중공당 길림성위원회 친선대표단(12월) *함경북도 초청

자료: 저자 작성

< 8 >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 요구 관련

□ 개요

- 남한주민의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합의로 1998년 11월 18일 시작되었으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음. 이에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시키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지면서 남한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던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지 못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10월 하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여 현대그룹이 건설한 남한의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고 ‘금강산을 남측에 내준’ 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하였음. 이로써 최초의 대규모 남북 협력 사업이자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위기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시설물 철거 지시 내용

- 김정은은 2008년 7월 이후 사실상 11년 간 방치된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온천빌리지 등 현대그룹 산하 현대아산이 건설한 시설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범벅식”이며 “무슨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놓았다.”
 -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
- 김정은은 남한에 금강산지구 개발을 위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정책을 잘못된 “의존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당중앙위원회 관련 부서(통일선전부) 질책
 -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흙이 남았다.”
 - “국력이 여덟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
 - “지금 금강산이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마치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

어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

-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남측시설 철거하고 북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설 건설 지시

-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썩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사진 II -23>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자료: 『로동신문』, 2019.10.23.

□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 전후 과정

-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 천명과 남측의 환영 입장 표명
 - 2019.1.1. 김정은, 신년사 통해 전제조건이나 대가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용의 천명
 -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 2019.1.10.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에 대하여 환영의사 표명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 난항
 - 2019.3.1. 문재인 대통령,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천명

- 2019.3.4.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재인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에 대한 대미 협의 준비 관련 보고
- 2019.3.7.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론브리핑
- 2019.4.1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 라는 의견 표명
- 2019.7.5.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가 없음을 밝히고, 조건이 마련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 반복

○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에 대한 철거 지시

- 2019.10월 하순. 김정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시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

○ 남북 간 ‘철거’ 관련 입장 교환

- 2019.10.23.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에 대하여 “북측 요청 시 언제든지 협의할 계획” 임을 밝힘
- 2019.10.25.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고 통보하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 할 것을 제안
- 2019.10.28. 통일부는 북측에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제의
- 2019.10.29. 북한, 남측이 제안한 실무회담을 거부하며 문서교환을 통한 협의 재차 주장하는 통지문 발송
- 2019.11.5. 통일부, 남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북측에 통지
- 2019.11.6. 북한, 기존의 문서교환방식을 고수하는 통지문 발송
- 2019.11.7. 통일부, 공동점검단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내용의 통지문 발송
- 2019.11.11. 북한,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며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주장하는 통지문 발송
- 2019.11.15. 『조선중앙통신』, 금강산 시설물 공동점검단 방북을 주장하는 남측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 상황 지속 시 일방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최후통첩 발송 사실 보도
- 2019.11.15.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 금강산 관광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 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브리핑
- 2019.12말.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 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

□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시설물 철거 지시 배경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남측의 의지 불신

-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천명된 남북정상간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천명하고 문재인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등을 통해 강력한 재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에는 진전이 없자,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따라서 더 이상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의지 표현의 하나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 요구

○ 북한의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의지

- 2008년 7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남북협력을 통한 금강산 관광개발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14년 6월 원산-금강산-마식령 일대를 묶은 관광특구인 원산 -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특구 건설에 돌입함
 - 북한은 2013년 말 마식령 스키장을 완공하여 운영 중이며,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원산-갈마해안 관광 지구를 202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음
-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의 완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어 있었음
- 따라서 북한이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
 - ※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관광지구일대를 인근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과 하나로 연결되는 문화관광지구로 건설하라고 지시(『로동신문』, 2019.10.23.)

< 9 >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발과 북한의 ‘새로운 길’

□ 개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와 제재·압박을 할 경우 “어쩔 수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천명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과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는다는 전제 아래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김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 “가 있다며 연말까지 ”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 이라고 천명
- 6월말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정상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합의
- 그러나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과 미국의 ‘선 핵포기 후 제재해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0월 초 스웨덴에서 개최된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결렬됨
- 이후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북한은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미국의 변하지 않은 태도를 비난하며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이라는 기존의 대미 약속 파기와 ‘새로운 전략무기’ 의 공개 가능성 등을 천명한 새로운 대미 핵 관련 노선 발표

□ 좁혀지지 않은 북미 간 비핵화 해법 간극

-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임.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경제제재 해제’ 라는 협상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고수하였음
-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주장해온 단계별 비핵화 해법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우선 경제 제재 일부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였음
 - 북한은 그동안 자신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거론되던 종전선언이나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제재 해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임했음
 -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내걸었던 ‘비핵화 조치’ 와 ‘체제안전보장’ 의 교환 구도에서 ‘체제안전보장’ 의 내용 속에 유엔의 대북경제 제재 해제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과 함께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제재 해제가 자신의 우선적인 관심사임을 분명히 한 것임

-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절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공언했으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한 수사적 반응으로 반어법적인 표현일 뿐 제재 해제는 여전히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성취해야할 우선적 과제였음

- 북한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논의의 조건으로 북한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 의 제거를 주장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함께 제재 해제 문제 논의가 당면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함(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9.16.)

-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완화)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하는 일부 제재 해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의 입장을 고수함

□ 스웨덴 실무회담의 결렬과 비핵화 논의 공전(空轉)

- 2019년 10월 5일,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양국 협상단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회담 진행

-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을 요구해왔던 북한은 실무 회담 전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 는 입장 표명(김명길 북한 순회대사, 『연합뉴스』, 2019.10.3.)

- 10월 5일 회담을 마치고 난 뒤 김명길 순회대사의 회담 결렬 선언

- 김명길 대사는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의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 고 주장(『노컷뉴스』, 2019.10.6.)

- 반면에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는 성명 발표(『노컷뉴스』, 2019.10.6.)

-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4개항의 사항(△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을 제시했으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음

- 반면에 북한은 ‘자신이 이미 취한 비핵화 조치 및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며 제재 완화 요구.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사항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함

- 북한은 스웨덴 실무회담 결렬 이후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되던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이것들이 제재와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상응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
 -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0.11.14.)

- 스웨덴 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김영철·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동원하여 담화 등을 발표하며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계산법’을 이끌어 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총력적인 외교전 전개

- 이에 대해 미국은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되었다.” (스티븐 비건, 『연합뉴스』, 2019.12.16.)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압박을 강조

- 이에 북한은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9.12.12.)며 미국의 실질적인 변화 요구

□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와 북한의 ‘새로운 길’

-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자, 2019년 12월 28~31일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미 노선을 확정

-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본심”을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으로 규정.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줄 의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 김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 실험

- 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했으나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등 태도 변화가 없었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어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며 그동안 중단했던 핵 관련 도발행위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
- 아울러 김위원장은 ‘이제껏 북한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 입을 천명. 또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공개를 예고

<사진 II -24>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자료: 『로동신문』, 2020.1.1.

- 김정은 위원장,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정면 돌파전’을 핵심 구호로 제시
 - 김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현 시기 미국과의 대결을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이 아닌 미국의 제재에 맞선 자력갱생, 즉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로 규정
 -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 김위원장은 북미 간의 교착상태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북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면 돌파전’을 구호로 제시
 - 김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으로 규정. ‘정면 돌파전’의 핵심 메시지는 더 이상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말고 재제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으로 해석됨

□ 평가

-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강력한 미국과의 대결의지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그 정도를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향후 대미협상의 여지를 남겨둠
 -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 (김정은)
 - 그러나 북한이 요구조건을 낮추며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즉, 북한이 설정한 협상 문턱을 넘기 위해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제3국이 나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예상보다 자제된 톤의 ‘새로운 길’ 선택
 -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과 ICBM 시험발사 예고 등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자제된 ‘새로운 길’ 채택
 -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에도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대응한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을 경제전선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대미 강경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그것이 즉각적인 핵 도발이나 군사적 대응으로 비취질 경우, 자칫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자신의 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는 바, 이것이 북한의 ‘새로운 길’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12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인 점도 북한의 태도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5. 군사 분야

- 〈 1 〉 선군정치 헌법 상 삭제 및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 〈 2 〉 제5차 북한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개최
- 〈 3 〉 2019년 북한군 장령 진급 인사: 특징과 의미
- 〈 4 〉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 〈 5 〉 북중 군사교류 확대
- 〈 6 〉 대형 잠수함 공개 및 SLBM 시험발사

5 군사 분야

< 1 > 선군정치 헌법 상 삭제 및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 개요

- 북한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을 개정하여 본문에 규정된 “선군사상” 과 “선군혁명노선” 을 삭제
 - 이는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의 국가위기 극복하는 동안 헌법에 기본 이념으로 명시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선군정치 종식과 군 위상 약화를 의미
- 2019년 2월 8일 북한군 창건기념일 논설에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를 시사하는 사실 보도
 - 『로동신문』 은 「군은 당이 믿는 제일 기둥」 이라는 사설에서 군은 당의 ‘척후대’ 라며 과거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 시대 ‘혁명의 주력군’ 에서 당의 척후대로 격하
 - 즉 김정일 시대 군부가 정권의 핵심이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의 위상이 약화되는 동시에 당에 의한 군부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 선군정치 종식 및 군부 위상 약화 주요 내용

- 김정일 시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선군정치가 통치의 이념
 -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7년 12월 12일자 『로동신문』 의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라는 논설이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란 인민군대가 단지 전쟁과 조국방위를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도 주력군으로 활동하면서 체제유지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과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표현했다면, 선군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표현하기 시작
 -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체제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여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과 건설보다 체제 수호 및 국방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을 반영함(정성장, “혁명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68쪽.)
 -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중시사상을 구현한 우

- 리 식의 특유한 정치방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김정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69쪽. 김창경,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113쪽에서 재인용) 사회의 일꾼들과 당원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
- 이러한 조선인민군의 혁명적 투쟁 강조는 북한이 1998년 3월 9일자 『로동신문』 정론에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 함으로써 충을 쥔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왔어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 고 강조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음
 - 따라서 1998년에 북한의 헌법을 개정할 때,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만들고 김정일 자신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취임한 것도 선군노선을 반영한 결과
 - 김일성 사망 후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김정일의 공식 활동 중 군 관련 활동이 절반 이상(57%)을 차지
 - ※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2000-2002년(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과 2007년(제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09~2010년(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공개 활동 재개)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김정일의 공식 활동 중 57% 정도가 군과 관련한 활동이었음(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 이념 · 권력체계』,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2011-2,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1, 126~127쪽.)
 - 또한 김정일 시대 당과 공안기관을 비롯한 핵심 권력기관의 주요 요직들에는 군 출신 인사들이 적극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측근의 중심세력으로 부상
- 그러나 북한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을 개정하여 본문에 규정된 “선군사상” 과 “선군혁명노선” 을 공식적으로 삭제, 국가운영에서 선군정치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강력한 의지 과시
- 헌법에서 삭제된 조항 및 내용
 - 지도적 지침으로서 “선군사상” (제3조)
 - 북한 무장력 사명으로서 “선군혁명노선” 관철(제59조)
 - 단, 헌법 서문에 역사적 사실로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업적’ 기술
 - ※ 선군정치는 김정일 통치 시기인 2009년 4월 9일에 헌법에 규정되었음
 -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는 바, 특히 2016년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당정치국 내 군부인물 대폭 축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축소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폐지하여 사실상 선군정치 종언

- 그리고 최근 북한군 창건일을 4월 25일에서 2월 8일로 옮기고, 지난 2월 8일 창건일에 북한군에 대한 호칭을 ‘혁명의 주력군’에서 ‘척후대’로 격하시킨 것은 북한군 위상 격하의 대표적인 사례
 - 즉 김정일 시대에는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정·군 핵심 요직에 군부 인물 포진하는 등 군사국가화 강화
 - 또한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독창적인 통치방식으로 규정하여 2012년 개정헌법에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2대 사상으로 명문화한 것과 대비

<사진 II -25> 김정은 위원장의 군 창건 71주년 기념 연설



자료: 『로동신문』, 2019.2.9.

- 이와 같은 군부 위상 약화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 인사에서 잘 나타나 있음
 - 즉 김정은 집권 직후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실세를 우선적으로 퇴진시켰으며, 그에 따라 현철해, 김영춘, 리명수, 김명국, 리영호, 박재경, 우동측, 김정각, 백세봉 등은 군부 실세가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대부분 퇴진
 -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 군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잦은 교체, 숙청, 강등 등을 계속하며 군 중심의 선군정치에서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로 회귀하여 군부 위상 격하
 -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온 북한군부 서열 1위(총정치국장)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배제
 - ※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 2014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숙청
 - ※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7년 동안 군 핵심 보직인 총정치국장 5번 교체, 인민무력상 7번 교체, 총참모장 6번 교체, 작전총국장 8번 교체, 해군사령관 4번 교체,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4번 교체 등
 - ※ 김일성 시대 40년 동안 인민무력부장은 최용건, 김광협, 김창봉, 최현, 오진우 등 5명 교체, 김정일 시대 17년 동안 최광, 김일철, 김영춘 등 3명 교체와 대비

□ 의미

- 김정은 정권이 공고해지면서 김정일 시기에 탄생한 ‘군대가 국가의 기본이라며 국정운영전반에서 군대를 우선시한 선군정치’ 종식이 불가피해 졌으며, 이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천명한 것임
 -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강화는 1995년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 위기극복을 위한 군부 중심 위기관리체제로서 기형적 국정운영체제라고도 할 수 있음
 - 선군정치의 종언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군부 개혁에 주력하였는 바, 이는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강화로 이상 비대화된 군부에 이권과 권력이 집중되어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인식한 결과로 추정
 - 김정일 정권 선군정치로 군 중시의 통치구조로 인해 비대해진 군부는 나이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에게 매우 위협적 세력이었을 것이며 군부 장악이 최우선 과제였을 것

-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12월 사망)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자마자 2009년부터 자신을 보좌하여 군대사업에 관여토록 함
 - 김정일은 2010년 9월 김정은을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에 취임시켜 사실상 군 통제권을 넘겨주고 그가 자신의 생전에 군을 장악하도록 조치를 취함
 - 김정일은 말년에 군대 내 김정은 영도체계 확립을 유훈으로 남김
 - “인민군대 안에 김정은 동지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명령일하에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2011년 10월 8일, 12월 15일 발언], 『김정일 선집 (중보판)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년, 426쪽.)
 -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리영호 총참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군부 고위 간부와 지휘관을 망라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김정일이 후계자 김정은의 군부권력 장악이 가장 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정상국가 확립과 경제발전 집중을 위해 군 위상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김정일 시대에 소장(☆)-중장(☆☆)-상장(☆☆☆)-대장(☆☆☆☆)-차수-원수 등으로 부풀어진 장군 계급을 1~2계급씩 ‘강등’ 하여 하향 현실화하고 거품이 낀 장군 숫자를 줄이는 작업 등을 추진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 를 계기로 인민군대의 노동당에 대한 절대 복종체계 구축하는 동시에 군이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군의 역할을 군림에서 봉사로 전환
 -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자신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가야한다며 군(軍)을 향한 절대복종을 지시했다” 고 전해졌음
 - 또한 북한은 2015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362개를 발표하면서 “국방공업부문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라!” 는 정치군사분야 구호를 포함시켰음

< 2 > 제5차 북한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개최

<사진 II -26> 제5차 북한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자료: 『로동신문』, 2019.3.27.

□ 개요

- 북한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북한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함
 - 동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것으로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개최된 것은 아님
 - 1991년 대회는 사회주의권 붕괴로 정권 위기상황이었으며, 1995년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인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며, 1999년은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직후, 그리고 2013년은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본 대회가 특별한 목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북한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개최는 급변하는 최근 정세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등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 행사 경과

- 개요
 - 일시 : 2019년 3월 25 ~ 26일
 - 장소 : 미발표
 - 주요 참석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 총정치국장 김수길,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무력상 노광철 등
- 주요 보도내용(『로동신문』 2019.3.27.)
 - 인민군대 세포이며 기본 전투 단위인 중대의 전투력 강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 건설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위업을 무적 총대로 만들어내는 데 의의가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국력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해가는 전우들이 곁에 있기에 필승의 신심을 굳게 가다듬게 된다고 강조
 - 대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불패성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고 보도

□ 역대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의 경과

- 1991년 12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 추대된 다음 날 중대정치지도원 대회가 개최된 바 있음
 - 당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북한의 체제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던 시점, 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군의 정치사상무장 강조 및 군사력 강화에 초점에 초점
 - 또한 1991년은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및 기본합의서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던 시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
- 이후 북한은 1995년 3월, 1999년 2월, 2013년 10월에 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 1995년 3월 대회는 최악의 식량난으로 전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 병사들도 혹독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로서 군내부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대적관과 적개심 해이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
 - 1999년 대회는 최악의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김일성

- 사망 이후 유훈통치에 의존하던 김정일이 1998년 9월 자신의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군부의 충성심 고취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평가
- 2013년 대회는 김정일 사망, 김정은 집권 이후 군수뇌부의 교체로 인한 군의 동요를 막고 군내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요구되던 시기에 개최

□ 의미

- 과거 사례 감안시 본 대회는 북한이 국가적 위기상황이거나 신정권 출범, 그리고 남북관계 및 대미 관계 개선 등으로 인한 화해 평화 분위기 조성시 군부 동요를 방지하고 사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나 신정권 출범 직후 군부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감안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
 - 1991년과 1995년은 국가적 위기상황과 남북관계 및 대미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화해분위기 조성, 그리고 1999년과 2013년은 신정권 출범 직후
- 최근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일선 부대의 사상 이완 방지, 충성심 고취를 목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평가
 - 특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록 결렬되기는 하였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북한 비핵화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대적관해이 등 동요를 막고 사상 교양 강화 및 충성심 고취 목적으로 평가
 - 즉 적과 싸우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들의 직업적 소명인 만큼 지도부의 평화 분위기 유지 노력에 인민군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
 - 최선희 외무성 부상 또한 3월 15일, 외교단과 외신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정하면서 군대와 군수공업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수천통의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음

< 3 > 2019년 북한군 장령 진급 인사: 특징과 의미

□ 개요

- 2019년 북한군 장령에 대한 진급인사가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등 총 세 차례 실시
 - 2019년 장령 진급은 대좌에서 소장(별 하나)으로 합계 60명이 진급하였으나 기존의 장령 중 진급한 인물이 6명에 불과
 -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 직후 대규모 장령진급 인사를 실시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장령 진급(대좌⇒소장)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

- 또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진급인사를 『로동신문』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한편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던 김정일 정권과 비교시 상당한 차이점을 보임
 - 김정일 정권 시 1997년 129명을 진급시켰고, 2010년 100명을 진급시키는 등 대규모 준장령 인사와 비교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
 - 특히 김정일 시대 남발되었던 차수급 진급자가 한 명도 없었음
 - 진급 인사 명령이 기존의 최고사령관에서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변경

□ 주요 보도내용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 “군 지휘성원들 군사칭호 올려줄 데 대한 명령” 하달(『조선중앙통신』 2019.2.16.)
 - 양동원, 최광준, 전태호에게 중장, 최동주, 박용호를 비롯한 27명에게 소장의 군사칭호 수여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장,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즈음해 군사칭호(계급) 올릴 것을 명령” (『로동신문』 2019.4.15.)
 - 박정천 포병국장 등 3명을 대장(별 넷)으로 진급, 장영수를 비롯 33명을 대좌에서 소장(별 하나)으로 진급 등 총 36명의 장령급 인사 단행
 - 별 넷을 단 박정천은 포병국장이며, 김광혁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공군사령관), 김명식은 해군사령관으로 파악, 그러나 소장 33명의 인적사항은 미확인

<사진 II -27>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7호



자료: 『로동신문』, 2019.4.15.

-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 군사칭호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8호 하달” (『조선중앙통신』, 2019.8.13.)

-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 103명 승진, 그 중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장(중장에서 상장), 김용환(대좌에서 소장)은 장령급으로 진급

□ 특징과 의미

○ 장령 진급 인사 규모

- 장령 진급 명령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그리고 8월 과학자 특별승진 등 3회, 총 68명 장령 진급
-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112명, 2018년 79명에 이어 세 번째 규모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대규모 군장령 승진 인사는 2010년(총 142명)과 2012년(총 112명) 두 차례
- 그런데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대규모 장령 진급 시행. 이는 한편으로는 김정일 시대 군고위층을 물갈이하는 동시에 군부의 충성심 고취를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로 평가
- 그런데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 모두 특정 시기(예를 들면 2010년 김정은 후계자 지정, 2012년 김정은 집권 첫해)를 제외하면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 모두 장령진급자(대좌⇒소장)가 평균 30여명 내외였으나, 2018년 73명, 2019년 6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

※ 김정일 시기 : ' 07년 45명 ⇒ ' 08년 33명 ⇒ ' 09년 37명 ⇒ ' 10년 110명 ⇒ ' 11년 38명

※ 김정은 시기 : ' 15년 20명 ⇒ ' 16년 29명 ⇒ ' 17년 6명 ⇒ ' 18년 73명 ⇒ ' 19년 60명

<표 II -18> 북한군 장령 진급 비교

구 분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					
	' 07	' 08	' 09	' 10	' 11	' 12	' 15	' 16	' 17	' 18	' 19
상장⇒대장			1	11		2			2		3
중장⇒상장			2	7	2	3	1		10		1
소장⇒중장	10	2	14	14	5	19	7	6	5	6	4
대좌⇒소장	45	33	37	110	38	88	20	29	6	73	60
합계	55	35	54	142	45	112	28	35	23	79	68

- ※ 북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북한군 정기인사 통계임
- ※ 1992년 김정일 최고사령관 임명(1991년 12월) 직후 대좌⇒소장 524명, 소장⇒중장 96명, 중장⇒상장 28명, 상장⇒대장 16명 등 총 664명에 대한 장령 진급인사 단행, 1991년 12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포상 차원으로 평가
- ※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 김정은(2009년 공식 지명)에 대한 군부 충성 확보 및 군부 장악의 일환으로 당시 김경희, 장성택 등 11명을 대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김정은을 부위원장에 보임

※ 북한의 1인 절대독재체제 고려시 북한군 장령 인사가 모두 상기한 정기인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나 특별 공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임의적 특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장령진급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군 인물 세대교체 가속 및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장악 자신감

- 우선 2018년 이후 대좌에서 소장 진급자가 급격히 증가, 이는 북한군내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장령들이 빠르게 퇴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1~2차례 장령 진급 명령을 내렸는데 그동안 대좌에서 장령(소장)으로 진입한 인원은 348명으로 통일부 인명록에 있는 전체 장령 1,440여명의 24% 가량이 김정은 시대에 진급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북한군 지휘체계 상의 계급 분포를 고려하여 실제 북한군 장령 숫자를 추정해 본다면, 한국군 장군 숫자 440여명(병력 1만 명당 7.5명)과 대비 시 북한군 120만 명의 장령 숫자는 약 700여명 정도(병력 1만 명당 장군 5명인 미군과 대비하면 600여명정도)로 추정되는 바, 지난 5년 간 소장(별 하나)으로 348명이 진급하였다면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절반 이상의 장령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 군 고위층에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인민군대의 노동당에 대한 절대 복종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부터 장령진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평가

○ 장령진급 명령 주체, 최고사령관에서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변경

- 북한은 그동안 최고사령관 명의로 장령 인사를 명령하였으나 2018년 4월 인사부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명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4월 장령 인사 명령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제007호’
- 북한에서 최고사령관은 원래 전시 조직으로 비상설이었는데,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정권 위기를 거치면서 김정일이 위기관리전략을 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 최고사령관이 군 최고지휘관으로 정착된 면이 있음
- 따라서 김정은 시대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에 대한 최고 지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장 명의로 변경하여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평가
- 물론 최고사령관은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평화협정과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에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수 있음

- 북한이 국방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김정은의 현단계에서 최대 관심사인 미사일 성능개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치하이자 사기진작 의도로 평가
 -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시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대단한 무기라면서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해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큰일을 해냈다.” 며 국방과학원연구사들 업적 극찬

< 4 >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 개요

-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이후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8차례(5월 4일과 9일 포함 시 10회) 단거리 발사체(미사일 + 방사포)를 발사하였고, 10월 31일, 11월 28일에 또 다시 발사, 2019년 총 12회 발사
 - 북한이 언론보도를 통해 발사체에 부여한 명칭은 각각 신형전술유도무기(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 새 무기(8월 10일, 8월 16일), 대구경조종방사탄(7월 31일, 8월 2일),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 11월 28일) 등 총 4종류
 - 한편 전문가들은 이들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M, 새 무기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대구경조종방사탄은 신형 300mm 방사포 개량형 또는 400mm 방사포, 그리고 초대형 방사탄은 직경(탄두지름) 600mm 정도의 크기로 추정
- 북한이 이와 같은 신형무기를 계속 발사하면서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라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태도를 보였음
 - 물론 북한의 표면적 이유가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인한 대남 경고의 의미라고 하지만,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미 협상력 강화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자 국제사회에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
 -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을 위해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등 국제사회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 발사체 종류 및 제원 판단

<표 II -19> 2019년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 및 제원 판단

일자	추정발사체	발사	거리	고도	속도	장소
5월4일	신형전술유도무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M)	2발	240km	60km	마하6	원산
5월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M)	2발	420km 270km	40~50km	마하6	구성
7월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M)	2발	600km	50km	마하6	원산
7월31일	대구경조종방사탄 (300mm 개량 신형방사포)	2발	250km	30km	마하6.9	원산
8월2일	대구경조종방사탄 (300mm 개량 신형방사포)	2발	220km	25km	마하6.9	영흥
8월6일	신형전술유도무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M)	2발	450km	37km	마하6.9	과일
8월10일	새 무기 (북한판 에이태킴스)	2발	400km	48km	마하6.1	함흥
8월16일	새 무기 (북한판 에이태킴스)	2발	230km	30km	마하6.1	통천
8월24일	우리 식 초대형 방사탄 (600mm? 방사포)	2발	380km	97km	마하6.5	선덕
9월10일	우리 식 초대형 방사탄 (600mm? 방사포)	2발?	330km			개천
10월31일	우리 식 초대형 방사탄 (600mm 방사포?)	2발	370km	90km		순천
11월28일	우리 식 초대형 방사탄 (600mm 방사포?)	2발	380km	97km		연포

○ 신형전술유도무기(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 4회 발사;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M)

- 한미 발표 내용

- 5월 4일과 5월 9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의 정확한 실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
- 7월 25일 발사 시 한국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포물선 모양)을 그리지 않았다.” 며, “상실고도(레이더 포착 못하는 고도) 아래에서 풀업(pull-up) 기동,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 탄도미사일” 로 판단한다고 발표
- 8월 6일 발사체에 대해 NSC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

사일로 7월 25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비슷한 비행특성 보였다.” 고 설명

- 제원 평가

- ‘신형전술유도탄’ 외형은 4회 모두 동일, 이스칸데르-M와 유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 러시아 이스칸데르-M은 완벽한 포물선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편심탄도비행 통해 회피비행 가능,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 비행, 고도조정과 경로조정 가능, 특히 최고점에서 하강 중 한차례 수평비행 후 다시 하강하여 목표지 예측과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
- 북한은 지난 5월부터 4회 발사를 통해 우선 사정거리 면에서 200여km → 400여km → 600여km → 700여km로 늘렸으며, 더욱 낮은 각도로 발사하는 저고도 타격능력과 평양 인근을 통과시키며 무기 신뢰성과 정확도 등 과시
- 한편 신형전술유도탄의 사정거리가 700km에 달하여 외교안보매체인 더 디플로매트의 선임 에디터인 앤킷 판다는 “더 남쪽에서 쏘면 미 해병대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배치된 이와쿠니(岩國) 비행장도 타격 가능하다.” 며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

<사진 II -28> 신형전술유도무기(KN-23) 시험발사 장면



자료: 『로동신문』, 2019.7.26.

○ 대규격 조종방사탄(7월 31일, 8월 2일 발사; 400mm 또는 300mm 방사포 개량형?)

- 한미 발표 내용

- 한미 군방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방사포보다 이스칸데르-M과 유사한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 “방사포로 보기엔 최대 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 는 것

- 북한의 방사포 중 가장 구경이 큰 KN-09(300mm)가 고도 40~50km에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4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
- 제원 평가
 - 한미 군당국의 단거리 미사일 판단과 달리 ‘유도장치 새로 달고 동체를 키워 사거리 대폭 연장한 300mm 개량형 또는 400mm 신형 방사포’ 가능성 불배제
 -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WS-2형과 같은 400mm 방사포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유도장치부와 꼬리 날개는 WS-2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
 - ※ 중국의 WS-2 400mm 방사포는 발사관 6개, 길이 7.1m, 탄두 중량 200kg, 최고 비행 속도 마하 5.6, 사거리는 70~350km
 - 이번 대구경방사포의 특성은
 - ① 최근 기술 발달로 방사포탄에 유도장치와 GPS 장착해 정확도 높은 ‘유도미사일급 방사포’ 일 가능성. 따라서 속도와 비행 패턴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하여 오인 가능성 제기
 - ② 북한이 개발한 300mm 방사포(KN-09)는 사정거리 200km보다 50km 긴 250km 비행, 300mm 방사포 개량형 또는 300mm 이상의 신형 방사포 가능성
 - ③ 8월 2일 발사 시 북한이 “일부 수평 및 변칙기동” 을 언급.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의 풀업(pull-up, 활강 및 상승) 기동과 유사, 그러나 이스칸데르-M이 활강에서 상승 등 급격한 기동을 하지만, 대구경 방사포는 북한 설명대로라면 급격 기동이 아닌 일부 수평 변칙 기동 추정

<사진 II -29> 대구경 조종방사탄



자료: 『로동신문』, 2019.8.3.

※ “방사포탄이 하강할 때 공기 밀도로 급격한 저항을 받으면서 탄체에 고열이 생기는데 이때 탄두부에 달린 보조날개(카나드)를 움직이면 변칙기동을 할 수 있다.” 는 주장도 제기

○ 새 무기(8월 10일, 8월 16일 발사; 북한판 에이태킴스, ATACMS?)

- 한미 발표 내용

· 8월 10일과 8월 16일 두 차례 발사한 새 무기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M(KN-23)으로 추정

- 제원 평가

·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2개 발사관 탑재,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

· 2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분석. 발사관은 한국군의 현무-2A(사거리 300km), 현무-2B(500km)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

· 그런데 미사일의 동체가 에이태킴스(ATACMS, 미국산 전술지대지미사일)와 유사, 목표물 타격 시 탄두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가 같다는 주장 제기

※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에이태킴스는 95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능력

· 한편 북한이 공개한 '새 무기' 영상은 우리 군의 에이태킴스보다 길이와 둘레가 더 크고 비행속도 역시 2배 빨랐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괴력 가능성

· 한편 8월 10일 발사와 달리 8월 16일 발사는 동일한 미사일(북한판 에이태킴스 추정)을 저고도로 발사한 것으로 다양한 발사각도 시험 추정

<사진 II -30> 새 무기 시험발사 장면



자료: 『로동신문』, 2019.8.11.

- 우리식 초대형 방사탄(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 11월 28일 발사; 구경 600mm 방사포?)
 - 한미 발표 내용
 - 8월 24일 발사는 비행특성 등 고려해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
 - 9월 10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발표, 1발은 330여km 비행하였으나 1발은 200여km 비행 후 내륙 추락한 것으로 추정
 - 주한미군, 직경 600mm로 평가하고 KN-25로 명명, 사실상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을 의미(미군은 지난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첫 발사시 신형 SRBM으로 결론, KN-23으로 명명)
 - 10월 31일 평안북도 순천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 발사, 최고고도 90km, 370km 비행
 - 11월 28일 함경북도 연포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 발사, 최고고도 97km, 380km 비행
 - 제원 평가
 - 초대형 방사포의 특징은
 - ① 직경 600mm로 추정되는 바,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방사포(300mm · KN-09)의 2배, 중국, 러시아를 능가하는 현존 최대 규모 방사포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
 - ② 비행 패턴(정점고도 97km, 비행거리 380여 km)도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
 - 지난 8월 24일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4회 발사,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로서 각각의 시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국정원 국회 보고, 2019.11.28.)
 - 국정원은 “8월 24일 발사는 추진기관 성능 시험, 9월 10일 발사는 정밀유도기능 검증, 10월 31일 발사는 연발 사격능력 시험(3분 간격 발사), 11월 28일 발사는 연발사격 간격 단축(30초)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 보고
 -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3개월 동안 4회 실시 실전배치가 임박하였다는 평가
 - 특히 초대형방사포가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킬체인 작동이 곤란하며, 방사포의 비행고도 등을 고려 시 요격이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
 - 그러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4회 실시하는 과정을 평가하면 방사포의 장점인 연속발사, 정확도 등에 있어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아 실전배치가 임박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사진 II -31>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 장면



자료: 『로동신문』, 2019.11.29.

□ 국제사회 반응

- 7월 25일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은 단거리 발사체로 의미를 축소하던 태도를 변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 전환
 -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탄도미사일로 정의한 이상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유엔안보리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국제사회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언급하며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등 양면적 태도 표출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싱가포르(정상회담) 합의의 위반이 아니다.” 라며, “유엔(제재) 위반일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 위반으로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는 태도로 일관
 -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 이라고 선언한 것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북한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나갈 것” 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고 강조

-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는 비공개회의 개최한 후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가 대표로 영국·프랑스·독일 3국 공동성명 발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

□ 의미: 의도 및 위협

○ 북한의 의도

- 지난 7월 25일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시부터 북한은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공개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고 의도를 명확히 밝혔음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면서 한미군사연습은 ‘이상한 것’, ‘자멸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 비난
 -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한국군의 F-35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 대남 경고메시지로 평가
- 그러나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과 협상,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위기조성의 부담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협상력 강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평가
- 물론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 소위 국방의 주체화라는 슬로건 하에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 개발된 신무기의 시험발사 강행 가능성도 존재
 - 2018년 초부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개발해왔던 신무기에 대한 시험발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신무기 완성이 계속 지연된 것으로 추정
 -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자위력과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
 - 즉 이들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들은 그동안 김정은이 강조해 왔던 소위 주체무기로서 소형화, 경량화, 지능화, 정밀화라는 군사력의 현대화, 첨단화 추진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
 - 미사일 개발에 있어 시험발사는 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이들 무기들의 개발이 완성됨에 따라 시험발사가 불가피
 - 특히 북한이 금년 들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모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신무기라는 점에서 그동안 개발과정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최근 북미간 협상이 정체국면에 접어들자, 틈새국면을 이용하여 무기, 장비 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위협 평가

- 북한이 지난 5월 초부터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북한판 에이태킴스 등 4종의 무기체계는 앞으로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급 KN-23은 지난 5월부터 4번 시험발사하며 다양한 실험을 실시, 실전배치 가능성이 높으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초대형방사포(KN-25), 그리고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지금까지 두 번 시험 발사한 것이어서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발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10번의 발사 가운데 8번 발사한 발사체들은 KN-23 또는 KN-23의 개량형이라며, “세부적 제원은 KN-23과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계열인데 조금씩 변형했을 수 있다.” 고 언급
 - 즉 국방부는 8월 2일 발사와 9월 10일 발사 등 2번만을 ‘단거리 발사체’로 따로 분류, 즉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를 별개의 무기라고 주장(『중앙일보』, 2019.9.16.)
- 한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한국 국방연구원 주최 국방포럼에서 “우리 방어자산 요격성능 범위 내”라고 주장
 - 특히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우리도)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강조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한 이들 무기들은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으며, 모두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선제타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길고, 유도장치와 GPS를 장착. 특정 목표를 향해 다량 발사될 경우 단거리 미사일보다 방어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전술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

< 5 > 북중 군사교류 확대

□ 개요

-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시 군사분야 공조 방안이 논의
 - 런권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중 군사교류 확대가 논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 또한 시진핑 방북 수행원 중에 이례적으로 중국군 고위 당국자 포함
 - 과거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시 외교 관련 당국자가 수행하였으나, 이번에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묘화동이 수행. 북중 간의 군사협력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군사교류 확대를 시사한 이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간 군사교류 재개
 - 지난 8월 16일 북한군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중국 마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군 고위급 교류 확대

〈사진 II -32〉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및 김수길-마오화 회담



자료: 『로동신문』, 2019.8.17.

- 북한과 중국이 1962년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있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양국 간에 서로 동맹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동맹 국가들 간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탈냉전 이후 양국관계에 대한 사실상 동맹국가가 아닌 일반국가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주장도 존재
 - 그런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군사분야 공조체계 강화를 주제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군사교류 교류 확대는 물론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관심 집중

□ 주요 내용

-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직후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북중 군사교류 확대를 공식적으로 천명
 - 런궈창 대변인은 6월 27일 브리핑에서 “북중 군사우호교류를 잘 전개하고, 북중 관계 발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 고 주장
 - 런 대변인은 이어 “군은 북중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양자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 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우의를 이어가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쓰고 싶다.” 고 설명

- 한편 2019년 6월 21일 시진핑 주석의 수행원 중에 중국군 고위 당국자가 포함 되어 있어 과거와 비교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든 군사교류 확대가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
 - 과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했을 때에는 당정치국원(양제츠)이나 대외연락부장(쑹타오), 중련부장 등 주로 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가 수행
 - 그러나 이번에 군사 분야에 고위 관료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마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이 장관급 인사로서 수행

- 한편 지난 8월 16일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수길은 중국을 방문, 중국군 고위층과 회담을 개최한 것은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협력 강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협의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
 - 북한군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8월 16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마오화와 회담, 중국 측에서 정치사업부 주임조리, 국제군사협조판공실 주임을 비롯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간부들이 참석
 - 또한 8월 17일,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수길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사 부주석과 만나 담화
 - 장 부주석은 “중국군은 북한과 함께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 이라면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북중 정상외의 중요한 공감대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
 - 이에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조중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 표명

- 지난 10월 14일 중국 마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이 평양을 방문,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회담
 - 김수길 총정치국장, “북중 친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승화 발전하고 있다.” 며 “조중 친선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 군대의 숭고한 의무” 라고 말했다
 - 마오화 주임은 “양국 수교 70주년과 중국의 6.25 참전 69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피로 맺어진 중조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 라고 화답

<사진 II -33> 마오화 중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의 방북



자료: 『로동신문』, 2019.10.15.

□ 의미

- 이와 관련 한국 정보 당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언론에 공개
 - 국가정보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과 군사 분야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을 것으로 분석

- 지난 6월 시진핑 방북 이후 북중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상당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고려 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
 - 즉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고, 소위 ‘자동개입 조항’인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즉시 개입하여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북중 동맹관계 함의
 -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1962년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지금까지 합동군사훈련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탈냉전 이후 중국의 무기 지원도 중단되었고,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과 중국의 고위층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 간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 지속

- 또한 냉전기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지원을 지속하였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중국의 대북한 군사지원은 사실상 중단
 - 한편 동맹국간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구축 위한 군사협력활동은 정기 군사훈련이나, 북중 간에 군사적 전술 전수나 합동군사훈련 등의 협력 전무
 - 오히려 중국은 최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 외국군과 연 3~4회 합동훈련 실시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는 등 중국에 부담이 되자 북중 방위조약을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사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등 북중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중관계는 극도로 악화
 - 즉 2017년 4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원

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며 상호 강하게 비난할 정도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

- 그러나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미중 무역전쟁, 한일관계 악화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물론 북한과 중국 양측이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를 강화하기 보다는 서로의 국가 이익, 정권 이익을 위한 이해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 따라서 북중 양국은 탈냉전 이후에 정치, 경제 부문의 교류와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군사관계는 거의 단절되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양국 간 군사교류를 확대하는 등 군사적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미국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기를 제공하거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중국이 군사적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거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6 > 대형 잠수함 공개 및 SLBM 시험발사

□ 개요

- 2019년 7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 건조한 대형 잠수함 시찰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 이하 SLBM)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시 집중
 - 북한은 “김정은 동지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며 … 잠수함이 각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조된데 대하여 만족 표시” 보도(『조선중앙통신』, 2019.7.23.)

<사진 II -34> 새로 건조한 북한의 대형 잠수함



자료: 『로동신문』, 2019.7.23.

- 북한이 지난 2014~2016년 SLBM 시험발사를 위해 건조하였던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은 로미오급을 개량한 2,000톤급이었지만,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이보다 훨씬 큰 3,000톤급으로 평가
 - 2016년 당시 신포급 잠수함은 SLBM을 한 발밖에 장착할 수 없고 깊은 수심에서의 작전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리고 그 당시 북한이 적어도 SLBM 3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 건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신포 잠수함기지에서 대형잠수함 건조 정보가 계속 입수되었음
- 이와 같이 신포급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원산 앞바다에서 신포급 SLBM을 기습적으로 발사
 - 북한은 SLBM을 ‘북극성-3형’ 이라고 밝혔고, 한미 정보 당국도 과거 SLBM 보다 더 크고 사정거리도 길어졌다고 분석

□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및 SLBM 개발 관련 최근 동향

-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인 3,000톤급 골프 잠수함을 모방, 2,000톤급(로미오급 잠수함 개조)의 SLBM 탑재가능한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구소련의 R-27(SS-N-6)을 역설계하여 SLBM을 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붕괴 직후 소련이 퇴역시킨 골프-II급 잠수함(3000톤급으로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디젤 잠수함)을 고철거래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2014년 10월 지상사출시험, 2016년 4월 23일 바지선을 이용한 콜드런칭(Cold Launching, 수중에서 미사일을 사출해 물 밖에서 점화) 및 30km 비행
 - 2016년 8월 24일 신포급 잠수함(2,000톤)에서 SLBM 북극성-1호를 고각발사, 500km를 성공적으로 비행하여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해상에 낙하

- 정상각도 발사 시 1,000km 비행 가능,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2,500km까지 비행이 가능 예상. 북한이 SLBM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한미정보당국은 동해 신포 해군기지에서 신형잠수함 및 SLBM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2017년 10월 18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이 북한이 SLBM을 탑재·운용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미군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디젤과 전력이 동력원으로 수중 배수량이 2,000톤을 넘고 함폭이 11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그리고 2017년 5월 30일과 7월 18일, 25일, 30일에 신포조선소에서 SLBM 콜드론치(cold-launch, 냉발사) 능력 획득을 위한 사출(발사를 위해 수중 발사관에서 수상으로 내보내는 과정) 시험을 여러 번 진행한 사실 포착
- 지난 7월 31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한다고 보고
 - 북한이 공유한 잠수함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추정
 - 잠수함의 길이는 70-80m, 기존의 고래급(신포급) 잠수함보다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한편 북한이 10월 2일 기습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북극성-3형’ 이라고 공개
 -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당일 해당 미사일이 약 910km의 최대 고도로 450km를 비행했다고 발표
 - 한편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 즉 직경은 1.4~1.65m로 추정되어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고, 길이도 2~3m 길어졌는 바, 고체연료 탑재량을 증가시켜 사거리를 늘릴 목적인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SLBM을 정상각도(30-40도)로 발사하였을 경우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전문가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존재
 - 또한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얹어놓은 것처럼 끝이 뾰족해 다탄두일 가능성 제기
 - ※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는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감
 - 그런데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여짐.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사진 II -35> 북극성-3형 SLBM 시험발사(10.2) 장면



자료: 『로동신문』, 2019.10.3.

□ 의미 및 전망

- 북한이 공개한 대형잠수함에 대해 러시아 골프-II급 잠수함(3,000톤)을 개조, SLBM 탑재용 잠수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 북한이 2016년에 개발한 신포급 잠수함은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을 개량한 2,000t급
 - 그러나 신포급은 수심 20m만 넘어도 SLBM 발사가 불가능하며, 또한 발사관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 잠수함이 적의 탐지망을 피해 SLBM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려면 수심이 50m 이상은 되어야 하며, SLBM 3발 이상 탑재하려면 잠수함의 최소 배수량이 3,000톤 이상이 되어야 함
 - 북한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포급 잠수함은 SLBM 전용이라기보다는 테스트용 잠수함으로 평가

- 한편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인 신형 SLBM ‘북극성-3형’은 북한이 공개한 대형잠수함 탑재 미사일로 추정
 -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 아직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 사용 가능 수준까지 기술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통상적으로 SLBM 시험발사는 지상 사출 시험 ⇒ 바지선에서 수중 사출 및 비행시험 ⇒ 잠수함 탑재 사출시험과 콜드런칭 ⇒ 잠수함 탑재 시험발사 및 비행시험 등의 순으로 진행
 -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및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잠수함에 탑재한 시험 발사가 필요
 - 물론 북한은 2014년 북극성-1형에 대한 지상사출 시험을 성공한 이후 2년여 만에 북극성-1형을 잠수함에 탑재하여 시험발사에 성공
 - 북한이 이미 고래급 잠수함에서 SLBM 시험발사를 성공한 경험이 있어,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북극성-3형을 완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